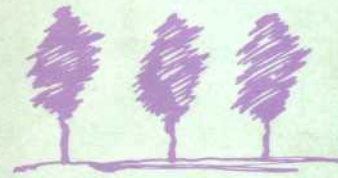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5

인권하루소식

합본 V 호
(401호~500호)



1996. 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V 호 1996. 2

인권정보자료실
R1.15

인권운동사랑방



Faint, illegible text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appearing as bleed-through or ghosting.

인권하루소식

95년 7월

(제435호 - 제454호)

삼풍백화점 참사로 숨진
분들의 명복과,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보고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이번 삼풍백화점 참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첫째, 다른 사고와 같이 이번 참사 또한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건물의 붕괴조짐이 확실히 드러난 속에서 열린 백화점 대책회의는 여전히 매출이익에 신경을 썼다. 결국 보석이나 귀중품을 대피시키고 간부들은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그 직후 붕괴참사가 일어났다.

두번째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지적되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초적인 장비도, 전문적인 인력도, 이들을 통제하는 체계도 없이 오로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존해 구조작업을 펼쳤다.

세번째 고질적인 부실시공의 문제다. 인간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백화점 건물마저 이렇게 부실시공하는 판에 다른 사람들이 살 건물은 어떻게 지었겠는가.

네번째 감독관청의 안전진단의 신뢰성의 문제다. 바로 5월의 안전진단에서도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 이번 사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도 아마 '단호하게'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떨 것이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을 잊고 있을 때 붕괴참사는 언제라

도 다시 나지 않을까.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바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다. 광노현(방송대, 법학)교수는 "이번 사건은 군부독재와 결합된 개발독재의 붕괴 소리다. 3-6공에서 있었던 공사 부실화가 종합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본다. 그 첫째가 와우아파트 붕괴사고고, 두번째가 지난해 일어난 청주 우암복합상가의 붕괴사고였다. 이번 사고도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쟁원

리를 넘어선 준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경제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간중심의 개발'을 천명한 지난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전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어떻게 사고에 대비해 귀중품은 옮길 것을 생각하면 서도 사람을 대피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가. 언

제까지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해서라도 결모양 화려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언제까지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런 인명경시 풍조는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모든 인간생활 영역에 '인간중심'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삼풍붕괴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다 빨리'라는 경쟁의 원리만을 앞세운 채 사람이 존중되지 않는 개발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의 교훈이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씨 출국 기자회견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씨가 5일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30일 출국했다. 그는 5일동안 외무부, 법무부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를 방문했다. 그는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황석영씨를 만난 것으로 아는데?
- = 황석영씨는 국가보안법이 작가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하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간접적인 압력과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기자들이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자본가에 의한 것이다.
- 한국의 인권상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내가 만난 민간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과 관련해서는 제3자개입금지를 들었다. 특히 사상전향제도는 수감중인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다. 또 40년이상 수감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생각인가?
- =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초하고 개별 사안들의 정보와 자료를 보충해서 작성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정부에 이에 관한 자료들을 요구해 놓았다. 작성된 보고서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이다.
- 제3자개입금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제3자개입금지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것이다.
- 방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가?
- = 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내가 만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방문 전보다 한국이 앞으로 민주주의 증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인권하루소식> 95년 6월분 총목차(415-435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6/1	415	1	외국인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노동자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 주한미군범죄 규탄 집회
		2/3	<인권하루소식> 95년 5월분 총목차(394-414호)
6/2	416	1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 출범/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권 사건
		2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씨 인터뷰-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6/3	417	1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서울역서 서명운동 선포식/오늘은 '무주택자의 날' 강제철거 중단 요구/수도권 교통특별법 필요 지하철행역 시민토론회/김무용씨 집행유예
		2	광주시의원 오종렬의장 징역 3년10월선고/경찰폭행 항의 분신 이형기씨 1일 운명/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회 마지막회-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인권간행물
6/7	418	1	성희롱에 명은 백의의 천사, 태백시 장성병원 간호사들에 집단 술시중 강요/바뀌지 않는 문민경찰 불법연행 후 면회도 안시켜/구속노동자 단식 16일째/무주택자 주거안정 촉구/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
		2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박홍규 교수/주간인권호름
6/8	419	1	종교계마저 등 돌린 '문민'정부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법회등 천주교, 불교등 강경대응 선언/조정국씨 단식농성 연기
		2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박홍규 교수/살인미수 저지른 '문민'경찰 안국역 시위학생 연행 때
6/9	420	1	천주교 사제들,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돌입, 매일 시국미사 가질 예정/한통노조 지지 당부 민가협, 공권력 투입 비난/삼미해고 노동자들 목숨 건 단식농성중/조정국씨 단식농성 시작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최전대통령 증언 나서라, 5.18 국민위원회등 성명 여전히 침체받는 교사들의 권리 서울교육청, 교육개혁선언 교사 증정계 방침/피어선대 총학생회가 교수들 고소, 명예훼손등으로
		2	노동인권대책위,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장성병원 간호사 원직에 복직 성희롱 병원장, 노동부 직원 직위해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망
6/10	421	1	민주운동에 헌신한 2백41명 합동추모제 가져 오늘 성균관대에서 종묘공원까지 행진도/유해환경에서 작업도중 질식사, 안성 이산화황에서, 회사는 사인은폐하려/사회주의혁명'조직 적발 경찰, 15명 구속 발표
		2	대통령도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현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운동 전개/불교계 1천80인 시국선언문 발표 천주교 김추기경 정부의 적극적 대책 요구/한통노조 쟁의 발생 신고 13일 단체교섭 가질 예정
6/13	422	1	'청소년의 대화장' 문화행사 성황리에 열려 구로시민회, '내게로 열려진 세상의 빛을 찾아' 주제로/명원직출물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체 선거 거부 '포천병원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위', 밝혀/주간인권호름
		2	지자체출마 후보자도 대통령탄핵추진운동 동참, 95년 들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분신 노동자 양봉수씨 사망 현중에 공권력 투입예상/한통 노사 임금협상 재개
6/14	423	1	천주교 2만여명 공권력 투입 항의미사 명동성당에서 두차례, 쫓겨나기도 가저/ 전기협 의장 서선원씨에 징역 1년6월 선고/인권교육 필요성 절감, AI 한국지부 워크샵/<현장스케치>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견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
		2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광주 증언 미루면 역사의 죄인 5.18 국민위 최전대통령에게 용인 촉구 서한 전달/미국인권단체도 방한 노동권등에 대해 조사
6/15	424	1	양봉수씨 '노동자장'으로, 긴장 고조 민주노총 오는 17일 전국에서 추모집회 갖기로/노동단체 실무자 고문당해,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서/한통노조 북한 사주 받아, 박홍총장 또 망언/학칙에 성희롱 방지 촉구, 서울대 총학생회 학교측에/오늘 장기수 손배소송 선고

<인권하루소식> 95년 6월분 총목차(415-435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6/16	425	1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못해/정부 참회없이 용서할 수 없다, 6.6 교권유린 범불교도 시국법회/경찰폭력 책임 처벌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에서/고 양봉수씨 추모기도회/사회안전법 소송 연기
		2	박홍, 근거없는 무책임 발언 이번엔 고발 당할 판/자율교섭만이 지하철행 운동이다, 지하철훈조 파업 결정하자마자 정부 곧바로 직권중재/현충리 본사 항의방문
6/17	426	1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 지자체 앞두고 구속자 급증/끝없는 망언, 박홍장남 물러나시오" 서강대총학생회, 단식농성/양봉수씨 유가족에 조건, 필리핀 급속노련
		2	최규하씨 증언 거부 입장 되풀이, 종교계도 서한 전달/대통령탄핵 서명 대중화, 노동인권대책위/위기도면하려는 교육계 이총리 담화에 제야 반박/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 회원 모집 한국여성의 전화
6/20	427	1	군사정권이 하던 시신탈취 뒤풀이 경찰, 폭력으로 고 양봉수씨 유골 탈취/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조작간첩 신귀영 15년만에 만기출소
		2	복지관에서 복지사 해고 광장복지관 내규위반으로/박창희교수 구원회 결성/대구 양심수후원회 발족/불교인권위 인권법당 오늘 집들이 예불/주간인권호름
6/21	428	1	조흥화학 염산가스 누출, 주민들 항의농성 회사는 무대책으로 일관/가계 인사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의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받아/영산강에 유해뿌려, 고 양봉수씨 장례식
		2	노총, ILO 총회서 국익을 핑계삼은 거짓말 제야 노동계 강력 대응키로/언론 정보도 청구 한통노조, 언론중재위에/박홍총장의 엇갈린 발언 강한 의구심 제기/현대자동차 고 양봉수씨 해고에서 장례까지
6/22	429	1	대우조선 노동자 분신사망 "사용자 각성" 유서남기고/서강대생 81%, "박홍발언 근거없다"
		2	국제인권소식-엠네스티 여성 권리신장 캠페인/전국의 사제들 단식농성 확대/엠네스티,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나주 농민의원 7월15일 개원
6/23	430	1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룰 수 있다,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굴욕적인 대외외교 비난 정대협,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촉구/대우조선 노조 작업거부 노동계, 박씨분신 성명/양봉수씨 유골 탈취 비난 불교인권단체 성명
		2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 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장기수 재판 선고 또 연기
6/24	431	1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성남시에 철거강제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일 방한
		2	"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것"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두번째 재판/민자당 반대 시위 구속 광주경찰, 전남대생 8명
6/28	432	1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대우노조 본사 텐트농성, 박삼훈씨 분신 대책 관련
		2	동성애자들 권리 선언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결성/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주간인권호름
6/29	433	1	오늘 대우조선 고 박삼훈씨 장례 '전국노동자장'으로 거제도 대우조선에서/외국인노동자 단체 수련회 7월1일부터 2박3일간/조작간첩 조사 방일 천주교인권위원회/어제 박용길 장로 방북
		2	국제인권소식-홍콩 여성노동자도 86% 성희롱 경험/국제엠네스티 중국정부에 여성인권침해 근절 촉구/한통노조 간부 4명 연행/대노련연맹교섭대표단에 폭언·폭행 목포대교 교직원들
6/30	434	1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차 개입금지' 철폐 요구/고 박삼훈씨 사 장례식 열려, 대우조선 조합원 참석 방해하기도/목포대노조 결의대회
		2/3	<자료>김중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의사·표현의 자유: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이달의 주제-사회권>

한국정부가 주거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일어난지 4일째인 3일 오전까지 사망자 1백8명, 실종 3백54명, 부상 8백94명으로 집계되었다. 삼풍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일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등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사회 총체적인 부실화의 반영'이며,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 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홍성우등, 참여연대)는 1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항의단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고가 “백화점측의 물신주의, 생명경시 풍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관리관청의 안전불감증과 복지부동의 결과로 발생했다”며 이회장등이 “사고직전의 붕괴조짐과 이에 대한 대책논의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성수대교 관련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온적인 사건처리 는 또다른 사고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시설물 건축과 안전관리에 대

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경제적 손익계산을 앞세우며 부실공사를 단행하고 인명보다는 돈을 선택한 부도명하고 탐욕스러운 기업주 양심의 붕괴다. 정부도 눈 가림식 원인규명, 부실한 사후대책, 납득할 수 없는 안전관리와 긴급구조체계, 근본적 종합대책의 부재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점검으로 더 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석범)은 성명에서,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건설 관련 노동조합은 현재 발생중인 모든 재의행위를 중단 또는 유보할 것 △정부당국은 건설업체, 건

설관련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가 총망라한 진단단을 구성, 모든 주요건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실공사 재보장구(전화 766-5394)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경실련은 3일 내부토론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국가적인 참사로 규정하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목) 오후3시 종로공원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을 가지며 토론회를 갖고,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들로 진상조사작업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시민단체들은 구조작업이 끝나는 이번 주말쯤에 구체적인 제안과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여론이 크게 높아질 것 같다.

어린이·청소년들, 2-3일에 한명꼴로 자살 한명꼴로 자살

94년 자살 1백48명, 가출 1만1천3백63건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2-3일에 한명꼴로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94년도 학생생활지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문제 등으로 자살한 어린이·청소년들은 총 1백48명이고 가출은 1만1천3백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원인으로 가정문제가 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염세비판이 35건, 신체결함이 10건, 성적불량미 8건순으로 조사됐다. 자살한 학생들의 분포도는 고교생이 90명, 중학생이 52명, 국민학생이 6명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75명으로 여학생보다 약간 많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가출 1만1천3백63건은 93년 9천2백35건보다 무려 23.1%나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쉼터 반영신(상담간사)씨는 “자살과 가출 대부분의 원인이 부모의 이혼이나 어린이구타와 같은 가정 문제이다. 특히, 가출의 주요 원인이 어린이구타로 가정내의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판 안내 ○

- 7월 4일(화) 함평기,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8단독 425호
- 7월 5일(수) 이병호(재정사건 선고),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대전교도소장, 접견금지처분취소, 오후2시, 대전고법 3호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황인성, 국보법, 오후5시,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 319호 진성미, 국보법,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425호
- 7월 6일(목) 광명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형사지법 3단독, 317호 김성복, 존속살해,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 7월 7일(금) 허관정,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318호 박순봉,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

노동운동가 산재로 사망

2일 새벽3시 청주 삼영화학 이민호(31)씨가 야간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3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9시 끝내 사망했다.

알콜로 기계를 닦던 중 인화된 불에 화상을 입은 이씨는 사고 즉시 청주 한국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했으나 화상이 심해 서울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장례식은 회사측과 산재업무 도중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3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9시 끝내 사망했다. 이씨의 빈소는 강남시립병원 영안실에 마련되어 있고 유족으로 는 올해 3월에 결혼한 부인과 생후 5일된 딸이 있다.

<현장스케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조 탄압하는 이랜드

보통 때 같으면 어수선하기만 했을 신촌 이랜드 본사 앞마당. 이날 군데군데 고개를 떨구고 의문을 품히는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사발에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의자에 앉자 있는 두 사람은 이랜드 노동조합 정석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배재석 사무장.

잠시 후 내내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고 있던 배재석 사무장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보기 좋습니까?” 조합원들을 향한 그의 인사였다. 그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부인이 울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웃었다. “울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랜드그룹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투쟁합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진로라파필리아에서 일하던 김은주, 조은주씨와 노동조합 사무장 배재석씨가 해고된 이후부터 본사건물 5층 노조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해왔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김은주, 조은주씨는 6월29일자로 복직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 기쁘지 않다. 회사가 이 두 사람을 대기발령시켜 놓아 또 무슨 궁궁이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거기다 회사는 '95단체협상을 앞두고 이런 평계 저런 평계로 협상을 미루고, 사원들에게 노조에 대한 왜곡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회사의 태도에 일침을 놓고 내부적으로는 더욱 더 가열한 투쟁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사발식을 단행한 것이다.

이랜드, 언더우드등 의류업체와 언더우드 건설, 피자몰 등 건설, 식품등 28개의 법인사업체와 25개의 사업부를 가진 이랜드그룹에는 회장이 없다.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은 회장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기까지 회사는 사원들에게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철수 없다”는 성장제일주의를 주창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 사원들도 참고 견디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긴 의사소통과 직권복지의 문제, 불공정하고 주관적인 인사승진 제도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랜드는 매일 아침 8시20분부터 20분정도 기도시간을 갖고 매주 월요일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누구라도 이 행사들에 불참하려면 인사고과의 50%를 차지하는 ‘이랜드스피릿’의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노조가 창립된지 이제 1년9개월. 오늘, 굳은 다짐으로 다시 태어난 이랜드노동조합은 “정의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다”는 진리로 3천여 직원이 주인되는 이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주/간/인/권/호/름

(6월26일-7월2일)

<2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차태병부장판사), 수습기간 중 교통사고 사망해도 정식사원 승진 감안 배상해야/3년 동안 고엽제 후유증을 앓아오던 월남참전 병사 비관 자살/한국동성애인권운동협회 창립/한국무역협회, 미 진출국내 기업 성희롱 피소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이슬람법원, 자신을 성폭행한 집주인을 살해한 발라바칸씨에게 7년 선고/유렵연합의 오스트리아등 5개 회원국, 프랑스 핵실험 비난하는 공동 항의표시

<27일>

경찰청, 장애인 운전 면허 확대하겠다고 발표/시민단체, 공명선거와 선거참여를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보건복지부, 너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결정/수배중인 유방상씨등 한국통신노조 4명 구속/천주교인권위원회, 조작간첩사건의 증인파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

<28일>

정부, 한미행정협정 개정방침 미국에게 공식 통보/국제엠네스티, 중국 여성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보고서 발표/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 교전으로 1백40여명 사망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민가협, 민주노총 주최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토론회 가져/대우조선노동조합 조합원 4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삼훈씨 장례식 가져/미국하원 불법이민근절 대책안 불법이민자들에게 긴급 의료보장을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 발표/말레이시아, 산사태로 21명 사망 23명 부상.

<30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출국기자회견 가져/한국정신대연구회, 군위안부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발표

<7월1일>

과천선 운행중단 승객 1시간 20분동안 간헐/검경합동수사본부,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해설>

1천여명이 넘는 사상자, 3백명을 넘는 실종자. 실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남긴 충격은 너무도 크다. 경교한 해체공법으로 날려버린 듯한 초호화 삼풍백화점의 처참한 잔해가 주는 전율감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다시 '인간중심의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대책도 이 관점을 명확히 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자본과 상품에 앞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사고 발생 후 며칠 밤낮을 새며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려 위험한 붕괴현장에 거침없이 뛰어든 민간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인간중심의 개발, 인권존중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지는 않을까.

삼풍참사는 방한중이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목격되었다. 그가 차마 이번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했지만, 개발독재의 비인간성, 물신주의의 마지막 경교로 겹쳐져 우리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인류가 보편적인 원리로 설정한 인간중심의 사고가 참사의 폐허에서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달의 주제-사회권>
한국정부가 주거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새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성단체연합」,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등 9개 단체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내 성폭력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 근거로 "일반적으로 남성은 종합직, 여성은 일반직에 일반적으로 배치(성차별에 따른 직군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부 형식적인 자유선택의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나 외형상 자유선택일 뿐 실질적으로는 한직군으로 국한시키는 결과적 차별 구조를 낳고 있다"고 제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업무, 노동시간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날로 늘어나는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직장내 성폭력의 법적구제와 제재근거가 되고 있으나, 이 법률에는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의 책임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상담소」는 91년부터 94년까지 접수한 상담통계에서 "전체 상담건수 4천3백51건에 대해 직장내 성폭력이 11%인 4백80건에 이르고 이중 20대 여성 피해자가 64.1%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문숙 간사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대학내에 얼마나 설치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몇몇 대학을 조사했지만 대학 관계자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조사항목에는 점자안내지도, 유도블럭,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망, 경사로 설치 여부, 휠체어사용가능 여부, 승강기·화장실·세면실·주차장등의 이용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자원봉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원을 구성하고 9월까지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꼭 가려야 할 유서대필사건 진상 강기훈 공대위 서울고검에 항고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원장 함세웅 신부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증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담당검사 류국현)이 내린 불기소처분에 불복,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함신부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전적으로 피의자인 김형영씨의 변명에만 의존, 객관적인 감정방법이나 필적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계수사를 통해 김씨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91년 발생한 이른바 '유서

대필사건'에서 김형영씨와 김기철씨와 강기훈(32)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감정해 강씨의 구속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해 온 공대위는 함신부의 이름으로 강씨가 만기출소한 지난해 10월 김씨를 허위공문서 위조 및 위증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에 대해 당시 김형영씨가 작성한 사건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감정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감정을 하였음을 인정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6월3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기사제보는
전화 715-9185로

인 / 권 / 어 / 록

△ 다음은 어디나는 자조적 절망감

이번 참사에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또냐'라는 역증과 '다음은 어디냐'는 자조적 절망이었다. (중략) 자신의 목숨보다 고객의 목숨을 앞세우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돈보다는 고객의 목숨을 앞세웠어야 했는데, 결국 그들은 사람의 탈을 썼으나,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정운영, <한겨레신문> 7월4일자 전망대 '정신나간 사회'에서-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일본의 국회의원 126명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재일한국인 정치범 7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정치범 석방 95년 전국운동실행위원회」(전국운동)의 오자와 다카시(45)씨 등 6명은 3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요망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중의원 73명, 참의원 53명이 참여했다. '수감 중인 재일한국인 7명에 대한 인도적 배려에 관한 일본 국회의원 요망서'는 "고령이나 장기간의 옥살이 때문에 재일정치범들의 건강상태가 급중하며, 이들이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석방을 실현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은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는 축하스러운 8월15일에 인도적인 배려로 이들 재일한국인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한일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일동포의 신분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 중인 정치범은 손유형(65), 이현치(43), 김태홍(37), 김장호(52), 김병주(72), 서순택(65), 이성우(73)씨 등 7명이다. 전국운동은 8.15 민족해방 50주년을 맞아 재일한국인 정치범의 석방, 일본관련 정치범의 석방, 장기수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목적으로 한 일본의 '한국정치범' 관련 단체들의 연합조직이다. 전국운동은 8.15 전까지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에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을 요청하고, 아울러 8.15에도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

을 경우 오는 11월까지 일본인 5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아 다시 석방을 요청할 예정이다.

7.4공동성명 발표 23주년 국보법 철폐 요구 불교인권위 등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4일 7.4 남북공동성명 23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미군의 철수 △자주·평화

·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입각한 통일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일본의 춘지스님(일본 교법사)등과 함께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한일 불교 공동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는 우리 민족에게 36년간의 고통을 준 일본의 반성과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통일 장애가 되는 제반 법률과 그등안 전개해온 부산 하야리아 미군부대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 1백명의 풍물패가 길놀이로 포문을 여는 해원상생구 뿐 아니라 오후 5시부터는 참가자들이 모두 횃불을 들고 하야리아 미군부대를 둘러싸는 인간띠잇기행사도 벌였다.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와 「8.15 민족공동행사 부산준비위원회」는 1일 오후2시 하야리아미군부대 후문 쪽에 위치한 부산진중학교에서 '민족통일 해원상생구'를 가졌다. 1천5백여명의 부산시민이 참가한 이 행사는 한국전쟁으로 숨진 수많은 원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해방 50주년, 분단50년을 맞아 민족화해의 정신을 드높이자는 목적과 그동안 전개해온 부산 하야리아 미군부대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 1백명의 풍물패가 길놀이로 포문을 여는 해원상생구 뿐 아니라 오후 5시부터는 참가자들이 모두 횃불을 들고 하야리아 미군부대를 둘러싸는 인간띠잇기행사도 벌였다.

구독료 지로번호는
761848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직간첩 사건의 신귀영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야

부산 민가협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의 신귀영씨의 출소환영식을 4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출소장기수와 민가협회원, 학생, 부산연합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신씨의 출소를 환영했다.

<인권하루소식>은 환영식에 참석한 신귀영씨를 만나 출소 소감을 들어보았다. 신귀영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친형인 신수영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80년 일가족 3명과 함께 구속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17일 만기출소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서성철씨는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고 신춘석씨는 89년 출소하여 경남 기장에 살고 있다.

- 출소한 소감은?
그동안 여러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출소 한 것이다. 정말 감사한다.
- 재심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변호인을 통해서 7월 중으로 재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들었다. 지난 달에는 부산지법에 가서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방영된 테이프를 감정하기도 했다.
- 15년전 구속되었을때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과 신문이나 잡지의 보도에 비추어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
- 감옥에는 아직도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 감옥 안에서 사상전향을 강요받았을텐데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에도 어긋나는 맹목한 인권침해 제도이므로 반드시 없어야 한다.

<이달의 주제-사회권>
한국정부가 주거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턱걸이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을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임금을 해소한다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임금억제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 고려대 명예교수)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 확정했다. 따라서, 월 28만8천1백50원(일급 1만2백원, 시급 1천2백75원)의 최저임금이 올 9월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상자는 약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은 도시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동총(준))가 산정한 18세 단신 여자 노동자의 최저임금 35만6천8백5원에도 약 7만원 가량 모자라는 액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 8.97%는 도시노동자 가구의 94년 가계지출 증가율인 14.3%에 비할 때 5% 이상 낮다. 따라서, 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은 94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지출 평균인 1백26만4천원의 22.8%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행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

회는 정부에게 "피고용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안전 규정과 최저임금제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한편, 민주노동(준)은 노동총, 경총 각 9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와 사업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임금억제의 보조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총장 발언 정정보도 언론중재 받아들여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가 지난달 19일 박홍총장의 북한사주발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정정보도요청이 받아들여졌다.

한국통신노조는 박홍총장의 발언이 사실 확인없이 보도되었다며 언론중재위에 연합통신, 경향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 이 가운데 중앙일보를 제외한 4개 신문사는 6월27일자 신문에 보도 정정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위는 조선일보 등 8개 신문사와 KBS 등 3개 방송사를 상대로한 청구에 대해 정정보도의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국통신노조의 파업 행위는 국가전복의 음모"라고 했으며, 박홍총장은 6월 16일 한림대에서 "한국통신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삼원사건 재심선고 연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5일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 대한 독직폭행 제심사건에 대한 선

고공판을 8월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씨는 86년 3월10일 노동자 고 김상원씨를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 감금하여 폭행,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안관련 증인 불출석 항인성씨 재판도 연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항인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공안문제연 구조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되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는 5일, 다음 재판을 8월30일 오후4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갖기로 했다. 항씨는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와 관련 구속된 바 있다.

<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 헌법>

성소난입 항의 행동 중단

6월6일 한국통신노조가 농성 중이던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청하며 거세게 반발했던 천주교와 불교계가 6월 중반을 접어들면서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은 채 대책위를 해산하거나 농성을 멈추었다.

「천주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6월20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으나 23일 단식농성을 풀었고,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지방교구들도 26일 농성을 정리했다. 또한 「66교권유린에 대한 범불교도 대책위원회」도 6월15일 시국법회를 통해 대책위를 해산했다.

「전국대학생불교운동연합」 과상인 회장은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식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간의 활동은 지자체 선거를 통해 나타난 대로 한국통신 사건에 무리수를 둔 김영삼정권의 참패등 일정 정도 성과를 보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천주교 한 관계자도 "지자체 선거나 삼동백화점 붕괴등 최근의 긴급한 사태로 인해 이후 활동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자료>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는 매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 연례 보고서로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해의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일 발표하였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한과 북한 부분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여 전문을 새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94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구금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었다. 이전에 체포된 약 2백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또한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5명이 사형되었고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영삼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의 예정된 정상회담이 7월 김주석의 사망으로 취소되었다. 김일성 사망 후 두 국가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것이 94년 후반기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사람의 수를 증가하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10월, 정부당국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할 것이라고 국제엠네스티에 알려졌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쟁의조정법내 제3차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94년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이 수정안은 일부 인권보장 조항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포와 신문에 관한 절박한 수정안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특히 6월과 9월 사이에 국가보안

법으로 체포되었다. 3월과 4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노래패 '희망새'의 회원 8명은 양심수이다. 이들은 당국에 의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으로 간주된 시에 바탕을 둔 뮤지컬을 공연하려고 했다고 시의 일부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양심수들이다. 이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또 다른 양심수는 '힘 출판사' 사장인 김연인씨이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소위 친북한 서적을 출판한 혐의로 3월에 체포되어 1년형을 선고받고 94년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6월, 이른바 구국전위사건으로 2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주요 피고인 안재구씨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으로 활동하기 위해 구국전위란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안재구씨와 다른 사람들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으며, 국제엠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인정한다. 11월, 검사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4년 후반기에 수십명의 학생들, 반체제 인사들, 작가들, 출판업자들, 학자들과 사회주의 단체의 회원들이 이른바 북한을 찬양하고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국제엠네스티는 많은 사람들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김일성

주석 사망에 대해 북한으로 조문을 보내려고 시도한 것, 친북한 출판물을 제작하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된 사회주의 단체에 가담한 것,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것 등이다. 일부는 주사파(북한의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양심수 중에는 범민련(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연합) 회원 4명이 포함되어 있다. 74세의 강희남목사와 3명의 '범민련' 회원들이 그들이 7월 7일에 북한 방문을 시도하다 판문점 근처 마을에서 체포되었다. 다른 사람으로는 김일성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통일에 대한 북한의 의견을 지지한 혐의로 8월에 체포된 이창복씨와 항인성씨이다. 11월 이창복씨는 10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한 수십명의 사람들이 이른바 그들의 견해가 북한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들은 양심수로 간주된다. 이들 중에는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좌익사상과 이른바 친북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혐의로 8월에 체포된 9명의

사민청 회원들이 포함되며,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로 9월에 기소된 '샘'이란 단체의 회원 3명도 포함된다.

1백여명 노동자가 노동쟁의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대부분이 불법파업을 했거나 전투경찰과 대치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떤 경우는 폭력을 사용했다는 혐의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한 채 구금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철도 노동자들이 결성한 비공인 교섭단체인 전기협회의 간부로, 지난 7월 서울의 불교 사찰에서 발생한 평화적인 연좌 농성과정에서 체포된 양심수 서선원씨가 포함된다.

2월, 7년형을 선고받은 양심수 김삼석씨는 상고하여 4년으로 감형되었다. 그의 여동생 김은주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AI 보고서 94 참조). 10월, 전 국가안전기획부(ANSP)의 한 정보원은, 자신이 2명 수인들의 죄를 날조하는 일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기부가 일본에 있는 친북한 단체들과 남한내 몇몇 정치적 민간단체들을 연관시키라고 자신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기부가 나중에 이들 단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데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호에 남한② 게재>

약 2백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의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달의 주제-사회권>

한국정부가 주거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남아공 만델라, 최장기수 나라에 오다

인권단체들, '장기수 석방' 촉구 성명 발표

세계적인 장기수이자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넬슨 만델라씨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되어 6일 한국에 왔다. 만델라씨는 약 27년 동안 옥살이를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흑백분리정책) 철폐를 위해 싸우다 27년 동안 옥살이를 겪고, 94년의 다인종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3백년간 지속된 백인 지배체제와 흑백분리제도를 없앤 인물이다.

하지만,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그의 방한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우려와 비판의 뜻이 담긴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만델라 대통령이 갈려 있던 긴 세월 동안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와 지원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영구, 인권협)는 "만델라씨가 산 27년보다 더 오랜 세월 갇혀 있는 장기수가 21명이며, 20년 이상 갇혀 있는 장기수도 27명에 이른다. 또한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구속된 양심수는 1천2백34명(6월 10일 현재)에 이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4백64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다"며 이들의 석방에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

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인간을 45년 동안 한 평도 안되는 독방에 가둬 두고 있는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야만적인 행위의 대상은 45년째 대전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김선명(71세)씨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갇혀 있는 양심수'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민중통일전국연합」 등은 "만델라 대통령의 방한이 한국과의 경제교류와 우호관계 정립에만 한정된다면 전세계 인권운동단체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며 "정부는 만델라 대통령의 방한을 '국민적 지도자간의 만남'이라는 선전으로만 몰아가는 자세를 버리고,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75명의 장기수의 석방과 억압의 상징,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나타내 보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담골공원에서 열린 목요일 집회에서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촉구했다.

만델라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모집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1백여명은 6일 오후 1시30분 종묘공원에서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도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풍조와 안전의식의 부재를 폭로하고 있다"며 "황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인간 우선주의, 안전 제일주의, 생명 제일주의, 환경 보호주의 등을 실천하여 부실공사와 대형참사 등의 발생가능성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경여성대회를 준비하는 민간단체가 여성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부족한 점과 정부가 서약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구체적 약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아쿠노씨는 "북경여성대회에서 발표될 선언문과 행동강령이 여성폭력과 개발권등 진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경여성대회 진보적 엠네스티 아쿠노씨

「인권운동 사랑방」(대표 서준식)은 북경여성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알아보는 자리를 국제엠네스티

의 캠페인 코디네이터인 에드나나 아쿠노(Ednada, acguno)씨와 함께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북경여성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아쿠노씨는 "북경여성대회에서 발표될 선언문과 행동강령이 여성폭력과 개발권등 진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경여성대회를 준비하는 민간단체가 여성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부족한 점과 정부가 서약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구체적 약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참여연대 인권센터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 소속 신윤환(서강대 교수), 김은영, 전계성씨는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9일 출국한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권 침해를 조사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로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자료>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여전히 감옥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회원들은 양심수로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여전히 구금상태에 있다. 1992년 4월에 체포되어 각기 3년형과 15년을 선고 받은 전경희씨와 남편 백태웅씨를 포함하여 적어도 40여명의 사노맹 회원들이 94년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수십명의 정치적 장기수들이 이전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재판 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70년대와 80년대에 체포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대개 강요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75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심수 유정식씨가 포함된다. 그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적절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은 일부 수인들의 경우, 계심을 준비하고 있지만 필요한 증거를 구하기가 여전히 불가능하다.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양심수 두 사람을 여전히 구금하고 있다. 51년에 체포된 김선명씨는 현재 69세이며, 53년에 체포된 안학섭씨는 64세이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버리겠다는 '전향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4년 5월, 이 두명의 수인들을 대면하기 위해 변호사가 이들을 접견하고자 했으나 거절 당했으며, 94년말까지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용의자들의 대부분은 경찰청과 안기부에서 조사기간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위협과 협박, 구타를 당했다는 피구금자들에게 관한 보고가 있었다. 노래페 희망세의 회원인 김태일씨는, 5월 그의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는 가운데 만약 털어놓지 않으면 에인을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구국전위 사건의 안영민씨는 10월 자신의 재판에서, "6월에 체포된 후 경찰에

게 48시간 동안 잠안재우기, 구타등을 당했으며, 자백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도 체포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6월에 체포된 정화려씨는 3일동안 조사를 받으며 안기부 요원에게 구타, 잠안재우기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0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5명의 사형집행이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있었다. 사형집행은 92년 12월 이후 처음 집행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집행을 지시했다. 94년말 현재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약 50명 가량 있는데, 이들 중에는 조사과정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혐의 일부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철우씨도 포함된다.

94년 한해동안 국제엠네스티는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은 정치적 장기수들의 사건을 재심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요구했다.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표현·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엠네스티는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모든 주장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평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3월에 발표한 '남한:신정부하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엠네스티는 1993년 2월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과, 정부가 밝히는데 실패한 과거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10월, 남한을 방문한 국제엠네스티 대표단들은 법무부와 외무부 관리들을 만났으나, 경찰과 안기부 관계자들은 만남을 거절했다.

<다음호에 북한편 게재>

○ 행사안내 ○

- 광복 50주년 기념 학술대회-해방후시기의 여성의 생활과 지위
 - 일시: 7월7일(금)-8일(토)
 - 장소: 천안 독립기념관
 - 주관: 한국여성학회
- 사월혁명연구소 39회 월례발표회
 - 일시: 7월12일(수) 오후5시
 - 장소: 사월혁명연구소 회의실 (☎888-3682)
 - 강사: 강만길 교수(고려대 역사학)
 - 주제: 해방50년의 회고와 통일전망
-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3차 경제부문
 - 일시: 7월8일(토)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최: 학단협, 한겨레신문사 (☎ 271-0491)
 - 주제발표: 국가의 경제적 역할(김대환)/토지의 소유와 이용(황한식)/기업의 소유와 경영(곽노현)
- 아시아 위크숍-21세기 사회발전과 연대의 모색
 - 일시: 7월8일(토)-9일(일)
 - 장소: 숭실대 사회봉사관 (☎820-0801)
 - 주최: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 영국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 796-8364)
 - 내용: 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의 성찰과 전망/아시아에서의 발전과 퇴보의 현재와 미래(오계식, 이미경)/나라별 상황보고

○ 동정 ○

- 광주 「이철규추모사업회」가 새 사무실로 이사 했다. 주소는 광주 동구 불로동 조선대동창회관이며 전화번호는 062-232-5809.
- 「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95년 10월에 새롭게 선보인 「격월간 여성지」의 제호를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7월25일 까지이며 당선작에는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연락처는 269-2962/4(남충지 간사)이다.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100% 순 우리편을 사용한 여름옷을 판매한다. 가격은 어린이옷 3천원, 어른옷 3천8백원이다. 판매수익금은 양심수와 장기수의 지원금으로 쓰여진다. 자세한 문의는 393-4662, 364-6076.

<이달의 주제-사회권>
한국정부가 주거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말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우리나라 어린이의 인권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21개 민간단체의 공동참여로 완성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한승헌 등, 연대회의)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근거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제네바에 있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발송했다. 이 보고서는 민간단체그룹을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소속 위원들에게 배포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1월에 열리는 사전 실무회의에서 한국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민간보고서를 활용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는 자유권 조약(92년), 사회권 조약(95년) 민간보고서에 이어 민간부본에서 세번째로 제출한 것이다. 정부보고서에 대한 본심사는 내년 1월 정기회기에 시작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우리 정부간의 성

실적인 대화에 기초하여 어린이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연대회의는 기대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등 21개 단체와 이기범 교수(숙대 교육학) 등 10명의 필진이 참석하여 만든 민간보고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한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전반적인 권리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현장활동가와 학계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상황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과 27개 권고안을 담고 있다.

연대회의의 실무간사를 맡고 있는 류은숙씨는 “정부보고서가 인권조약의 기본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조약의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치중했다면 민간보고서는 현장에서 취합한 사례에 기초해 아동인권 전반을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었다”고 밝혔다. 민간보고서에 담긴 주요 권고 요청 사항은 △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아동학대 신고제 마련 △보육시설 확충과 예산편성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 실시 △학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의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확보 △소년형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혹은 보조인의 참여 보장 등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15일 결성되어 소속 단체 연구자

아시아 발전 모델 재검토 국제워크샵, 승실대에서

올해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에 참가했던 아시아지역 민간단체들이 ‘아시아의 바람직한 발전과 시민운동의 연대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IPD), 영국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IIR)는 8-9일 승실대 사회방사관에서 ‘21세기 사회발전과 연대의 모색’의 주제로 워크샵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와 90년대의 새로운 상황이 각국 시민사회운동에 끼친 영향과 대응양식을 논의하며 ‘서울 NGO선언’이 채택된다. 또한 중국, 필리핀, 홍콩, 태국의 노동·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해 각국의 상황을 발표한다.

<자료>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양심수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백명의 정치적 수인들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알려졌으나,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 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여러 정치적 수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전히 많은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북한 전역은 애도의 분위기가 가득했으며, 남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다. 정상회담의 주요내용은 지난 6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회되었던 북미 협상에서 동결된 것이었다. 10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또 필요한 에너지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재정원조등 이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망 때까지 김일성주석이 장악하고 있던 주석직과 집권 노동당의 총서기 장직은 94년말까지 공석으로 비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의 총사령관이며 노동당 상임위원회 위원인 그의 아들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주요 지도자로서 자주 언론에 언급되었다. 수백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이 미확인 구금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금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부 정치범들과 양심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으나 대부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기술자인 김덕환씨는 61년말 혹은 62년 초에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백 km 떨어진 곳인 신양 지방에 구금되었는데, 구금의 배경은 그가 53년에서 57년까지 소련에서 유학하였고 소련인과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의 구금은 60년대 초, 소련과 북한의 관계 악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소련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66년이다. 국제엠네스티는 그가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다면 양심수라고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수십년동안 재판없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십명의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

가 있었다. 이들은 평양의 동쪽에 있는 승호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는 60년대 이후 소식이 끊긴 역사학자인 리라영씨와 이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재일동포 2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미확인 보도에 의하면 수인들이 이감된 후 승호리 수용소는 폐쇄되었다고 한다.

94년 6월, 북한당국은 60년에 북한에 재정착한 일본인 시바타 고조씨가 64년 간첩혐의로 김호남이라는 한국 명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그가 양심수라고 생각한다(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4 참조)

북한 당국은 그가 반국가 음모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수인들을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서 6년의 추가형을 선고받았으며, 석방된지 3개월 후인 90년 3월에 가족과 함께 기차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주장은 국제엠네스티가 알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시바타 고조씨는 자신이 왜 6년형을 더 선고받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으며 공식적인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북한 당국은 알려진 다른 정치적 수인들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북한 당국은 남편이 왜 해외로 정치적 망명을 한 후, 87년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씨와 두 딸이 구금되지 않았으며 수도인 평양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엠네스티는 2년 동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형제도는 일련의 정치적 범죄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실한 폭력 범죄들에 대해 선택적인 처벌방법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전 여러해 동안 사형집행이 매년 이루어졌고 일부는 공개집행되었다는 비공식 보고가 있지만, 사형집행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은 한번도 없다. 8월에 국제엠네스티에 전달된 한 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최근 몇년동안 92년 살인죄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되었다고 한다(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4 참조).

다른 알려진 사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밀수와 같은 경제범죄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이 중국의 국경지역 근접한 곳에서 94년에 약식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엠네스티는 6월, “북한: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두명의 알려진 정치적 수인들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였고 49명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9월 국제엠네스티는 북한에 관한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국제엠네스티는 시바타 고조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8월의 북한 대표자들과의 만남과 94년 동안 북한당국과의 서신교환등을 통해, 국제엠네스티는 김덕환씨를 비롯하여 여러 사건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북한측에 요청하였으나 어떤 회답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엠네스티는 93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인들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를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았다.

<끝>

◆인권간행물◆

- 토론회 자료집 -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 763-2606)
 - 주요내용: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김중서)/노동법상의 제3차 개입금지 조항과 표현의 자유(김진수)/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손석춘)/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정태준)/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대하여(정진상)/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이지 등. 85쪽.
-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학습 지침서-유네스코 한국위원회(☎561-6755)
 - 주요내용:왜 관용교육이 필요한가?/평화의 문화를 위하여-불관용의 분석과 관용의 이해/모든 나라, 모든 단계,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관용의 교실학습 등. 56쪽.
-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1995 (☎ 053-426-2533)
 - 주요내용:UN및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동/여성, 아동, 인권교육등 분야별 평가/AI가 조사한 세계각국의 인권 상황 등. (영어본, 353쪽)

<이달의 주제-사회권>

한국정부가 주거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80년 광주민중학살 책임자들에게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이드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불처벌 문제'에서 국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반보벤(Theo Van Boven, 네덜란드 림버그대학 교수,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씨는 "과거 인권침해의 청산은 희생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외에도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과 책임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인권침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과거청산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원칙은 제2차대전 이후 서구에서는 일반화되었고, 48년 집단학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노사이드 조약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도 유럽 각국은 제2차대전의 전범들을 체포, 재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에 몸담거나 그 권력 행사에 관여하여 불의와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의 몰수등 인적청산 역시 청산의 범주"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국가의 부채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청년회 회원 군복무중 기무사 연행

군복무 중이던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회원 이종삼(26), 김학규(29)씨가 지난 4일 기무사에 연행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종삼씨는 노동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중 지난 12월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군복무 중이었으며 김학규씨는 강원도 철원에서 현역복무 중이었다. 이종삼씨의 가족에 따르면 4일 이씨가 출근한 후 기무사에서 가택수색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현역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대구 지하철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초유의 '인명살상 사건'은 이제껏 우리 사회의 중심적 이념이던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참여민주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 영국 "카톨릭 국제관계연구소"가 8,9일 이틀간 가진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 워크샵"은 주목을 끌었다.

문제등의 해결을 위해서 민간 사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다원화되어 가는 세계사적인 과도기에 서 "다양한 시도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선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지도자 육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시활동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참여연대, 영국카톨릭 국제관계연구소 등이 주최한 '급속한 경제개발에 관한 워크샵'의 후속작업이기도 한 이 행사는 필리핀, 네덜란드,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각국과 한국의 사회단체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라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아시아 각국의 사회상황과 사회운동이 직면한 과제,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간의 협력·연대활동에 대하여 논의했다.

유엔 인권홍보책자

국내에서 무료 배포중

93년 열린 비엔나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인 "HUMAN RIGHTS - the new consensus"가 배포중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지난해 발행한 이 책자는 총 304쪽의 컬러판으로 국제인권전문가들이 아동, 여성, 농민 등 인권의 각 분야와 세계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 쓴 글로 The Key Issues/Politics, Society and Human Rights/ Development,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Debate Unfolds/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reaties and declarations 등 8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책자는 현재 유엔의 요청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522-7284)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주간/인권/호름

(7월3일-9일)

<3일>

제1한국인정치범 손유형씨 등 7인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 원 요망서 청와대 제출/강기훈공대위,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인노련 등 3단체, 남북인론인회담 제의/서울YMCA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안전감시단 발족/파키스탄 정부, <카라치> 등 신문-출판물 1백개 발행 허가 취소/유엔식량농업기구, 기아인구 현재 8억에서 2010년 6억5천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발표 <4일>

국제법률가위원회, 일본군위안부 국제세미나에서 '국가에 의한 조직적 성범죄'로 규정/대구지방노동청, 작업장 안전 시설 소홀 영화경급속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대한변협, '삼풍 백화점 구조 변호인단' 구성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시작/부산 민가협 조작간첩 출신자 신규영씨 출신 소 환영식/여연, 금융노동 등 9개 단체 성폭력과 간첩차별 막기 위한 범조합 신철을 국회 청원 <5일>

서울평화교육센터, '대안교육모색을 위한 워크샵' 가져/보건복지부, 129정보센터 강화 추진/중국, 세계여성대회 민간회의 베이징에서 50km떨어진 화이러우현에서 개최한다고 발표/중국노동부, 최저임금제 및 노동계약제 도입 계획 발표/국제엠네스티, '95연례인권보고서' 발표 <6일>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판사), 5·18관련 전노 전직 대통령 피의자 불기소 방침 내부 결정/남아공 대통령 벨스 만델라 방한/만델라 방한과 관련 인권협동 인권단체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양심수 석방 요구 항의성명/경실련 등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도회' 가져/인권운동사랑방, '북경여성대회 준비 워크샵' 가져 <7일>

한국여성학회, '해방전후시기의 여성의 생활과 지위 학술대회' 가져/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민간보고서' 완성, 제네바로 발송 <8일>

참여연대, 영국 국제관계연구소, 필리핀 대중민주주의연구소 등 '아시아의 바람직한 발전과 시민운동의 연대를 위한 워크샵' 개최/학단협, 한겨레 신문사, '동일국가 체제구상' 3차 심포지움 열려 <9일>

참여연대 인권센터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 인도네시아 실태 조사차 출국

<해설>

지난주에 과거 세계적인 장기수였던 남아공 대통령 만델라의 방한에 맞춰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우리나라에 만델라보다 18년이나 더 오랜 세월 수감되어 있는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들의 존재를 알리려 했다. 하지만, 남의 나라에 원조를 구하러 온 남아공의 국가원수는 실망스럽게도 '경제발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룬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떠났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다. 권력형 범죄자들을 사면복권하는 것과 아울러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양심수들을 석방이 어떻게 권력형 범죄자들의 사면복권에 대한 따가운 비난을 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그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다. 양심수는 어떤 전제나 단서없이 무조건 석방되어야 한다.

<제노사이드조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of Genocide,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

UN은 2차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나치와 같은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고, 51년 1월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 중인 50년 가입서를 기탁하여 51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조약이 발효되었다. 현재 이 조약에는 세계 1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전문과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조약 전문에서 "집단학살은 문명세계에서 최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항>

제1조 제약국은 집단학살죄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제4조 집단학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또는 사인(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제5조 제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조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학살 또는 제3조의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공판 안내

- 7월11일(화) 정윤빈,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2단독, 321호
- 7월12일(수)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김중경, 고문후유증손해소송(선고), 오전9시, 서울서부지법 2부, 112호
- 7월13일(목)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함평기(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 418호
- 7월14일(금) 신광수, 국보법, 오전11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 418호 최승기(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 421호 대전교도소, 변호인절전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 오후2시, 대전교도법 3호

<이달의 주제-사회권>

국제적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노조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한국정부가 즉각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7월은 산업재해 추방의 달-

노동·의료계 산재노동자 재활정책 촉구

94년 한해동안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8만5천948명이 부상을 입었고 2천6백 78명이 사망, 하루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95년 7월 산업재해추방의 달 공동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는 이러한 노동현장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88년 15살의 어린 나이에 직업병으로, 수은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문송면 군을 추모하여 모인 이래 매년 7월을 산업재해 추방의 달로 정하고 활동해왔다.

위원회의 관계자는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면서 참가범위나 행사 내용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한다.

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합동추모제, 공기·사진·만화·노래공모, 공청회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홍보사업을 비호하고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관련 단체들이 지역 공동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려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는 등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료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료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료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예년보다 활성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의 건강을 방치하는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올바른 건강검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재활문제를 적극 계기해 산재노동자 재활정책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미 2일 마석 모관공원묘지에서 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를 가졌고 10-15일을 추모주간으로 선포했다. 이때에 맞추어 전국의 노동조합은 만화, 대자보, 포스터등 시민을 위한 홍보물 등을 배포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재실태와 열악한 작업환경을 폭로할 생생한 현장사진과 만화를 공모하여 전시에 사용할 예정이다.

<산재추방 주요행사 2면>

5.18 불기소 방침 제야단체 저지에 나서

5-18 학살 책임자들에게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리 방침이 알려지자 관련단체들이 강한 반발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규탄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중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등은 이번 주말과 다음주에 걸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반대투쟁을 집중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오월민중항쟁연합'등 5-18관련 단체들은 14일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과 전두환·노태우·최규하 전대통령의 집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며 전국연합은 15일(토)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김영삼정권의 5-18학살자 무혐의 음모저지 및 처벌 촉구대회'를 갖기로 했다. 한총련도 검찰발표 전인 14일 전국 동시다발로 5-18 책임자 기소촉구집회와 거리선전전, 검찰청 항의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관련단체들의 움직임은 검찰의 정식발표 이후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미 12.12에 대해서 불기소 한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처사였다"라며 김영삼정권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 / 권 / 어 / 특

△ 김영삼 정부 이래 대형사고 '집행유예~무죄'

'대형사고 반복'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보자.

사고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묻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터진 수많은 대형사고에서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원칙이다. (중략) 전세계를 경악시킨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도 이원종 당시 서울시장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서울시 도로국장과 동아건설 상무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 이들 역시 6개월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사고 발생 직후 "부실공사의 책임자와 관리태만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공무원은 지휘 공무원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김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무색하게 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에서 삼풍백화점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21> 7월13일자, '부실공사 엄벌 믿지 말라' 중에서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 동두천에서 조기덕씨등

미군에게 폭행당한 시민이 치료비조차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기덕(39)씨는 지난 4일 미군에게 폭행당해 오른쪽 광대뼈가 함몰되어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조씨는 지난 4일 오후10시경 친구 김종하씨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뉴코리아 클럽 앞에서 미군들과 시비가 붙었다. 미2사단 비버릿지 로버트 윌리엄 상병이 차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이에 조씨의 친구 김씨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오히

려 윌리엄 상병등 미군 3명이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구타했다. 이를 보다 못한 조씨가 길바닥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던졌지만, 미군 3명은 조씨를 집단폭행하고 달아났다. 이들을 윌리엄 상병만 붙잡았다.

조씨는 동두천 세광정형외과의원에 입원, 치료증이나 함몰된 광대뼈 수술을 받으려던 6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돈이 없이는 조씨는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군측은 조씨에게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주었을 뿐이다.

또, 지난해 10월17일 부인과 함께 보산동 거리를 걷던 중 이영직(30)씨는 미군들이 부인을 욕보이며 해이에 항의하다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 폭행으로 이씨는 허리를 다쳤고, 허리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직 미군측으로부터 수술비는 커녕 한푼의 돈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동두천민주시민회', 강홍구씨는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치료비도 못받는 경우가 한달이면 두건 이상 접수된다"며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도 재판 결과가 좋아야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과로사 4명 현대중공업 노조 밝혀

지난 6일 현대중공업 철탑 도금공장에 근무하던 이정만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5시경 들연 사망했다. 이씨가 근무하던 도금공장은 규정상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해서는 안되는 유해작업장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평소 9시간 가량 계속 근무해왔고, 더욱이 주·야간 교대근무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호흡기 질환이 의심간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노조측에서는 이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서 이씨 외에도 백옥기(3월16일), 김원희(5월12일), 박기철(6월21일)씨 등이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지난 3월 중순 경기대학교 전 학생회 간부등 13명이 구속되었던 '자주대오' 사건도 부풀리기식 수사였음이 재판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10여명이 경기대 주사과 핵심 1백여명을 규합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시켰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구속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주대오' 조직 결성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을 인정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하게 된 것이다.

11일 현재 1심 재판이 거의 모두 끝난 상황에서 노창식(군인, 징역 1년6월)씨 등 2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또한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단지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만이 인정되었다.

용산 기무사에 조사중 군복무중 연행 2명

지난 4일 군복무중 구속된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회원 이중삼(26)씨와 김학규(29)씨가 현재 용산기무사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노동청년회의 관계자들은 "작년 12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과 이적단체구성으로 노동청년회 간부 6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기사제보는
전화 715-9185로

<산재추방의 달> 주요행사 안내

□ 산재노동자 합동추모주간: 7월10일-15일

□ 선전주간: 7월10일-15일
-가두캠페인과 대국민홍보전

□ 공청회

<노동자건강진단제도의 운영실태와 노동조합의 참여>

· 일시: 14일 오후7시
· 장소: 종로성당
· 주관: 전국산재추방단체연대회의

□ 공청회

<산업재해노동자의 직업재활과 사회보장>

· 일시: 19일 오후6시
· 장소: 종로성당
· 주관: 전국장애인협회, 산재추방대책회의

□ 토론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건강>

· 일시: 20일 오후 6시
· 장소: 종로성당
· 주관: 산재추방대책회의

□ 건강검진 실무교육

· 일시: 27일 오후7시30분
· 장소: 노동자를 위한 연대교육관
· 대상: 부산·양산지역 노조 간부
· 주최: 건강사회연구회, 새날치과, 푸른치과 및 노동자를 위한 연대, 부산양산노총, 산재예방회

△ 행사문의: 노동과 건강연구회(☎ 866-9175)

전노협 산업안전보건국(☎ 765-5851)

<이달의 주제-사회권>

국제적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노조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한국정부가 즉각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종>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대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제2부는 김종경(44, 경기도 수원시 거주)씨가 국가와 서대문경찰서 김상구(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등 4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선고에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이 인정되며 국가는 김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의사실을 공포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가 제기한 고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3년 7월4일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서대문경

찰서, 북아현파출소등지로 끌려다니며 11일 동안 세차레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양손목에 수갑이 채인 채 물고문등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93년 10월 상해진단 결과 양 손목에 신경손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후 김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고, 정신적인 후유증 증세를 보여 왔는데 갈수록 심해진다고 김씨의 부인 오윤자씨는 전했다. 변론을 맡은 신장수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의 고문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신체감정을 받으려 했으나, 김씨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고문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재미동포 김해운씨가 자신의 꿈속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나타나 점술가에게 꿈을 풀어본 결과 '김종경씨가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제보를 해온 데서 시작된다. 이 제보를 받은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이 연고가 없는 수원까지 내려가 김씨를 연행하였고, 이를 언론들이 화성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내막이 알려진 뒤 경찰이 실적에 눈이 어두워 벌인 대표적인 심증수사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담당서인 화성경찰서와 검찰은 수사결과 김씨가 무죄라는 결론내렸고, 김씨는 지난 93년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불고지죄로 4월26일 긴급구속된 박창희 교수(한국외국어대, 62)의 재판이 1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서재현 재판장) 심리 2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은 5일 있었던 재판에 이어 진행되었다. 모두진술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 가입과 김일성 추도문등은 안기부의 고문과 협박에 의해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

한 "4월26일 안기부로 연행된 이후 수사를 받는 동안 잠안제우기, 술먹이기, 책으로 머리때리기, 꼬집기 등 고문을 당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이기범 검사에게 강압적인 수사분위기에서 폭행, 욕설등을 당했다"고 말했다.

검사심리에서 박교수는 "김일성의 추도문과 김정일의 생일축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서태수(안기부 발표 제일북한공작원)씨에게 정기적으로 납한 운동세액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7월6일 박교수의 가족들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박교수를 구타한 이기범 검사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에 따르면 5월16일 이검사는 포승줄과 수갑으로 박교수를 결박한 후 맨발로 20차례 이상 구타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가족들은 안기부와 경찰의 수사발표 상대로 정정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요구,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다음 재판은 8월9일 오후 3시이다.

격월간지 제호 공모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 전화'에서는 10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격월간 여성지'의 제호를 공모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7월25일까지이며 당선작에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연락처는 269-2962/4 (남충지 간사).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 회원 6명이 12일 새벽2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경기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된 사람은 박덕규(33, 여주지부 사무장), 이영철(31, 안산지부 사무장), 김병태(31, 안산지부 회원), 신우현(30, 회원), 김정식(26, 회원), 장계성(32, 회원)씨이다. 이들은 모두 자택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책, 디스켓등을 압수당했다. 또한 같은 시각 경찰은 여주지부와 안산지부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와 디스켓, 노동관련 책 30여권을 증거로 압수했다. 이 밖에 이상표(33, 본부

조직국장)씨도 12일 아침10시 경기도경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저녁 민정련 회원과 가족들은 이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경 앞에서 면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내일 오후4시까지 면회를 시켜줄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한편 민정련에 따르면 9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구속된 민정련 회원은 60명이며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들 중 현재 15명이 구금 또는 구속중이며 나머지는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국방부가 지난 6월1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96년 국방예산이 12.5%로 증액된 사실이 밝혀져 국방비삭감 청와대에 보고되기까지 거의 국방부의 입장이 큰 변화없이 관철되어 왔다"며 "방위비 삭감이 있어서 국가의 모든 예산을 결정하는 재정경제원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건의서의 제출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 국방비의 증액편성보다도 현재 6.3%의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연대모임은 14일까지 이 취지에 동의하는 평화통일, 사회복지, 사회시민 단체를 모으고 있다. 국방부 예산안은 현재 검토, 조정중이며 당정회의, 청와대 보고를 거쳐 10월 국회심의의를 받게 된다. 연대회의는 "일반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되기까지 거의 국방부의 입장이 큰 변화없이 관철되어 왔다"며 "방위비 삭감이 있어서 국가의 모든 예산을 결정하는 재정경제원의 판단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건의서의 제출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 국방비의 증액편성보다도 현재 6.3%의 적은 예산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짜여져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연대모임은 14일까지 이 취지에 동의하는 평화통일, 사회복지, 사회시민 단체를 모으고 있다. 국방부 예산안은 현재 검토, 조정중이며 당정회의, 청와대 보고를 거쳐 10월 국회심의의를 받게 된다. 연대회의는 "일반적으로

한편 연대모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세계 70위이며 주요복지제도의 시행상태는 세계 122위 수준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복지예산의 현실은 '94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0.1%, 탁아소 수혜아동 19.2%, 공공임대 주택을 2.4%, 국민학교 급식을 38%, 장애자 아동 중 특수교육혜택율이 13.8% 등으로 사회적 약자층의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의서 제출에 함께 할 단체는 14일까지 전화 275-4860으로 연락하면 된다.

인권교육 2박3일간 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는 오는 15일부터 2박3일간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대회'를 갖는다. 오는 8월의 국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1년간의 엠네스티의 활동과 변화사항,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엠네스티 회원이 아니어도 인권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5일에는 엠네스티 소개에 이어 박원순 변호사가 '한국인권운동의 비전'을,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연합'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제로 강연한다. 16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노태훈씨가 '한국NGO론'을 강의하는 것을 비롯하여 엠네스티의 수입사항의 변화, 국제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할 방침인 '자국문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 등이 이어진다. 17일에는 필리핀의 비사법적 처형과 수단의 인권상황을 다룬 비디오를 상

영하며, 한국지부의 조직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한국지부(전화 053-426-2533), 회비: 학생 2만원, 일반 2만5천원.

한통노조 철야농성 주말 지부별 집회

'한국통신 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은 12일부터 전국의 지부 집행위원 이상 간부 4천9백여명이 밤샘농성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는 회사측과 10차례에 걸쳐 가진 단체교섭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14일부터 대국민 거리홍보투쟁을 벌이고, 15일에는 지방본부별로 '총력투쟁 결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노조는 6월 말부터 시작한 '한국통신 민영화와 통신개방을 반대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서명지를 모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통신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현재 노조측이 기본급 8만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공사측은 총액기준 5.7% 인상을 제시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간부 고소고발 현대정공 노조

울산 현대정공 노조가 회사 유철전 사장등 임직원 24명과 노조대의원 김갑를 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했다. 노조는 "유사장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회사측 임금안의 총회 방침인 '자국문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 등이 이어진다. 17일에는 필리핀의 비사법적 처형과 수단의 인권상황을 다룬 비디오를 상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료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료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료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이달의 주제-사회권>

국제적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노조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한국정부가 즉각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장기수 병마에 시달린다

민가협, 목요집회서 양심수 건강실태 보고

대전·안동교도소등에서 복역중인 장기수들이 오랜 감옥생활로 인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아래 기사 참조). 민가협은 13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60여명의 시민·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6번째 목요집회를 가졌다. 이날은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양심수'라는 주제로 최근 출소한 양심수가 나와 감옥에서 보고 느낀 장기수의 실태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성두현씨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장기수 이성우(72, 12년째 수감중)

씨가 독방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성씨는 "교도소 당국은 얼마전부터 이씨에게 외부 치료를 받도록 허용해 주었으나 이씨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심장병 외에도 척추와 오른쪽 다리에 이상이 있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는 "70세가 넘어 거동이 불편한 분을 가두어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인 은수미(사노맹, 3년째 수감중)씨는 수사과정에서

가슴을 심하게 맞는 고문으로 협심증, 관절염을 앓고 있다. 더우기 교도소내 열악한 환경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가족들은 전하고 있다. 은씨는 지난 5월 말 배에 생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병원측은 은씨에게 3주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으나 교도소측은 의견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주일만에 퇴원시켜 버렸다. 현재 은씨의 가족

들은 은씨가 창문도 없는 독방에 수감중이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정밀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교도소측은 "창문을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은씨의 병은 신경성이므로 정밀진단이 필요없다"고 거절하고 있다. 민가협은 "현재 수감중인 장기수들이 거의 대부분 심한 병을 앓고 있으나 교도소당국은 치료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장기수에게 기본적인 치료를 보장하고, 이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회사,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 자행 현대정공 노조원들 상경 홍보전 펼쳐

울산 현대정공 노조 상집간부, 운영위원, 조합원 120여명은 13일 서울로 올라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항의활동을 하고 울산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오전에 계동 현대그룹 본사 항의방문을 하였고, 오후에는 국회 노동위원회 방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임금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회사측은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노골적인 교섭지연과 노조에 대한 비방 및 분열공작을 일삼고, 협상보다는 협박, 공갈로 노조를 자극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6월23일,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을 감금·폭행했다. 또한 7월4일에는 노조대의원의 조합원 서명을 받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폭력배들 동원해 폭력태러를 가하였다. 이 사건으로 조합원들의 귀고막이 터지고 얼굴과 목, 허리등을 심하게 다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현대정공 노조는 경의발생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회사측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조업을 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회사측 임원 2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고발했다(<인권하루소식> 7월13일자 참조).

대전교도소 장기수들의 건강실태

현재 대전교도소에는 18명의 비전향장기수가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와 고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 중에서 몇 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본다. 김인수(39년째 수감중)씨는 고문과 열악한 교도소 환경으로 중풍을 앓고 난 뒤, 혼자서 주전자의 물을 따라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수전증과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움직이기 매우 힘든 상태이다. 김익진(29년째 수감중)씨는 오래 전부터 신장결석을 앓고 있어 허리ache를 꼬집거나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며, 검거 당시의 총상에 의해 왼쪽 다리마저 심하게 절고 있어 움직이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최하중씨는 고혈압과 만성맹장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교도소의 무성의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용각씨는 고문으로 치아가 전혀 없어져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잇몸에 잘 맞지 않아 밤 서너수저를 한시간 가량 우물거려며 먹고 있다. 안학섭(43년째 수감중)씨는 왼쪽 눈 시력을 잃었고, 협압이 매우 높으며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심한 위장병에 걸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아기공 노조, 고공 취수탑 농성

창원공단내 기아기공 노조위원장 김현주(38)씨와 반월지부 지부장 임상덕(32)씨는 12일 오후1시부터 기아기공 본공장 내에 있는 18m 취수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해고자들과 조합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무차별 부당징계 철회, △13명 해고자 원직복직,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 면담, △희사측의 성실한 단협 자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지역은 요즘 30도를 웃도는 데다 취수탑이 첩판으로 되어 있어 매우 열이 많이 나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물 외에 아무 것도 먹지 않아 매우 힘든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기공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4월26일 1차 교섭을 요청한 지금까지 회사에 성실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회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아직 한번도 교섭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회사는 해고자들이 회사와 정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13명 전원을 고소했으며, 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순하씨등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있다. 해고자들은 현재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김윤규, 김수환씨등 2명이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조병로씨등 5명은 23일째 식사수를 몸에 감고 농성 중이다. 한편, 노조는 기아기공 회사측이 지난 92년 "경영이 정상화되면 해고자들을 꼭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국, 고문 계속되고 있다

ACPP 박창희교수 고문사례 지적
"ACPP"(Asian Center for Progress of Peoples)는 '국가보안법하의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박창희 교수에 대한 긴급호소문(Hotline-Asia)을 전세계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보내고 있다.

긴급호소문에서 "박교수는 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 잠 안재우기, 구타, 술먹이기 등 고문을 당해 북한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허위자백을 할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지난 1월5일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으나 피의자들은 아직도 자백을 강요받는 등 계속적으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호소문은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어 △박교수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 △국가보안법 개정을 촉구 하고 나섰다.

참고인 조사 출두 가톨릭노사목 사무국장 보안수사대에 연행

13일 오후2시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 응하기 위해 출두한 사람이 연행되었다. 「가톨릭전국노동사목협의회」 사무국장 최열례(33)씨가 광주 검찰청에서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어 현재 조사 중이다. 최씨는 얼마전 광주 검찰청에서 지난 6월에 구속된 광주 노동사목 회원 김용진씨의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두하라는 진술요구서를 받고 이날 광주로 내려갔다가 연행되었다. 현재 최씨의 연행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삼풍붕괴사고 축소수사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전지구장장과 서울시, 건설부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축소수사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남호 현구청장 역시 "삼풍백화점의 증축공사와 매장용도 변경 승인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한 당사자"라며 "삼풍참사의 책임자인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는 것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검경이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행사안내 ○

-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토론회
 - 일시:7월14일(금) 오후2시-6시
 - 장소: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 주제:민족의 평화통일의 모색과 대안
 - 주최:8.15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 745-5872)
- 환영만찬-민족화해와 단결의 밤
 - 일시:7월14일(금) 오후7시-10시
 - 장소: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 주최:8.15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 745-5872)
- 민족의 평화통일을위한국제회의
 - 일시:7월15일(토) 오전9시-11시
 - 장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주최:8.15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 (☎ 745-5872)
- 제3세계 민족민주운동의 현황과 과제
 - 일시:7월15일(토) 오후4시30분
 - 장소:기독교회관 2층
 -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747-4364)
- 강좌-독일외국인법과 정책
 - 일시:7월14일(금) 오후4시
 - 장소:영등포 민주노동자연합 사무실
 - 강사:유정숙(독일 루트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
 - 주최:한국민주노동자연합 (☎844-8896)
- 토론회-95 지자체 4대선거, 진보진영에 무엇을 남겼는가
 - 일시:7월15일(토) 오후 3시30분
 - 장소:종로성당 3층 · 참가비:5천원
 - 주최:진보민주청년단체협의회 (☎ 822-5817)
-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 일시:7월20일(목) 오전10시-오후4시
 - 장소: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층 소회의실
 - 주최:한국여성의 전화(☎ 269-2962)
 - 회비:5천원
-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 일시:7월20일 오후6시
 - 장소: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 주최:민가협, KNCC 인권위, 국가보안법 대책위(☎ 747-4364)
- 토론회-노동조합운동,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 일시:7월22일(토) 오후6시
 - 장소:종로성당 3층 · 참가비:5천원
 - 주최:진보민주청년단체협의회 (☎ 822-5817)

<이달의 주제-사회권>

국제적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노조결사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한국정부가 즉각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해고자 복직 새로운 노사관계 출발점

제야 노동계, 노사 자율적 교섭 의한 복직 촉구

최근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이 서울지하철 해고노동자의 노사자율 원칙에 의한 복직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제야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정부측의 입장을 보면, 진남 노동부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도 노동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12일 30대 그룹 인사와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해고노동자 문제는 장기적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결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해고 노동자들은 즉각적인 항의집회로 강력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준)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길, 전혜투), 14일 오후 4시 마포 경총 앞에서 40여명이 모여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영구 민주노총(준) 집행위원장, 양운모 서울지하철해고자협의회 의장, 이영진 전혜투 집행위원장 등 3명은 경총의 우종관 상

무이사등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전혜투는 "노동부가 노동쟁의조정법 2조에도 명기되어 있는 해고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사문제를 파행적 대립구도로 몰아가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와 경총에 대해 해고노동자 복직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순수한 요구를 왜곡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경총을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고노동자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진남 노동부장관의 발언은 지난 7월초 울산지법이 해고자 문제를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수 변호사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정부와 회사의 노조활동 탄압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을 원상회복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안이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노사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와 경총 입장에 반대하는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총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의 복직불가과 관련해 볼 때, 올해 개별기업 단체교섭에서의 복직합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방침에 대해 노동부가 제동을 거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지적대로 올해 단체협상에서 상당부분 복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올해 단체협상 과정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자 복직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해고자 복직이 공식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경영자측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4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정보는 아시아에서"

홍콩 인권자료센터 다가, 인권운동사랑방 방문

"공동의 시스템을 만들어 누구나 원하는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는 정보와 자료를 나누는데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다가」(DAGA: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sia)의 조사연구원 라카시미 카란 다니엘씨는 13일 「인권운동 사랑방」 자료실 관련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시아지역에 있는 많은 민간단체들은 도서관 수준의 자료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분화되거나 체계화 혹은 전문화되지 않아 정보가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아시아 지역 민간단체는 영국의 국제엠네스티와 뉴욕의 아시아위지에서 아시아 지역의 정보를 얻고 있지만 아시아지역의 정보는 아시아 지역에서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민간단체간의 정보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어느 단체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적인 자료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다가는 올해 11월 방콕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가는 73년 일본에서 첫 사무실을 연 후 83년 홍콩으로 이전해 주로 한국과 필리핀의 정치문제에 초점을 두며 활동해 오다가 90년 들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노동자, 토착민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다가는 아시아 지역 정보의 공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5.18책임자 기소 요구

광주 5월단체·학생 상경

5.18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의 5월단체 회원들과 남충련 학생들이 14일 버스로 대거 상경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5.18 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년) 소속 회원들 3백여명은 이날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5.18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5.18 당시 공수부대가 발표한 총탄에 의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발표를 명령한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며 "책임자 전원에 대한 기소처분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여 했으나, 검찰측이 접수를 거부했다.

민정련 7명 구속

12일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 안산, 용인, 여주지부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이어 13일 안상수(33)씨가 경기도경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재건을 위해 '재건전선'이라는 기관지를 제작·배포해 왔으며 지난 6.27선거에는 사노맹의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한편 민정련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한 경찰의 발표가 허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교도소는 인간적인 생활 불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 행형실태 조사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관지 월간 <시민과 변호사> 7월호에 「긴급점검-행형시설 실태조사」 첫회분 '행형시설실태조사종합보고서'를 실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에서 33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서울, 성동, 부산, 영등포 구치소와 전주, 대구, 목포, 광주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58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이 설문에서는 수용시설의 환경, 하루생활, 식사, 보건위생, 운동과 집필 등 행형시설의 문제를 총 23개 조항 153개의 항목으로 구체화시켰다. 또, 변호사들이 직접 교도소등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수감자의 대부분이 혼거시설에 수용되어 있는데, 미결 수용자의 경우 2.5명 기준으로 7-8명, 기결의 경우 5-6명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17-18명까지 수용되어 생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수감자들은 불을 켜고 자는 것에 대해 대부분 수면에 방해된다고 응답했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의 미비로 춥다고 대답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실태조사작업으로 행형시설의 참모습을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는 조사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각종 통계와 자료의 공개, 그리고 수용시설의 제한없는 참관 등이 필요하다"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글은 두번에 나누어 연재되는데 8월호에는 '천안개방교도소 의 5개시설참관보고서', '서울구치소실태조사보고서', '대전교도소의 실태'를 다룬다.

◆인권간행물◆

□ 박창희 교수 글, 기사 모음집-역사와 함께 민족과 더불어
· 주요내용: '국민학교명칭 개정' 활동자료/제일동포 인권 관련 자료 등. 361쪽.

□ 『공등선』 78월호(☎ 322-1774)
· 주요내용: 해방 50년, 분단 50년-전후 50년에 즈음한 일본 신문들의 논조(서동만)/확충되고 심화시켜야 할 '기본적 인권'(김진균)/성소의 해체와 권력의 오만(문부식) 등. 176쪽. 값 4천원.

□ 자료집 『평화협정』-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 당신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휴전협정, 무엇이 문제입니까?/평화협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통일관련 노동자 여론조사 결과 등. 36쪽. 값 1천5백원.

□ 자료집 『국가보안법』-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투쟁을 시작하며/북한이야기/대통령 재조기/인권의 사각지대/옛장수 마음대로-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국가보안법 길들이기/문민시대의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의 날이 다가온다 등. 값 3천5백원.

□ 석사학위논문-동성애에 대한 사회사업가들의 태도연구
· 연구자: 송실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이봉재
· 주요내용: 동성애의 역사/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사업서비스/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등. 90쪽.

□ 통일외길-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762-1371)
·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뒤에 있는 특별보안법 등. 63쪽.

□ 한울노동법강좌 10호-기업 인사이드의 정당성 판단-한울노동문제연구소(☎ 593-6501)
· 주요내용: 주요사례모음-인력부족 따른 과로발병 회사에 책임있다, 전폐중이 다른병 약화시켰으면 산재, 정규업무 아니어도 업무 관련 있으면 산재/노동법교실-기업의 인사이드 등. 68쪽. 값 2천원.

□ 격월간 『인권』 6월호-KNCC인권위(☎ 764-0203)
· 주요내용: 5.18광주항쟁 15주년을 맞이하여/포르투갈, 동티모르 국제의원회의를 다녀와서/문민정부의 학생운동 탄압/인권상황일지/장애인 정강용씨 법정투쟁 승소 등. 60쪽.

□ 산재노동자소식-산업해노동자협의회 등
(☎ 868-2379)
· 주요내용: 광주, 전남의 산재환자의 노동현실을 바라보며/컴퓨터 작업과 직업병-경전완 장애/산재상식-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등. 52쪽.

□ 21세기 나라의 길-나라정책연구원(☎ 584-8664)
· 주요내용: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 북·일의 역할

□ 『테를』-여성의 전화(☎ 269-2962)
· 주요내용: 가정폭력방지법의 쟁점과 전망/미국의 가정폭력특별법 입법과정/손 못대는 미군범죄, '한미행협' 개정으로 대처해야 등. 15쪽.

<이달의 주제-사회권>

국제적인 기준과 일치하도록 노조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한국정부가 즉각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재권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검찰 5.18 책임자 공소포기에 항의 거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의 5.18 광주 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항의, 19일 오후 2시 서소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과 교문, 지

도위원 30여명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연합은 “검찰이 명백한 내란과 학살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정치적 면죄부를 발행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무기한 농성은 “5.18 학살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일 뿐”이며 “학살책임자들을 법정에서 세울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검찰에 항고를 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선전전, 광주 상경농성단과 연대한 청와대·검찰청 항의 방문, 검찰결정 무효화와 기소촉구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국회·서울시의회 방문 등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대하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5.18공대위 검찰청 항의방문 광주지역의 130여개 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5.18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5.18공대위)는 19일 서울지방검찰청을 항의방문한 뒤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5.18공대위 회원 50여명과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학생 3백여명은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에 몰려 “전두환 노태우 처벌” “광주학살 책임자 불기소 검찰의 각성”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때 이들이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오후 7시부터는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광주 학살 책임자 기소 관철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와 같이 검찰이 정권의 시너로 전락하고 만 민주주의의 말살이자 사법정의의 학살행위”라며 “김영삼 정권을 학살정권의 후계자로 규정한다”며 “정권의 시너 역할을 한 검찰의 이번 5.18 수사결과와 전면 재수사에 조속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살자를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과 정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전개할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학살자에게 국민적 심판을 내리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농성 기간 중 검찰청과 청와대를 향한 항의방문과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남충련 이틀째 격렬시위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이몽석, 남충련)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광주 시내에서 5.18 학살책임자 기소촉구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각 학교별로 집회를 가진 학생들은 오후 5시 전남대 병원에 집결하였다. 이들 1천여명의 학생들은 광주지방검찰청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였고, 경찰이 저지하자 ‘학살자 처단’, ‘학살자 비호하는 김영삼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는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남충련은 오는 22일까지를 투쟁기간으로 정하였다. 이 기간중 광주시내에서의 항의시위와 검찰청 항의방문은 매일 계속될 예정이다.

연계고용제 제침의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 중 연계고용제(도급고용제)는 “사업주와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연계고용제로 사실상 정부는 통합형 고용을 포기한 것이며 장애인들은 일반사회에서 더욱 분리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 근거로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는 사실상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으로 시설의 본래 목적인 보호고용의 의미마저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직업능력평가등을 실시해 일반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으로 보호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서적 출판 출판사 사장등 연행

한출판사의 유덕렬사장, 김천희 편집장, 김양이씨(1년6개월 전 퇴직)와 심범석

(건국대 앞 인사점 운영)씨가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참된 봄을 부르며』와 『민중의 역사』 출판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한출판사와 연행자들의 집, 인사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책과 디스켓 등 관련자료를 압수해갔다. 가족들은 18, 19일 면회를 요구하며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19일 오후 늦게야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했다.

양심수 단식농성중 안동·김천 교도소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씨가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강씨는 양심수 전일석방, 전향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85년 소위 ‘구미 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구속,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난 93년 3월 20년으로 감형되었다. 현재 그는 만 10년째 수감중이다.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중인 문정우(93년 전남대 부총학생회장), 박상춘(94년 조선대 조동위원장), 김재권(기아자동차 노동자), 이철우(조선노동당 사건)씨 등은 지난 11일부터 단식농성중이다. 이들은 교도소에

소년수에 대한 구타를 중지할 것과 소년교도소에 공안수를 수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폐 촉구 175차 수요시위 열려

제175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시위가 폭우속에서도 어김없이 7월 19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정대협은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지난 7월 18일 일본정부가 밝힌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발족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지난 6월14일 일본정부가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많은 국내·외 단체와 피해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기금발족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수요시위의 분노는 폭발되었다.

‘아시아 평화우호기금’은 의료와 복지사업을 운운하며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인 위로금 형식을 띄고 있다. 따라서, 전후 50년을 맞아 일본정부가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안을 구실로 전후문제를 전격적으로 매듭짓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추진하려는 것이 본래의 속셈이 아니냐고 정대협은 묻고 있다.

동정적인 위로금 차원의 배상은 피해국 국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하며, 일본정부가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죄하고 국제법적 배상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본과 아시아 각국과의 올바른 관계수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언론사의 취재가 있었다.

이랜드노조 사무장에 지노위, 복직 판정

지난 4월 ‘금품수수, 명예훼손,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던 ‘이랜드노동조합’ 배계석 사무장이 14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한 금품수수는 근거가 없고, 명예훼손과 폭행에 대해서도 이후 사과를 했음에도 해고한것은 회사측의 정계권 남용이라며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배사무장의 복직에 대해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재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노조는 지난 3일 ‘배계석 사무장의 복직과 토요일전근무제를 위한 사발결단식’을 갖기도 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 미리 주문하십시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가 다음주에 발행됩니다. 이번호는 94년 12월6일부터 95년5월11일까지 발행된 <인권하루소식>이 묶였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고 지료를 이용해 입금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재정상 소량만 인쇄하였기에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값: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

- 일시: 오늘 오후6시
-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종로5가)
-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대책위원회
-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과 사례보고(박원순 변호사)/최근 국가보안법 사례보고/문화공연(슬라이드, 노래, 시낭송 등)

5.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 정상용의원, 망월동에서 청와대까지

국회의원이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면서 광주 망월동묘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벌인다. 신당 추진위 소속 정상용 의원은 24일 오전 7시30분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오는 8월9일까지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국토종단 행진에 들어갔다. 정상용의원은 행진 도중 전북대(27일), 충남대(31일) 등지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8월7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와 청와대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정의원의 도보행진에는 5.18 관련단체 회원 등 1백여명이 동참한다. 이날 망월동 묘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원은

"공소시효와는 관계없이 학살자들을 사법처리할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 참여연대 지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오후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검찰의 내린 5.18 수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리를 가

졌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교수는 '1980년 정치군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한씨는 "검찰이 범죄사실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범인을 놓아준 결과가 되었다"며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하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5.18광주민주항쟁연합'은 25일 오전1시 국회에 '특별검사의 임명안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위한 청원서와 법안을 제출한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 판매중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가 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94년 12월6일부터 95년5월11일까지 발행된 <인권하루소식>이 묶였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고 지료를 이용해 입금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재정상 소량만 인쇄하였기에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값: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국민의 힘으로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87년 6월항쟁을 기억하십니까?
87년 4월13일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여망을 누르고 장기집권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한마음으로 항의성명 발표, 농성, 삭발단식 등 모든 수단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결국 6월항쟁으로 결집되어 전두환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일거에 부수 버렸습니다.
8년 후 광주민중을 학살한 자들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 학살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광주학살자의 처벌이 단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희생자만의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자의 심판이 이뤄지지 않고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학살자를 기소하여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세웁시다.

<이렇게 합시다>

□ 각 단체는 계속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청 항의방문을 합시다.

□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에게 항의편지를 씁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우 120-11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95-4
노태우 전 대통령 (우 120-11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1동 108-17

□ 검찰에 항의전화합시다.

대검찰청 김도언 검찰총장 ☎ 771-2300
서울지방검찰청 1차장실 한부환 1차장 ☎ 536-5306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 ☎ 536-5302
최규하 전직대통령 ☎ 324-2054

□ 명동성당 5.18 공대위 농성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함께 합시다.

오는 29일(토) 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전국연합과 5월 단체 주최로 열리는 '5.18 학살 책임자 불기소 규탄대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이달의 주제-사회권>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권고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전 서울대 유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유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앞서 박용상 부장판사는 "성희롱 문제가 법적 심판대에 서기는 처음"이라며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조교는 수차례에 이르는 접촉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으며, 우씨가 당한 성적 괴롭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성적 괴롭힘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적 괴롭힘이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심하고 철저한 행위여야 하고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아무개 조교에게 신고수가 어깨, 손, 팔을 접촉하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의 접촉사실을 인정하지만 "업무상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빚어진 수차례 가벼운 신체접촉 행위는 노골적인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농담 또는 호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우조교의 근무환경이 성적인 모델감을 가져오고 굴욕적인 근무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대총장과 국가에 대한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1년 더 근무하고 싶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강아무개씨의 증언은 인정하면서도 전임 조교 안아무개씨의 증언은 배척했다.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5.18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24일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25일 항고를 해 다시 5.18 광주학살 책임자처벌의 칼자루가 검찰로 넘어갔다. '5.18 광주민주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씨와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김상근씨 등 5.18 사건 고소·고발인 6백14명은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등 광주민중항쟁 관련자 3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결정 근거로 삼은 검찰사건사무규칙중 '재판권 없음'은 외교관 등 치외법권에 해당되는 사 람들을 위한 것으로 5.18사 건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남용이며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은 불법적 행위라도 목적인 달성하면 어떠한 처벌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국법 질서와 법 집행 체계 역시 이렇게 전도된 사회 가치관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뒷받침해 줌으로써 장차 법치주의 실현이나 정의의 구현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28일에는 광주시민 1천여명이 상경투쟁을 벌일 건 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 판매중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가 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94년 12월6일부터 95년5월11일까지 발행된 <인권하루소식>이 묶였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고 지료를 이용해 입금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재정상 소량만 인쇄하였기에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값: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인 / 권 / 어 / 록

△ "과거에 대해 눈을 감은 자는 현재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다"
-85년 독일 바이츠제키 대통령 발언중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영애등)는 26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성희롱 원심을 파기한 판결에 대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 공대위는 25일 박용상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우조교가 신교수의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적이 없고 기기조직에 익숙해지자 교육의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신교수의 행위는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 사무보조원의 지위에 있는 우조교는 신교수의 노골적인 성적 접근행위를 알고 난 이후에도 이를 즉시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성희롱은 작업장에서 권력관계에 있는 고용인과 피고용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우조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신교수의 성적 접근행위가 줄어든 것과 우조교의 기기조직이 익숙해진 것과는 무관하다. 기기조직은 우조교와 같이 매뉴얼을 숙지한 상태에서 10일 정도의 실습으로 가능하다. 신교수의 행위가 중지된 것은 우조교가 92년 10월경 명시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 법원은 우조교가 제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처음에

재임용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성적 괴롭힘의 주장은 뒤늦게 책임을 주장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

= 우조교는 성적 괴롭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기 훨씬 전인 93년 7월8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해왔다.

- 전임조교들이 신교수에게 당한 성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 재판부는 신교수가 우조교에게 행한 동일하고 유사한 성적 접촉행위가 과거에도 계속 반복한 것을 무시한 것이다.

- 이번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여성주의’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한 점에 대해

= 남성편의주의가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평균인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오랜 판례의 변천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피해 당사자의 주관이 배제된 평균적인 여성이 기준되어야 한다.

- 신교수의 업무간섭은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고 책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우조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해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점에 대해

= 신교수측 증인들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그동안 1년 단임으로 기기조교들이 바뀐 것은 유학이나 더 좋은 직장을 위해 퇴직하는 조교측의 사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기조교를 1년 이상의 전문적으로 결정한 것은 밝혀진 바 있다.

자료처리가 늦는 등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문제된 것은 93년 1-2월부터다. 92년 10월경 우조교가 신교수

의 산책제의를 거절한 이후부터 신교수는 자료처리를 하루에 10개로 제한하고 전

에 없던 지시를 했다. 이와 같이 볼 때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도 ‘성적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특별검사제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검찰이 18일 5.18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검사제가 재야 법조계와 사회단체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5.18 수사발표와 같은 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공 때의 대표적인 고문사건인 권인숙, 김근태씨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제기, 조영환, 김창국 변호사가 공소유지 검사로 임명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아니다.

특별검사제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에 빠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자연스럽게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계기로 8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다. 이 특별검사는 의회의 요청이나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법학자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소위 여소야대 시절 검찰의 5공비리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당시 야3당의 단일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였다. 그후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안설명만 마친 채로 90년 3당합당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현정권에 들어서도 12.12. 쿠데타 사건, 울곡비리사건,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등 연속적으로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자 특별검사제 도입이 다시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93년 11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불가능한 검찰 대신에 국회 또는 국민들의 요구로 국회가 결의한 때에 법조계 인사중에 임명하고 국회의 감독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12.12., 5.18 사건과 같이 정치권력이 깊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특별검사제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달의 주제-사회권>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권고한다. 특히 교육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이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종>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김대통령에 한국인권 개선 압력 아시아워치, 클린턴 대통령에게 요구

김영삼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의 유수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아시아’(Human Rights Watch / Asia, 아시아 워치)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국의 노동권과 인권의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 워치는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라는 한국정부의 공약을 실행해 나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군사통치를 지탱해준 억압적인 법률들을 여전히 이용하여 한국 정치 활동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워치의 워싱턴 국장인 마이크 켄드릭 제에지크씨는 “신한국”이라는 김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적인 장치들이 그대로 남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결과 “95년 6월

있었던 독립적인 노조집행부에 대한 탄압은 한국의 노동법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통령에게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변화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아직도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시켜주는 법률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4쪽에 이르는 보도자료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95년 5-6월동안 한국정부가 한국통신 노조집행부와 활동가들을 억압하기 위해 업무방해등 그릇된 법률을 사용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가 파업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기자회견문을 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례를 들면서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워치는 “김대통령은 92년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당선이후 변화

가 없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92년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이행보고서에서 특히, 국가보안법의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비판했다”며 국가보안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5.18 불기소 경위 공개 제수사 요구 정의구현사제단 성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은 27일 검찰의 5.18 수사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5.18 공소권없음 결정은 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로써 국민들에게 정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의 공

소권포기 결정의 경위 공개 △특별검사제로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도 같은 날 신도 1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5.18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갖고 5.18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 전국연합, 거리행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소속 회원 2백여명은 27일 오후4시 탑골공원에서 남북합의서 실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과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북한당국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책 공개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8월1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종로1가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료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료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 지료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알림>

저희가 세들어 사는 건물의 전기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오늘자 <인권하루소식> 발송이 늦어졌음을 사과드립니다. 빨리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발송 작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못 받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 95년 7월분 총목차(435-454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7/1	435	1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보고/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씨 출국기자회견
		2/3	<인권하루소식> 95년 6월분 총목차(415-434호)
7/2	436	1	"부실시공 이제 그만" 시민·사회단체 삼풍관계자 엄중처벌 요구/어린이·청소년등 2-3일에 한명 꼴로 자살, 94년 자살 1백48명, 가출 1만1천3백63건
		2	노동운동가 산재로 사망/ 현장스캐치 이랜드그룹, '하느님의 이름으로' 노조탄압/ 주간인권호름
7/3	437	1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 9개 단체 국회청원/ 강기훈 공대위 항고/ 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인권어록
		2	제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불교인권위 7.4공동성명 발표, 23주년 국보법 철폐 요구 / 부산항 허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등 '민족통일해원상생각' 가져/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신귀영씨 인터뷰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야"
7/7	438	1	턱걸이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 올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 한통노조 청구 인륜중재 받아들여, 박홍총장 발언 정정보도/ 김상원 사건 재심선고 연기/ 황인성씨 재판도 연기, 공안관련 증인 불출석/ 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 한 달, 성소난립 항의 행동 중단
		2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1 "김주석 사망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7/8	439	1	남아공 대통령 만델라 방한, 인권단체들 비판적 성명발표/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모집회/ '95 북경여성대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참여연대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2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2 "세계 최장기수 김성명씨 여전히 감옥에"
7/9	440	1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해설>정부·민간보고서 어떻게 심의되나/ 아시아 발전 모델 재검토, 국제워크샵
		2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수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인권간행물
7/11	441	1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5.18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제노사이드 조약/ 노동청년회원 군복무중 기무사에 연행
		2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유엔 인권홍보책자 국내에서 무료 배포중/ 주간인권호름
7/12	442	1	7월은 산재해해 추방의 달, 노동·의료계 산재노동자 재활정책 촉구/ 5.18불기소 방침, 재야단체 저지 나서/ 인권어록
		2	동두천에서 조기턱씨,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 현대중공업 노조 올해 과로사 4명 밝혀/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노동청년회 용산기무사에서 조사중/ 산재추방의 달 주요행사 안내
7/13	443	1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씨 일부 승소,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고문은 인정안해/ 박창희 교수 1심 재판, 안기부·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 한국여성의 전화 격월간지 재호공모
		2	민정연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 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2박3일간 가져/ 한국통신노조 철야농성, 주말 지부별 집회/ 현대정공 노조 회사간부 고소고발
7/14	444	1	민가협, 목요일집회서 양심수 건강실태 보고 "장기수 병마에 시달린다"/ 대전교도소 장기수들의 건강실태/ 현대정공 노조원들 회사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 홍보
		2	기아기공 노조, 고공 취수탑 농성/ ACP, 박창희 교수 고문사예 지적/ 가톨릭노동사목 사무국장, 참고인 조사차 출두 보안수사대에 연행/ 삼풍붕괴사고 축소수사 비난

<인권하루소식> 95년 7월분 총목차(435-454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7/15	445	1	제야노동계, 해고자 자율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홍콩 인권자료센터 다가, 인권운동사랑방 방문 "아시아 지역의 정보는 아시아에서"
		2	광주 5월단체, 5.18책임자 기소 요구/ 민정연 7명 구속/ 서울지방변호사회, 행정실태 조사 발표 "교도소는 생활하기 상당히 곤란"/ 인권간행물
7/17	446	1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단체·제야 항의투쟁 계획/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방한,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 제1회 청소년 열린학교 입학식 가져
		2	AI한국지부 전국교육대회 가져, 자국내 가이드라인변화 큰 관심/ <인터뷰> 나주 '농민치과의원' 한동금 원장 "농민건강의 모든 것, 책임질 터"/ 주간인권호름
7/20	447	1	5.18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돌입/ 산재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물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계고용제 제심의 요구/ 북한서적출판사 사장 연행/ 안동·김천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정대협 175차 수요시위,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촉구/ 이랜드노조 사무장 지노위에서 복직판정
7/21	448	1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가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재소 결의/ 현장스캐치,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하는 5.18 희생자들
		2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논의/ 사회안전법손배소송 심리재개/ 최홍재씨 선고공판
7/22	449	1	주말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특별법·특별검사제 도입요구/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강연회 모든형태의 여성차별 제거해야/ 민변, 전두환씨등 7명 국회위증 혐의 고발
		2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대한 헌법적 비판, 5.18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서경석 인하대 강사)
7/25	450	1	부산지법 '신귀영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5.18국민위, 검찰불기소 취소에 맞서 헌법소원
		2	자료-5.18학살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 주간인권호름
7/26	451	1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5.18광주민중항쟁연합등 5.18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인권어록
		2	참여연대등,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 청원/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일본 구원회, 이화춘씨 석방 촉구 집회/ 서울에서 한일 장애인국제대회 개최
7/27	452	1	사면복권 8.15 이후로 연기 가능성/ 부산신씨일가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부산검찰 항고/ 8.15행사위,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분단 종식 주장
		2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대대책위,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발표 요지/ <해설> 특별검사제,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7/28	453	1	아시아위치,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할 것 요구'/ 사제단, 5.18 불기소 경위 공개 제수사 요구/ 전국연합,한국·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
		2	<자료> 박용상 부장 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학생재판 원심보다 높게 선고/ 참여연대, 박용상 부장판사 해임운동별질터
7/29	454	1	5.18 불기소 김영삼정권 퇴진 주장, 2차 국민대회 명동성당까지 행진/인권협, 대표·간사단체 변경/민주노총, 청와대에 노동자 사면복권 촉구/<현장스캐치> '식발식' 끝에 터져버린 5.18 유가족의 눈물
		2/3	<인권하루소식> 95년 7월분 총목차

(호국보훈) 95년 8월 15일

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훈격
1	이정호	1925.03.15	1995.08.10	갑상선암	훈4등
2	김영희	1928.05.20	1995.08.05	심장질환	훈4등
3	박문수	1930.01.10	1995.08.12	뇌졸중	훈4등
4	최영자	1932.07.05	1995.08.08	폐렴	훈4등
5	정재민	1935.02.25	1995.08.15	심근경색	훈4등
6	윤영남	1938.09.15	1995.08.10	간암	훈4등
7	홍기철	1940.04.30	1995.08.05	뇌혈관질환	훈4등
8	김민준	1942.11.20	1995.08.12	심장질환	훈4등
9	이희영	1945.06.10	1995.08.08	폐렴	훈4등
10	정우철	1948.03.25	1995.08.15	심근경색	훈4등
11	윤영자	1950.08.15	1995.08.10	간암	훈4등
12	홍기철	1952.01.30	1995.08.05	뇌혈관질환	훈4등
13	김민준	1955.07.20	1995.08.12	심장질환	훈4등
14	이희영	1958.04.10	1995.08.08	폐렴	훈4등
15	정우철	1960.12.25	1995.08.15	심근경색	훈4등
16	윤영자	1962.05.15	1995.08.10	간암	훈4등
17	홍기철	1965.09.30	1995.08.05	뇌혈관질환	훈4등
18	김민준	1968.03.20	1995.08.12	심장질환	훈4등
19	이희영	1970.08.10	1995.08.08	폐렴	훈4등
20	정우철	1972.01.25	1995.08.15	심근경색	훈4등

인권하루소식

95년 8월

(제455호 - 제476호)

<이달의 주제-사회권>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권고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해 광주 관련단체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 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 등, 5.18 공대위)는 29일 서울고검이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남은 법적 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는 어쭙잡은 변명으로 3일만에 기각한 작태에 검찰과 김영삼 정권을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전문에서 8월에는 투쟁강도를 높여 당장 1일부터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비롯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지검의 검찰관계자 모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80년 당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이들을 파악하여 유가족의 이름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지현(44, 5.18 공대위 대변인)씨는 "검찰의 항고 기

각으로 현재의 검찰에 대한 기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오는 5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농성을 1백명 규모의 단식농성으로 전환하고, 광주에서도 단식농성단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 공대위는 8월 15일 광주 학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총력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학교 김충열 대학원장 등 1백31명은 31일 오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7월24일부터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중이다.

김의원은 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주남마을, 송암동 양민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회부 △ 특별법제

정,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가해자들의 처벌 △국회 광주특위 현장검증소위가 조사하여 양민학살 현장에서 발굴, 현재 검찰에 의뢰 중인 13구(황룡강 유역 11구, 주남마을 야산 1구, 부영산 군부대 초소부근 1구 등)의 유골 검증 결과를 조속히 밝혀줄 것 △102명의 행불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 위증을 한 전두환, 이회성 등을 비롯한 가해자 7인 즉각 조사와 준엄한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주석 추도식 참가 박용길 장로 귀환 안기부 즉각연행 조사중

지난 6월 28일 중국 북경을 거쳐서 평양에 도착, 김일성 주석 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던 박용길(「통일맞이 칠천만겨레모임」 이사장)씨가 7월31일 판문점을 거쳐 귀환, 현재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오후 4시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등의 죄목 송암동 양민학살의 책임자들을 재판회부 △ 특별법제 해 구속되었다.

사민청 의장 절도 혐의 구속

가족들, "경찰수사 편파적" 주장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의장 최인기(29)씨가 25일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31일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최씨는 지난 25일 종로 허리우드극장 앞 건널목을 지나던 중 부딪친 사람이 최씨를 소매치기로 오인하고 "잡아라"는 소리를 듣고 도망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최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최근 최씨가 정보과 형사들이 사민청 사건관련 수배자 검거를 이유로 자주 찾아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상태였다"며 "최씨가 도망친 것은 소리치는 사람을 정보과 형사로 오인했기 때문"이라며 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말만으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편파적인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행 당시 경찰은 최씨에게 "별일이 아니니 금방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는 최씨 가족들의 요구에 "사건이 왜곡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사민청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2월에 풀려났으며 그 이후부터 사민청 의장직을 맡아왔다.

주요 공판 안내

- 2일(수) 양한웅의 2명(한통노조),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 윤성문, 국보법,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 4단독 421호
- 3일(목) 박수호(한통노조) 오전10시, 업무방해등, 서울지법 형사 3단독, 317호
- 이상욱(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6부, 423호
- 4일(금) 장현일의 4명(한통노조),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5단독, 424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무시라크 와니 캐시미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캐시미르에 주둔한 인도와 파키스탄 군대를 철수시키고 캐시미르 국민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하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49년 1월 5일 유엔은 캐시미르인들이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중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할 것을 보장하자는 안건을 채택했고,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은 이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문제 해결 노력을 유엔에 기대하긴 어려웠다.

1988년 이후 최근 동향은 캐시미르인 전체가 인도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데서 나타나듯 대중적인 자유화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 1990년, 스리나가

에 머물고 있는 유엔조사감시단은 캐시미르의 인도병합에 관련된 규정을 지킨 것을 촉구하는 많은 양의 탄원서를 접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12개 관련 유엔조약을 들어 캐시미르인의 독립권을 보장했다. 이것은 45년간 이어진 독립에 대한 정당한 열망을 담은 탄원의 결과였지만, 인도당국은 시민권을 부인하고 전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목살해버렸다. 유엔조약이라는 약속에 의해 캐시미르의 독립과 자결의 권리를 추구한 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슬픈 일이다.

지금까지 인도가 캐시미르를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령했는가를 이야기

했다.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투쟁하는 이들이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는 없다. 캐시미르인들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우리는 자유의 투사일 수밖에 없다.

인도 당국의 탄압정책은 '검열'이라는 어둠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 인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당국은 자신들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방문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아시아워치등의 단체는 이러한 경제와 법정의 틈새로 뚫고 잠입하는 데 성공하여 캐시미르에 대한 인도의 정책을 목격하고 이를 호되게 비판한 바 있다.

우리 캐시미르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장되는 자치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보장한 이 권리의 수호에 대해 국제사회는 충실하지 못하다. 또한 인도 정부는 국제사회를 방관자로 머물게 함으로써 캐시미르에 대한 탄압을 눈가림해 왔다. 그래서 죄없는 캐시미르인들에게 가해진 극악무도한 만행과 그로 인한 통탄과 절규는 자유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다.

캐시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두 정부사이의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은 1천 2백만, 전 캐시미르인들의 문제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전 캐시미르인들의 하나된 몸부림을 지하세력의 책동으로 간주하려고만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캐시미르의 독립은 곧 남아시아의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캐시미르인들은 지금도 독립을 원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과 캐시미르간의 문제이어야 한다. 유엔은 캐시미르의 독립의지를 지구 전체에 불고 있는 자유화의 물결로 받아들이고 유엔조약이 인정하는 자결권

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거부를 더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끝>

교육개혁 선언 징계 전교조 비난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이수호, 전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육청이 윤환탁(청량고등학교 교사)씨등 교육개혁선언교사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10일 서울지역 교사 1백명은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서울교사 1백인선언’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4시 교육개혁위원회를 방문, 송순 사무국장을 통해 국민제안창구에 공식 접수시켰다”며,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근거로 주장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언교사들이 제안한 내용은 △교육예산의 GNP 5%확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대학입시의 개혁과 고교입시 부활반대 △교육개혁 추진기구의 구성 등이며, 이는 교육개혁위원회가 ‘5.31교육개혁안’ 발표를 통해 추진의지를 밝혔거나 95년 하반기 과제로 잡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이 명령불복종과 품위유지를 내세워 교사들을 징계하려는 것은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선언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사실상 명분이 없는 치졸한 조치”라며 교육부에 제심을 청구하는 한편 대중적 서명운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설>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

종교분쟁, 자결권을 이유로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캐시미르는 현재 인도의 북쪽에 위치한 잠무와 캐시미르주를 일컫는다. 이곳의 주민 절대다수는 이슬람교도다. 인도는 현재 힌두교가 국교이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있어 캐시미르를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도 심각한 상태다. 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힌두교도였던 캐시미르 군주가 인도에 병합하기로 결정, 민족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48년 4월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이후 파키스탄은 캐시미르 북부 산악지대의 지배권을 얻었고, 인도는 남쪽지역을 장악하였다. 인도가 차지한 곳은 이슬람교도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캐시미르 계곡과 힌두교도가 대부분인 남쪽의 잠무의 힌두타운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은 4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선을 조사했고, 50년 인도는 예외적으로 헌법에 일정 정도 캐시미르인들의 자치를 허용했으나, 계속된 법개정으로 현재는 그 의미마저 퇴색했다. 인도정부는 약속한 국민투표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캐시미르인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무장독립단체들을 결성하여 대항하고 있다.

90년 캐시미르의 독립을 요구하는 회교분리주의자들은 폭동을 일으켜 1만 7천여명이 사망했다. 그후 인도는 이 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 독립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포하여 비사법적인 처형을 하였고, 수천명에 이르는 이들이 인도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실종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히고 있다.

<이달의 주제-사회권>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권고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각계 1995인 양심수 석방 한목소리

7일부터 일주일간 캠페인 펼쳐

유엔이 정한 '관용의 해'이자 분단 50년째를 맞는 올해 김선명씨를 비롯한 장기수들과 양심수, 수배중인 민주인사들에 대한 전면적 인 석방과 수배해제, 사면복권을 위한 캠페인이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명동성당 민가협을 비롯해 민주노총(준), 천주교 인권위, 한교협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여연 등은 2일 오전 10시 서울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5년 세계최장기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언교사들이 제안한 내용은 △교육예산의 GNP 5%확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대학입시의 개혁과 고교입시 부활반대 △교육개혁 추진기구의 구성 등이며, 이는 교육개혁위원회가 '5.31교육개혁안' 발표를 통해 추진의지를 밝혔거나 95년 하반기 과제로 잡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수 석방 캠페인 행사 일정표>

행사제목	일시	장소
하루감옥체험 하루단식	7일(월)-12일(토)	명동성당
양심수 석방을 기원하는 월요일예배	7일(월) 오후 7시	기독교 회관
양심수 석방을 기원하는 화요일법회	8일(화) 오후 7시	조계사 법당
전국교도소 양심수 면회 및 석방 촉구집회(기도회)	9일(수)	전국 교도소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9일(수) 오후 6시 11일(금) 오후 6시	명동성당
100회 목요집회 -양심수 어머니들의 고난 그리고 희망	10일(목) 오후 6시	명동성당
시민대회	12일(토) 오후 6시	명동성당
양심수 석방을 기원하는 일요미사	13일(일)	명동성당
전시회 및 만화인 행사	7일(월)-13일(일)	명동성당 주변

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가 되었다고 해도 양심수 문제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김선명씨 등 장기수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버려진 사각지대였다. 이런 계기를 통해 종교·문화·시민·인권단체들이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라면서 캠페인이 갖는 의의를 밝혔다. 1995년 선언에 대해 소개한 김상근 목사(한교협 인권위, 인권협 대표) "1995인으로 했던 것은 올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분단과 민주화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이들의 권리를 회복을 역설했다. 송월주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우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

관석 목사, 김승훈 신부, 지선 스님, 김대중씨, 이기택 민주당 총재, 한승헌 변호사, 김상곤 교수, 강연균씨, 권영길 민주노총총공동대 표, 정태홍 한총련 의장 등 종교·정치·법조·보건의료·학술·노동·문화예술·사회시민단체 등이 망라되어 참가했다.

또, 이들은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수배해제를 위한 1995인 선언'(1995인 선언)과 함께 발표된 이 캠페인(행사계획 아래 표 참조)이 명동성당 입구에 모형감옥을 설치 '하루 감옥체험'을 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결연여 예년의 8.15 양심수 석방 캠페인에 비해 참가단체의 규모나 내용에서 매우 힘있는 행사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고문인정 3명 무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이공형 부장판사)는 2일 분산판독국교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대로 원중성(24) 피고인등 3명에게는 무죄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양의 사촌언니 이아무개(19)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인등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성희룡 항소심 판결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여성시민단체 규탄집회

「서울대 조교 성희룡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실련 등은 2일 오후 2시 종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성희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석회 및 여성·시민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평석회는 박성호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교수, 이경희(한남대 법학과)교수가 발표자로 참가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평석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위법성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평균인'이란 도구 개념을 통해 남성중심주의적인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석회가 끝난 후 성희룡 사건의 당사자인 우조교가 나와 "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렵고 참담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싸울 것이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평석회에 이어 가진 규탄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용상 판사의 사퇴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 신설 △신교수의 엄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할 것이며 성희롱 재판이 승리할 때까지 범여성 시민운동차원에서 계속 싸울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장기수 쟁쟁인 -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남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간첩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수들의 사건을 들여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어떤 사건이라고 해도 '조작'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사건이거나 막론하고 사건을 접할 때는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조작인가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지난호에서 살펴본 초장기수의 경우 오랜 고문으로 '사실' 자체보다 장기간의 야만적인 고문으로 훨씬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루게 될 사건들은 '조작'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건들이다. 70년대 이후 독재정권의 위기 때마다 터져나왔던 간첩 사건들은 바로 이런 조작간첩 사건들이다. 이 기획 첫 회에서도 지적했지만, 북한은 70년대 초반부터 대남전락을 수정하여 공작원을 내

려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단 사건은 5공 때인 80년대 초반 집중적으로 터진다.

이런 조작간첩 사건과 연루된 이들의 증언을 들여보면 몇 달씩 밀실에 갇혀 고문을 당하면서 간첩은 접선을 이렇게 하며, 난수표는 어떤 방법으로 해독하는지, 비트를 파는 방법은 어떤지를 수사관들이 알려주고 이를 받아적게 한다. '간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면서 수십번 수사관들이 말하는 대로 받아적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단지 폭압적인 고문과 함께 가족에 대한 협박, 이틀테면, 아내와 자식까지 구속되고 싶으냐는 협박도 받게 된다.

이런 밀실의 불법구금일을 보면, 재일동포 이현치씨가 무려 1백80일, 일본 관련 사건의 김철씨가 1백13일을 불법고문당하며 간첩이 되었다. 다른 이들은 보통 60일 전후의 불법구금을 경험해야 했다. 심지어는 이들의 수사발표도 수사가 완료되고 하는 시점, 또는 정세의 필요에 따라 하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에 간첩단 사건이 많이 발표되게 된 것이다.

조작사건이 제대로 된 물증이 있을 리 없다. 대개는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의 자필 진술서가 거의 유일한

증거일 뿐이다.

서준식씨는 조작간첩은 반공지상주의를 토양으로 삼아 발생하고, 독재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해 만들어지게 되며, 또한 수사관들의 포상욕, 진급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일동포들은 38선이 없는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조총련계 동포들과 어울리며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나 북한동포에 대한 적개심이나 공포심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재일동포들은 안기부등 수사기관의 좋은 먹이가 된다.

현재 15년째 수감중인 이현치씨. 그는 81년10월9일 서빙고에 있는 보안사로 연행되었다. 보안사는 그가 북한을 방문하여 간첩지령을 받았고, 국내에 아지트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노동자들을 포섭하려고 했다고 한다. 특히 수사를 받던 중인 10월15일에 부인이 보안사에서 출산하였다. 그 아이마저도 이씨가 간첩활동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안사는 강조했다. 그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 되었다.

행사안내

○ 웅산 미군기지 인간띠 잇기대회

- 일시: 5일(토) 오후2시-6시
- 장소: 서울역광장-웅산 미군사령부 정문 주변
- 주최: 주한미군법령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 포럼2001 창립총회

- 일시: 5일(토) 오후3시/·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 문의: 747-8897

○ 청소년 열린학교 캠프

- 일시: 5일-6일/· 장소: 경기도 이천 수련장
- 주요내용: 21세기 청소년과 통일/모의선거-'내가 학교를 만든다' 등 / 문의: 838-5985

○ 제24회 독립영화 정기발표회

- 일시: 6일(일) 오후1시, 3시, 5시
- 장소: 종로2가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강당
- 상영작: 스티리 사라진 후/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등
- 주최: 독립영화협회의(☎ 278-0336)

○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발족식

- 일시: 6일(일) 오후6시/·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 문의: 764-3036

○ WCC총무 콘라드라이저씨 초청강연-'신국제질서 속에서 회년을 이루어가는 에큐메니칼 공동체'

- 일시: 10일(목) 오후7시30분
- 장소: 한남동 감리교여성교회관 9층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42-8981)

○ 제3회 부천시흥 시민 통일한마당

- 일시: 12일(토) 오후4시
- 장소: 부천 레포츠 공원 축구경기장
- 내용: 자전거퍼레이드 가장행렬/시민장기자랑대회/초청 가수공연/대동놀이 등
- 주최: 8.15년죽공동행사 부천시흥준비위(☎ 655-0202)

동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용환 변호사가 1년 동안의 미국과 영국에서 인권단체와 대학을 방문하여 국제적인 인권호를 익히고 1일 귀국했다.

표5> 재일동포 장기수 명단

이름	연령	교도소	수번	형기	연행일	구속일	복역연수
박수관	52	대구	3245	무기	83.3.25		13년
김장호	55	"	3122	20년		83.1.30	13년
김태홍	40	대전	3801	20년		81.10.13	15년
이현치	44	"	3638	20년		81.10.28	15년
서순택	66	"	3635	20년	90.1.19		6년
이성우	71	안동	1341	20년	84.2.23		12년
김병주	71	"	1368	20년	83.11.28		13년
손유형	67	전주	2039	20년		81.7.15	15년

<이달의 주제-사회권>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권고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씨 건강악화 석방촉구

엠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2일 박용길 장로를 양심수로 선정하여 그의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urgent action)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엠네스티는 박씨의 북한행이 자신의 양심을 표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상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 고령인 박씨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 권영혜 안기부장 앞으로 박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아울러 민가협에 복사본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6월28일 김일성 주석의 1주기 추도식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하였다가 7월31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이기도 하다.

또한, 엠네스티는 지난달 14일부터 전세계 회원들에게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인 은수미(31)씨의 석방과 신병치료를 요구하는 편지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낼 것을 요청했다.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는 은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

화되었는데도 이를 치료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수인도 일반인과 똑같은 예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UN의료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안우만 법무부장관과 강릉교도소장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한 것이다.

은씨는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가슴을 심하게 맞아 협심증과 관절염을 앓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복부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외진관리가 어렵다며 일주일만에 퇴원난 6월28일 김일성 주석의 1주기 추도식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하였다가 7월31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이기도 하다.

5.18 재항고 기각 대검찰청 항의방문

4일, 대검의 5.18 재항고 기각에 항의방문을 가려는 5.18공대위 소속 회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회원 2명이 부상당했다.

5.18불기소처분 규탄과 책임자 기소촉구를 위해 지난 달 1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5.18공대위 회원들은 3일 대검이 내린 5.18 재항고 기각에 항의, 검찰청장 면담을 위하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려 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의 저지에 의해 무산되었다.

생존권 쟁취 결의 목동 철거민들

「목동영구임대입주추진위원회」는 3일 오전12시 주민, 자원활동 대학생 3백여명과 함께 목동 가수용시설 앞 공터에서 '목동 8.3 강제철거 규탄 및 임대주택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93년 8월3일, 백골단과 철거강패 6천여명의 살인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목동 철거민들이 벌인 대대적인 투쟁을 기념해 열린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 판매중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가 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94년 12월6일부터 95년5월11일까지 발행된 <인권하루소식>이 묶였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고 지료를 이용해 입금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재정상 소량만 인쇄하였기에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값: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사/과/드/립/니/다>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사무실 전기시설 공사로 인해 <인권하루소식>이 정상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점 독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있기를 바라며 거듭 사과드립니다. 팩스독자는 매일 새벽 4시 직후 <인권하루소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주제-사회권>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권고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캠페인 시작

전국 465명 양심수 무기단식

해방과 분단 50년을 맞아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12개 인권·종교·노동·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벌이는 '45명 동성당에서 있었다. 이 날 선포식에는 단체회

원과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선포식에 이어 김선명씨 등 양심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하루 감옥체험' 입소식을 가졌다. 하루감옥체험 첫 수감자는 소설가 윤정모씨, 경실련 사무총장 유재현씨, 박원순변호사이다.

하루감옥 옆에는 주최단체 회원들이 하루단식을 벌였으며, 오후6시에는 '양심수를 위한 콘서트'를 갖기도 했다. 이 캠페인은 12일까지 계속되며 하루 감옥체험 외에도 1일단식, 전국 교도소 앞 집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편 7일부터 전국 32개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선명, 송갑석 등 양심수 4백 65명은 '양심수석방'을 요구하며 일제히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인간띠잇기 대회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의장 전 우섭등, 운동본부)는 5일 오후2시 서울역에서 시민·학생 등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한미군범죄 규탄 집회를 가졌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기지까지 행진을 한 뒤, 미군 기지를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벌였다. 운동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56월 미군의 연쇄 폭력사태에 대한 온국민

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평택에서 최재현군이 미군의 난폭운전으로 숨지는 등 미군범죄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은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대한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띠잇기'는 지난 2월에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불허, 지난 5월 제판을 통해 "폭력이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이번에 치뤄진 것이다.

5.18 국토종단대행진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종단대행진단'(단장 정상용 의원)은 도보행진 15일째인 7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면담하고자 했으나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들은 김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5.18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후 행진단은 광주로 내려가 농성동 서구청장 앞에서 출발, 전남도청까지 도보행진을 했고 도청앞에서 경과보고를 마친 뒤 해단식을 가졌다. 이로써 행진단은 망월역에서 청와대까지 약 4백킬로미터에 이르는 14박15일동안의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종단대행진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개질의서는 장인균(김영진보좌관)씨등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되었다.

국제엠네스티 총회서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

국제엠네스티는 제22차 대의원총회를 슬로베니아의 루브리아나에서 8월10일부터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자국내 인권침해에 관한 엠네스티 지부의 활동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93년 보스톤에서 개최된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의안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하루소식>은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오완호씨의 특별기고를 통해 국제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자국문제에 대한 활동원칙안을 살펴본다. 오사무국장은 8일 출국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현행 자국문제에 관한 활동원칙은 '자국내 엠네스티 조직, 즉 지부나 그룹은 자국의 인권문제 관해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조사할 수 없으며 자국의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석방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국문제에 대한 활동원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

91년 국제대의원대회 총회는 수임사항 개정중 특히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각국의 지부가 자국내에서 벌이는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을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93년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제안된 '회원'에 대한 전략적 방안에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엠네스티는 인권옹호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의 운동체"라는 기본 이념을 유지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념의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

라서 자국의 인권단체들과 국제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자국의 활동과 국제적 연대활동의 균형각각을 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개정될 내용>

첫째, 인권의 증진부분이다.

자국내 인권교육, 법률일반에 대한 인권증진활동,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준수토록 하는 운동, 사형제도 반대, 난민에 대한 활동, 인권침해에 사용될 군사·경제·문화적 협력조관계에 대한 반대, 지역비정부단체와 협력 등을 전개할 수 있다.

둘째,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이다.

지부는 자국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인권침해상황에 관해 조사하거나 활동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주도적으로 입장을 표현하거나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부가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들이 조정되기에 앞서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정기적으로 자국 인권문제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국제적 전략과 분석에 관해 상의할 권리가 있다는 점 △자국의 인권문제에 관해 접수된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 △국제사무국이 요청할 경우 인권정보를 수집하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인정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제집행위원회는 엠네스티의 인권보호활동에 근거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자국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승인토록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인/권/호/름

(7월31일-8월 7일)

<7월 31일>

고려대 김충열 대학원장 등 1백31명, 5.18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대전충남연합회 대표의원 17명, 5.18 고소고발 사건 담당 장윤석 서울지검공안1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김일성 주석 1주기 행사에 참석했던 박용길 장로 관문점으로 귀환/전교조, 교육부의 교육개혁선언관련 교사 징계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한국통신노조 김규화, 박문형씨 연행

<8월1일>

전 대구시장의 뇌물사건 수사도중 전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박승철씨,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밝혀

<8월2일>

5.18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천막농성 돌입/국제엠네스티, 박용길 장로를 양심수로 선정,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 개시/민가협 등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벌이기로 기자회견에서 밝혀/부산고법 형사2부 강주영 양 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종성씨등 무죄선고/서울대조교생회총대위 등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평석회와 여성·시민규탄대회 가제/유니세프, 세계 여성의 현실 다룬 보고서 발표

<8월3일>

대검찰청, 정동년씨등이 5.18관련자 35명을 상대로 낸 제항고 기각/광주전남인권협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민족작가회의, 광주학살자 처단 요구/목동영구입대입주추진위원회, 목동 8.3 강제철거 규탄 및 임대주택생존권 결의대회 가제/한국전쟁당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으로 숨진 제주도민을 위한 위원회 열려

<8월4일>

국경없는 의사회, 30년간 1백50차례의 핵실험에 노출되었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암환자수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

<8월5일>

87년 간첩죄로 구속, 기소되어 8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장의균씨 만기출소/보건복지부, 외국인노동자 연금가입 의무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브라질 정부 군사통치 기간중 고문으로 사망한 반체제 인사들의 가족들에게 11-16만 5천달러씩 배상하겠다고 밝혀

<8월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50주년/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 5.18학살자시민대회 가제

해설

5.18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교수, 문인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국민들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검찰의 모습 앞에 이전 분노를 넘어 강한 울분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전 총무부 장관 서석씨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4천억원 비자금 발언은 실언이든 고의성 발언이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정경유착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7일부터 김선명씨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단식농성과 1일 감옥체험이 명동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약 일주일후면 8.15이다. 이번만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사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이달의 주제-사회권>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권고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김선명씨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노력은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국제고문반대협회」, 「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인권단체는 한국의 장기수들이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말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김선명씨에 대한 영문정보물이 인권위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자 이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45개 수감중인 사설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표시했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의 제임스 실크씨는 “감옥에서 40년이상 복역 중인 김선명씨와 안학섭씨 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경건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년 넘게 이들을 구금하고 있다. 한국의 장기수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3년 김선명씨를 양심수로 선정하였고, 현재 김씨의 석방운동을 전세계 40만 회원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뒤 “김선명씨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갇혀 있는 양심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를 양심수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쟁포로로서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그는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그의 수감조건은 매우 나쁘며, 전향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국제펜」은 박노해, 황석영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하고 조건없는 석방을 주장하고 있고, 「유엔인권위원회」는 93, 94, 95년 3차례에 걸쳐 홍근수, 장의균, 황석영씨등의 사례를 지적하여 자의적 구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8.15사면을 앞두고 한국정부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년 넘게 이들을 구금하고 있다. 한국의 장기수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3년 김선명씨를 양심수로 선정하였고, 현재 김씨의 석방운동을 전세계 40만 회원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뒤 “김선명씨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갇혀 있는 양심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를 양심수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쟁포로로서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그는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그의 수감조건은 매우 나쁘며, 전향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국제펜」은 박노해, 황석영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하고 조건없는 석방을 주장하고 있고, 「유엔인권위원회」

회」는 93, 94, 95년 3차례에 걸쳐 홍근수, 장의균, 황석영씨등의 사례를 지적하여 자의적 구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8.15사면을 앞두고 한국정부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유서사건 공대위

향고이유보충서 제출

6공화국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장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신부, 이하 공대위)는 8일 김형영씨 고발 사건에 대한 '향고이유보충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유보충서에서 “피의자 김형영의 유죄는 확실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피의자의 변명과 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유서사건 진상 재조사와 △피의자 김형영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해 김형영을 '법정에서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6월 3일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

렸다. 공대위는 이에 불복하여 7월3일에 항고한 바 있다.

캠페인 이름제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캠페인’ 이름제를 맞는 명동성당의 가장 큰 관심은 입구에 설치된 모형감옥에 쏘여 있다.

8일의 하루감옥체험자는 김영승(출소장기수), 정양엽(민간협 어머니), 장영달(국회의원), 정대춘(가수), 광노현(교수)씨이다. 장양엽씨는 “내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광주-전남추진본부'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가졌다. 추진본부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수는 5,6공군사독제시절을 훨씬 웃돈다. 전남지역만 해도 오종렬 광주전남의장을 비롯해 63명이 구속·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총련 단식농성 돌입 5.18학살자 처벌 주장

한총련 소속 대학생 김민욱(23)등 53명은 '5.18학살자 기소 처벌을 위한 구국대단식농성단'을 꾸려 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와 민족의 전통을 올바르게 지켜가기 위해서 5.18학살자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수 캠페인 —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⑤>

남북어부사건 — “오래전 남북이 간첩으로 둔갑”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제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남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바다에는 철책선이 없다. 단지 나침반이나 위도를 알려주는 계기를 이용해 이 바다가 남북 바다인지 북쪽 바다인지 판단할 이름이다. 그러나, 잠을 고기들은 휴전선에 아랑곳없이 자유로이 넘나든다. 어부들이 정신없이 이들 물고기를 쫓다 어느새 북쪽 바다로 넘어갈 경우 북의 경비선에 나포된다. 북의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북에 억류되어 며칠에서 몇 달을 지낸다. 그곳에서 교육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런 이후 그들은 가족을 만나 전처럼 살게 된다. 그러나, 이미 안기부나 대공사업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들 중 누구를 자신의 희생물로 찍어놓았을지 모른다. 그리고, 다시 몇년이고 흐르다. 어느날 갑자기 고기잡던 이들은 멍치 좋은 수사관들에게 체포된다.

김성학씨는 남북어부로 5공 시절에 무죄의 행운(?)을 얻은 경우다.

<신동아> 88년 10월호는 그가 어떻게 72일간의 고문을 당하고 간첩이 되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기고문이 다시 시작되었다. 물고문을 당한 끝이어서 그런지 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누군가 내 가슴을 누르면서 인공호흡을 시켜주었다. 그러나, 정신이 들면 다시 전기고문을 시작했다. 점점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안에는 온통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그들조차 내 곁에 오래 있기를 꺼리는지 자주 교대를 했다. 약 20분 정도 휴식 한 뒤에 다시 전기고문이 시작됐다. 허반신은 녹아달을 지낸다. 그곳에서 교육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런 이후 그들은 가족을 만나 전처럼 살게 된다. 그러나, 이미 안기부나 대공사업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들 중 누구를 자신의 희생물로 찍어놓았을지 모른다. 그리고, 다시 몇년이고 흐르다. 어느날 갑자기 고기잡던 이들은 멍치 좋은 수사관들에게 체포된다.

다행히 변호사와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다. 강제연행

되고 8개월이 지난 86년7월14일이였다.

김성학씨는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경우다. 정영씨는 65년 강화도에 서 조개를 캐러 1백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비무장지대인 은점필로 들어갔다 납북되었다. 그리고 20여일간 평양에서 조사를 받다가 귀환되었고, 안기부에서 북한에서의 행적을 추궁받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러다가 81년 인천으로 이사, 직장에 취직한 그에게 시련의 날이 다가왔다. 납북된 지 18년이 지난 83년 9월 어느날 출근길에 인천시 도암동 안기부 밀실로 끌려갔다. 40여일의 고문조사 끝에 그는 고장간첩이 되었다. 일명 강화도 고장간첩사건이 적발되었다고 안기부는 발표했다, 그를 고문한 수사관들은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13년제 복역 중이다. 지난 5월31일 우성호 선원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어 아직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그들이 북에서 어떤 생활을 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 남북어부 사건과 같은 비이성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는 일은 없어야겠다.

5.18 성명 확산

고대, 조선대 교수들의 5.18 불기소처분 성명발표에 이어 교수들의 성명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국어대 교수 1백6명은 7일 검찰의 5.18 불

기소 결정을 비난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불법자금 보유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구영 교수등은 성명서를 통해 5.18 불기소 결정은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6공 세력의 4천억 불법자금에 대해 “헌정권이 5.18 쿠데타 세력의 부도덕함을 감싸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헌정권이 5.6공세력과 정치적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들끓고 있는 국민 여론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5.18관련자 기소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4천억원 불법자금 조성설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노래공모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명랑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자는 취지로 '가정평화를 위한 노래'를 공모한다.

이번 노래공모는 가정폭력으로 얼룩지고 정서가 메말라 가는 현대 가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족간의 사랑이 평등과 상호존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응모기간은 9월2일까지이며, 당선된 작품중 대상 1명에게는 3백만원, 우수상 1명 1백만원, 장려상 2명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 노래들은 오는 10월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가정평화를 위한 시민한마당' 문화행사에서 연주된다. 문의는 269-2962.

주요 공판 안내

8월9일
김상원(선고)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425호
박창희 국보법 오후4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311호

표8> 남북어부 사건 관련 장기수 명단

이름	나이	교도소	수번	형기	연행일	구속일	복역연수
이상철	46	광주	2473	17년	83.12.21		13년
이재룡	52	"	5059	무기	70.6.19	72.6.27	26년
김정목	61	대구	3119	무기		82.8.13	14년
정영	55	"	3236	무기		83.10.24	13년

<이달의 주제-사회권>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권고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선적인 자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문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형사 1심 판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9일 86년 김상원(당시 30세)씨를 폭행, 습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한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목격자와 병원의 진술을 통해 파출소에 들어올 때 밀짚하던 김씨가 병원으로 실려갈 때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자동차 시트로 감싸야 할 정도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점으로 모아 파출소 안에서 김씨에게 심한 폭행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이씨의 실행 선고가 당연하나 이 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지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재판이 진행된 9년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위암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일해온 경찰서에서도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그가 겪은 고통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9년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김씨의 동생 김상모(40)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만 생각했지 피의자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무시했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유가협등의 제야단체와 싸고 사건을 부풀렸다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원씨는 86년 3월 불심검문 거부로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로 연행, 경찰의 폭행으로 이빨 6

대가 부러지는 등 뇌막염의 증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그를 행려병환자로 위장하여 영등포시립병원에 입원시킨 뒤 근무일지등을 조작하여 은폐시키려 하였다. 그뒤 식물인간이 된 김씨를 가족들이 44일만에 발견했으나 김씨는 5월29일 사망했다. (관련기사 2면)

김선명씨 면회 불허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장기수 김선명씨(71)를 만나려는 노력이 법무부와 교도소 당국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다.

'양심수 석방 캠페인' 사흘째를 맞는 9일, 대전교도소 등 전국 교도소 앞에서는 현재 단식농성중인 양심수의 면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전교도소 앞에서는 오후1시경부터 서울에서 내려온 각계 민주인사와 민가협 회원, 국토순례중인 대학생 등 3백여명이 모여 장기수 면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교도소 당국은 이날 낮부터 김선명씨의 면회를 봉쇄하기 위해 정사복 경찰과 경비교도대 등 8백여명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의정문 입구에서부터 바리케이트를 치고

면회접수 창구에 접근하는 것마저 봉쇄했다. 면회접수 민원인마저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참석자들은 김상근 목사(한교협 인권위원장), 안옥희씨(민가협 상임의장), 금강스님(칠천불교승가회 회장) 3인을 대표로 선정, 면회접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바리케이트를 넘어오라", "논독길을 걸어 들어오라"는 등 면회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시종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안옥희씨는 "해마다 장기수의 면회를 신청했지만 이런 지독한 대접을 받기는 처음"이라며 "정부가 떠드는 대서면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교도소측의 시간끌기로 오후4시 민원시간이 넘자, 법무부와 교

도소 당국을 규탄하는 약식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광주교도소등 면회허용

한편, 광주교도소 앞에는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5백여명이 모여 1시간 가량 '국가보안법철폐와 장기수·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교도소안에서 단식농성중인 광주전남연합 오종열의장, 비전향장기수 이경창, 이공순씨등 수감중인 양심수 전원을 면회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도 한국통신과 지하철 노조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 6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 수감중인 사람들을 면회했다. 수원교도소에서도 장영길(전해투 위원장)등 수감중인 양심수 전원을 면회했다.

장흥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서도 2백여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으나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교수 공소사실 부인

지난 4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3, 한국의대 사학과)교수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9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심문과정에서 '안기부의 조작'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일본에서 북한영화 <춘향전>을 비디오로 본일뿐 있으나, 서태수씨와 함께 '김일성 전집'등을 읽고 토론하거나 주체사상을 공부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장기수 캠페인 -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제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남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번 해병은 죽을 때까지 해병'이란 구호처럼 '한 번 빨갱이는 죽어서까지 빨갱이'란 말이 있다. 빨갱이 '낙인'은 본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건널 수 없는 시련으로 다가온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자나 행방불명자를 가진 가족들은 그 후 혈육을 만났거나 혹은 도왔다든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남파되었다는 장본인이 남한에 존제하기 않기 때문에 혈육을 만난 사실은 물론 간첩활동을 했는지의 여부조차 의혹을 사고 있다.

수사기관은 행방불명자를 오랫동안 사찰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간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고정간첩'을 만들었다.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피의자 심문조서' 뿐이다. 그의 다른 어떤 증거도 없다. 조각간첩 사건으로 분류되는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과 관련하

여 박동운씨는 60일, 이창국씨는 72일, 석달윤씨는 47일동안 불법구금 당했다. 박동운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진도 가족 고정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는 6.25때 헤어져 생사도 모르는 아버지 박영준씨를 따라 두 번이나 복에 갔다온 것으로 조작되어 무기형을 살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7년을 살고 나온 숙부 박경준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우리 가족 5세대는 아무 죄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81년 3월9일을 전후해서 안기부로 강제 연행 되었다. 60여일동안 불법구금 속에서 밤낮없이 살인적 고문과 공포에 시달렸다. 수사기관은 6.25때 서울에서 행방불명되어 생사도 모르는 가공인물 박영준씨가 남파간첩으로 내려와 가족과 접선하고 고정간첩 노릇을 했다는 것을 강요했다. 그것이 '진도가족 고정간첩단 사건'의 전부이다.

또 한 예는 간첩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일가족 모두가 '삼척간첩단 사건'으로 둔갑, 12명에 이르는 가족들이 사형에서 무기징역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순자씨는 최근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는 이 엄청난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아무리 천인공노할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어떻게 한 일가를 이렇게까지 완전히 파탄시켜 놓을 수 있던 말입니까?

68년, 월북한 것으로 알고 있던 의심촌인 진현식씨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김씨의 가족들은 무척이나 놀랐다. 그 때만해도 철저한 반공교육에 젖어 호랑이보다 무서운게 간첩으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상처입은 몸으로 나타난 의심촌을 몰라라 할 수는 없었다. 그

후 진씨는 상처가 아물자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친척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며 월북을 시도한다며 집을 떠났다. 김씨의 가족들은 그후 별탈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지난후 느닷없이 사건이 터졌다. 79년 누군가의 밀고로 진현식씨 사건이 터지면서 10년전의 일이 '삼척간첩단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간첩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아버지와 진씨의 동생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다친 몸으로 찾아온 친척을 아박하게 돌려보낼 수 없어 숨겨주었던 인정받고 소박하던 삼척 산골의 한 일가는 '간첩'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김상원씨 사건 일지○

- 86. 3.10. 영등포에서 불심검문을 거부하자 경찰관 이병호에 의해 연행, 파출소에서 심하게 폭행당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영등포시립병원에 입원 /4.24. 가족들 식물인간이 돼 입원중인 김씨를 찾아냄/5.29. 사건발생 77일만에 사망
- 87. 7.23. 가족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강성룡순경등 중앙파출소 경찰관 4명을 독직폭행치사·사건은 패조작·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 88. 2.17. 이병호씨 추가 고소/6.10. 검찰 무혐의 결정 /6.17. 강성룡씨 등 7명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제출(대리인 박원순 변호사)/8.26.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국가와 강성룡순경, 이병호 경장, 김근영 의경, 홍성일 순경, 황경현 경위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제기 (대리인 박원순)
- 90. 10.15. 서울고법 재정신청 받아들여 이병호경장 재판에 회부/10.31.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윤영근 검사의 수사관 2명 등 9명을 직무유기·범인은닉·공문서위조·위증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11.29. 법원 이병호씨등 가족에게 9천5백80만원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
- 91. 5. 검찰 이병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무혐의 결정 /10.10. 강성룡순경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92. 9.30. 형사지법 합의22부 이병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시작. 공소유지 담당 검사 우종권변호사 임명
- 93. 6.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12.17. 헌법재판소, 정홍전씨에 대해 불기소 취소결정. 정홍전씨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재판진행 중

표9> 행방불명자 관련 장기수 명단

이름	나이	교도소	수년	형기	연행일	구속일	복역연수
박동운	51	대구	3111	"		81.5.8	15년
안승윤	64	"	3151	"		82.2.26	14년
김태룡	48	대전	3565	"		79.7.20	11년
나중인	58	"	3643	15년		85.4.25	11년
석달윤	65	전주	2120	무기		80.10.6	16년
진창식	49	"	2679	"		79.7.20	17년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양심수없는 날' 그리며 민가협 목요집회 1백회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쳐온 민가협 목요집회가 10일로 1백회를 맞이했다. 보랏빛 손수건의 물결이 명동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목요집회는 5백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해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뜨거운 마음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엠네스티'가 세계의 10대 양심수를 선정하면서 제작한 '구미유학생 사건 김성만씨의 석방을 위한 영화'와 양심수를 위한 최초의 애니메이션 '그리운 얼굴들'이 상영되기도 했다. 민가협 총무 남규선씨는

"1백회 목요집회를 해오기 까지 어머니들의 힘이 가장 컸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혹은 엄청난 피약별 아래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빼앗긴 남편과 자식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정말 눈물겨운 것이었다. 시민들과 도우미들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목요집회는 93년 9월23일 처음 종로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이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켜와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집회로 자리잡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빛 수건을 쓴' 초

로의 아주머니들은 양심수의 사진과 경력이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힘찬 목소리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경찰 폭력, 고문, 노동탄압등 그때 그때 터지는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성명 석방 캠페인, 고문 희생자들의 고문사례 증언, 56공 군사정권에서 조작된 간첩사건의 진상 고발, 아르헨티나의 오웰광장 어머니들과 함께 했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엠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국제엠네스티」(엠네스티)는 95년 소식 143호를 통해 "8.15 해방을 맞이하여 남북한 정부는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엠네스티는 "8.15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50주년 되는 날이지만 해방보다는 분단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분단은 한반도에 있어 인권이 침해되고 개혁이 후퇴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외친 양심수를 가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북한의 대표적인 양심수를 거론했다. 한국의 경우 최장기수 김성명씨, 42년째 복역중인 안학섭씨와 조작 간첩사건의 박동운, 김성만, 황대권씨를 예로 들고 북한의 경우 60·70년대 실종되었던 사람들과 간첩죄로 살고 있는 조호평씨 가족의 사례를 지적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 판매중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가 나왔습니다. 이번호는 94년 12월6일부터 95년5월11일까지 발행된 <인권하루소식>이 묶였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고 지로를 이용해 입금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재정상 소량만 인쇄하였기에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값: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부산 지역 5백인 국보법 철폐·양심수 석방 선언

부산지역의 각계인사 5백인은 10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서울에서 각계인사 1995인이 서명하여 발표한 선언에 이은 것이다. 송기인, 배다지, 원형은씨 등은 이날 오후2시 부산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언문을 발표, "역사적인 광복 50주년과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내외의 객관적인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과 장기수 양심수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김영삼정권은 역대정권이 그래왔던 것

처럼 국가보안법을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도 "장기수 석방은 늦출 수 없는 우리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이들에 대한 조건없는 전면 석방이 이루어져 역사적인 8.15 광복50주년은 진정한 민족의 화합과 국민대화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93년 3월 1백44명이 특별사면·복권된 뒤 그 10배가 넘는 1천5백여명의 양심수가 발생한 것은 "문민정부가 아닌 문민독재화되고 있는 김영삼 정부의 통치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수 캠페인 -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남북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제목의 미국 문제를 체계화시킨 문건이었다. 그 내용은 미군정 3년의 역사적 의의, 예측의 현실, 주한미군과 매관매권, 핵과 한반도 등 5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문건에서 집필자는 예측과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재타도가 아니라 미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 문건을 집필한 이들은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확산되는 운동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좌경운동 세력 뒤에 복귀의 붉은 마수'가 있다는 식의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85,6년도는 특히나 이런 조직사건이 한달에도 몇건씩 발표되었다.

특히 80년대 중반, 미국에 대한 문제기는 82년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85년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을 거치면서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85년 새학기 개강이 되자마자 각 대학의 총학생회실, 단과대 학생회실, 학과 학생회와 과대표 앞으로 두툼한 우편물이 도착하게 된다. 이 우편물은 '예속과 함성'이란

제목의 미국 문제를 체계화시킨 문건이었다. 그 내용은 미군정 3년의 역사적 의의, 예측의 현실, 주한미군과 매관매권, 핵과 한반도 등 5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문건에서 집필자는 예측과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재타도가 아니라 미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 문건을 집필한 이들은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확산되는 운동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좌경운동 세력 뒤에 복귀의 붉은 마수'가 있다는 식의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85,6년도는 특히나 이런 조직사건이 한달에도 몇건씩 발표되었다.

제목의 미국 문제를 체계화시킨 문건이었다. 그 내용은 미군정 3년의 역사적 의의, 예측의 현실, 주한미군과 매관매권, 핵과 한반도 등 5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문건에서 집필자는 예측과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재타도가 아니라 미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 문건을 집필한 이들은 85년 9월 안기부에 의해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확산되는 운동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좌경운동 세력 뒤에 복귀의 붉은 마수'가 있다는 식의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85,6년도는 특히나 이런 조직사건이 한달에도 몇건씩 발표되었다.

표10>민주·통일운동 관련 장기수 명단

이름	연령	교도소	수번	형기	연행일	구속일	복역연수
김용태	37	광주	1997	14년	85.		11년
황대권	41	대구	3164	20년		85.8.5	11년
양동화	38	"	3265	무기		85.8.5	11년
김성만	40	"	3180	무기		85.8.5	11년
박찬우	36	"	3205	15년	84.7.15		12년
강용주	34	안동	1313	20년		85.8.5	11년
방양균	41	전주	2125	7년		89.6.28	6년
최수열	31	"	2073	15년	87.6.22		9년
박영희	33	"	2001	15년		92.1.6	4년
서경원	59	진주	2001	15년		89.6.28	6년

그의 입북을 도왔다. 방양균씨가 구속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김대중 총재(현재 가정세정지구민회의 상임고문)가 소환되어 조사받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밖에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동기에서 또는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입북을 기도했던 이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나 동기는 매우 단순했지만,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마수에 걸린 이들의 행량은 가혹한 것이었다. 민주·통일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은 92년 대선 직전 타진 '남한 조선노동당사건'등과 같이 계속 이어져왔고,公安조직이었던 서경원씨가 밀입북 기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북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 행사안내 ○

- 2회 생명해방의 대축제-해방·분단 50돌 독립열사·민주화 열사 및 대형참사 희생 영가 천도를 위한-
· 일시: 11일(금) 오후5시
· 장소: 서울 강남 봉은사(☎ 511-6070~4)
- 광복 50주년 기념 한일인권세미나
· 일시: 17일(목) 오후7시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
· 주요내용: 일본에서 인권이 소중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시미즈 기요코)/일본 페미니즘 전쟁책임에 관해(오오코시 아이코)
· 주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63-426-2563)
-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4차-종합토론
· 일시: 12일(토) 오후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제발표: 화해·통일지향적 인식(리영희)
· 주최: 한겨레신문사, 학술단체협의회(☎ 271-0491)
- 고 이범영 한청협 의장 1주기 추모식 및 추모사업회 결성식
· 일시: 12일(토) 오후3시 / 장소: 종로성당
· 참가비: 2만원 / 묘소참배: 13일 정오 모란공원
· 주최: 고 이범영 추모사업회(☎ 364-7782)
- 아시아 태평양 시민사회포럼
· 일시: 12일(토)-14일(월) /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 주요내용: 여성, 환경, 이민, 빈곤, 인권등 아시아의 제반 문제에 대한 공동논의
· 주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741-7961)
- 제3회 까치의 통일아리랑
· 일시: 12일(토) 오후6시30분 / 장소: 성남 시민회관 대강당
· 주최: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성남지역 추진본부
- 양심수석방 시민대회
· 일시: 12일(토) / 장소: 명동성당
· 주최: 민가협 등(☎ 763-2606)

<이달의 주제-붙쳐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김선명씨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8.15 50주년 대사면 기득권층만 대폭혜택

초장기수 24명등 양심수 4백40여명 남아

정부가 해방 50주년을 맞아 11일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는 구여권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복권에 비해 양심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아 대화합조치라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이

날 오후 3시 30분 형사법, 공안관련사법 등 3천1백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양심수로 는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71), 안학섭(65), 한장호(72)씨가 형집행정지로, 재

표1> 8.15 양심수 형집행정지·가석방자 명단

이름	소속	사건명	형량	만기일
김선명		전쟁포로	무기	45년복역
안학섭		전쟁포로	무기	43년복역
한장호		남파공작원	무기	39년복역
김철		일본관련	7년	96/4
최해보		일본관련	15년	2000
신상봉		일본관련	10년	95/
조봉수		일본관련	7년	96
유종안		일본관련	15년	2000
황계윤	현대중공업	파업	1년 6월	96/4
김재곤	기아자동차	파업	2년	95/10
이근희	전민주당비서	남한조선노동당	3년	95/9
김중식	한양대	전대협5기의장	4년	95/9
태재춘	서울대	전대협6기의장	4년	96/8
김성민	호남대	국보법위반	2년	96/3
박상춘	조선대	조통위장	2년	96/6
이철우	동의대	5.3동의대	12년	97/4
김영권	동의대	5.3동의대	15년	98/10
이종현	동의대	5.3동의대	13년	97/10
윤창호	동의대	5.3동의대	20년	2009
오태봉	동의대	5.3동의대	20년	2001
김중철	순천대	집시, 폭력	1년 6월	95/12
이금성	호남대	미문화원시위	1년 6월	95/12
한철수	경희대	범민족대회	5년	96/7
김영하	중앙대	6기 전대협 조통위장	2년	96/2
김기창	조선대	총학생회장	2년	95/12

일교포관련자 김철(63), 최해실(67)씨등 5명, 전 김대중씨 비서 이근희씨가 가석방된다. 또한, 전대협 의장 김중식, 태재춘씨와 이철우, 이종현씨 등 5.3 동의대 사건 관련자 전원이 간형면제로 풀려나게 된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수감중인 각 교도소에서 석방된다(표1 참조).

하지만, 전체 양심수 4백65명(민가협 집계, 6월10일 현재)중 약5%에 불과한 25명만이 풀려나게 되었다. 이중 장기수는 3명만이 석방되게 되었는데 우용각(67, 38년 복역), 윤용기(70, 37년 복역), 윤수갑(73, 37년 복역)씨 등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가 무려 24명이 남아 있다. 또, 장기수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42명 가운데 7명, 30년 이상 복역자 14명중 3명만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석방되는 3명을 제외하고 수 십년간 감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일체 감형조치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구여권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표2> 8.15 사면복권 사건유형별 분류(자료: 법무부)

구분	계	사면		감형	복권	사면 및 복권	행정 지	가석방 가득원 가출소
		진행 면제	형선고 실효					
계	3,169	1,242	27	426	528	318	3	625
형사	2,314	1,226		411	10	48		619
공인	855	16	27	15	518	270	3	6

등에 대한 파격적인 사면복권과는 반대로 양심수 석방대상자는 잔여형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들이 13명으로 절반을 넘어 생색내기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운동 구속자 중에는 2명만 포함되어 경제인들이 대거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반면 구속 노동자 1백여명은 제외되었다. 또, 권영길씨등 주요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수배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합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구여권 끌어안기식의 사면복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권낙기(48, 출소 장기수)씨는 "김선명선생님 세분의 대표적인 장기수가 나눔으로 장기수에 대해 사람들이 땅각 속에 묻혀지거나 않을까 염려된다"며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인물의 석방을 통한 장기수와 양심수 문제의 회색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2면).

<양심수 8.15 감형자 명단>

무기에서 15년으로(5명); 김대룡, 문철태, 유정식, 진창식, 함주명
잔여형기의 1/2 면제(10명); 김병주, 김용태, 김윤수, 나종인, 박찬우, 서순택, 손유수수 등과 관련된 구여권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장기수 캠페인 -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남북이후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인간이 독방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인가? 0.75명 내지는 1명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대소변을 보는 화장실이 머리맡에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들도 없이 몇 년이고 혼자 살아야 하고, 면회도 편지도 안되는 곳에서 하루 운동시간은 고작 30분에서 1시간이라면 얼마나 버티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전향공작으로 정식 육체적인 고문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20년 넘게 산다면 석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는 않을까?

장기간의 독방 수용도 정신적인 고문에 속한다.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은 장기간의 독방수용이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켜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20년 넘게 산 초장기수가 무려 27명이나 된다니(15일 이후는 24명).

민가협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석방 캠페인을 벌이면서 '하루감옥체험'이라는 행사를 마련했다. 실제 대천교도소의 독방의 실제 체험을 만들어 그곳에 사회저명인사들이 하루 또는 반나절을 감옥살이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기간의 독방생활은 그 자체로 지독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고영구(5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변호사는 "현재의 독방은 최소한

의 생존도 말할하는 곳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엄연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독방에서 20년 넘게 산 초장기수들과 또, 초장기수가 될 다른 장기수들이 계속 감옥에 남아 있는 것은 분명 비인간적인 만행이다. 이번 사면조치에서 제외된 장기수들도 하루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 그들은 독방에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장기수들 중 비전향자들은 사회에 나와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으며 살아야 한다. 더구나 연고자도 없는 장기수들은 출소하여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다.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만날 수도 없다. 출소장기수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된 터라 변화된 생활에 적응해가는 것만도 힘든 일이다.

고난에 찬 장기수들의 정역살이는 근본적으로 민족의 분단에서 비롯되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초헌법적인 법률에 의해 청춘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모든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장전들의 정신을 외면한 체 세계화를 부르짖는 거짓의 세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한 인간이 정부와 다른 사상과 신념을 가졌다하여 몇십년을 독방에서 살아야 하고, 45년 세계최장기수들이 이제야 석방되면서 온갖 생색을 내는 한심한 이 나라의 인권수준은 언제나 나아질 것인지... 이 연재를 마치며 이 사회에 묻고 싶다.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의 반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선명씨등 장기수 3명의 석방조치는 이미 풀려나야 할 사람이 당연히 풀려난 것일 뿐 결코 정부의 은전에 의해 석방된 것은 아니다. 김선명씨 석방에 기뻐하기 보다 너무도 늦은 석방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전국민주노총준비위원회> 1백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고 50여명의 노동자가 수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기를 거의 다 마친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면복권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정권에 격심한 분노를 느낀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민족의 화해를 위한 사면이 아니라 5.6공 비리 관련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장기수 몇 명을 끼워넣기 한 데 불과하다. 김영삼 정부와 5.6공 세력과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제관련 사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분단 50년의 취지에 맞는 장기수·양심수는 극히 일부만이 포함되어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장기수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송환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민중정치연합> 냉전과 분단의 마지막 상징인 일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국제적으로 사상 탄압과 비인간적인 행태처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몸짓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영삼 대통령 출범이후 구속된 노동계등 많은 양심수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 8.15사면복권은 민심이반을 구여권 끌어안기로 만회하려는 것이다. 특히, 사정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볼 때 개혁의 끝이라고 평가한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양심수들에 대해 추가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력형 부정부리사건, 뇌물수수, 학원비리 등 부정부리에 연루된 사범들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엄중한 형벌로 다스려져야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이번 특별사면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고, 특사의 취지로 밝힌 국민화합, 분단의 아픔의 치유, 민족대화합을 위해 김영삼 정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강경선(43, 방송통신대 교수, 법학) 정치법과 양심수가 없는 사회는 건강할 사회다. 대다수 양심수를 감옥에 남겨둬으로써 현 정권은 스스로 건강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김종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를 이제 석방하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모든 장기수와 양심수는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김영운(34, 회사원)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보수세력간의 대화합의 몸짓이다. 이제 더 이상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15일자 정복철 유부료 유고

16일자부터 정상 발행합니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도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진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 출소
한국, 아직도 세계 최장기수의 나라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70)씨를 비롯, 8.15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전국의 교도소에서 25명의 양심수들이 15일 오전 일제히 풀려났다.

행정행정부로 풀려난 이들 장기수들은 오전 9시15분경 안학섭(65), 김선명, 한장호(73)씨의 순으로 대전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김씨는 민가협 어머니들과 출소 동료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곧 환영인파에 손을 흔들어 답례했다. 그는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나만 나오게 돼 미안하다"면서 "이른 동지들이 격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72년 6.23 선언 이후 전향공작반을 만들어 깡패들로 하여금 때리고, 바늘로 찌르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나가게 만들 때가 가장 괴로웠다"며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안학섭(65)씨는 "난 감옥에서 잔뼈가 굵었고 감옥에서 죽을 결심을 했다"면서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사실을 감옥에서 듣고 고무되었다"고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서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남북간에 통일을 위한 장벽이 제거되는 등의 모습을 보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출소자중 최고령자인 한장호(73)씨는 "통일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일어난 많은 학생, 청년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국통일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해 환영 나온 이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선명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여 약 2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과 환영집회 동안 잠시 코피를 흘리기도 하여 주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안우회 민가협 상임의장은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당당히 살다 나오셔서 감사하다"며 "좁은 공간에서 30년, 40년 이상을 살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기수들 비롯한 4백40여명의 양심수를 전원 석방시키고, 국보법을 철폐시켜 양심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민가협과 출소 장기수들, 대전지역의 청년학생 등 1백여명이 모여들었고, 국내외 취재진도 약 30명 가량이 몰려 세계최장기수의 석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경우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양로원등에 보내지게 된다. 김씨의 경우 가족이 처음 인수를 거부했

으나, 민가협 관계자들이 집요하게 가족을 설득하여 김씨의 계수씨가 나와 인수 서류에 서명하였다. 김씨는 서울 관악구 낙성대에 위치한 출소 장기수들이 함께 거처하는 곳에서 지내게 된다. 또, 안씨는 그동안 옥바라지를 해온 친형 안장섭(73)씨와 함께 경기도 강화군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한장호씨의 경우 인수를 할 누님이 최근 병석에 누는 바람에 인수할 연고자가 없어 대전교도소 근처 성예경로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일본관련 간첩사건 5명도 일본관련 간첩사건으로 구속 11년제 복역중이던 유종안(64)씨도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는 일본에 있는 누나로부터 조상의 비석을 세우기 위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해 지난 85년 3월 구속되었다. 수사당시 고문

에 의해 불구가 되어 다리를 몹시 절었다. 그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석방되게 되어 감사한다"며 "동일이 빨리 되길 바란다"는 말로 출소소감을 대신했다. 또한, "누님이 오래 전에 운명하신 터라 사건이 조작되었음에도 진실임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85년 3월 구속되어 11년제 복역중가 석방 조치로 출소하게 되었다. 한편 유씨와 비슷한 일 본관련 조작간첩사건의 김철(68)씨와 신상봉(65)씨는 대구교도소에서, 최해보(68)씨와 조봉수(54)씨는 안동교도소에서 오전 9시 전후하여 각각 출소, 가족의 품에 안겼다.

이날 김씨들의 출소를 전후해 대전교도소 앞에 모인 이들은 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조용환변호사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가 석방되었지만, 아직도 40년 가까이 복역한 장기수들이 많다. 따라서 변방없이 우리나라는 최장기수의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씨들의 출소를 전후해 대전교도소 앞에 모인 이들은 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조용환변호사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가 석방되었지만, 아직도 40년 가까이 복역한 장기수들이 많다. 따라서 변방없이 우리나라는 최장기수의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씨들의 출소를 전후해 대전교도소 앞에 모인 이들은 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조용환변호사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가 석방되었지만, 아직도 40년 가까이 복역한 장기수들이 많다. 따라서 변방없이 우리나라는 최장기수의 나라"라고 지적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 판매중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가 나왔습니다. 이번호는 94년 12월6일부터 95년5월11일까지 발행된 <인권하루소식>이 묶였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고 지로를 이용해 입금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재정상 소량만 인쇄하였기에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값: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 등, 민교협)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에 남북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어 온 근원적 요소는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적 대결"이라고 지적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교협은 5.18내란 주동자에 대한 구속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을 14일 민교협 사무실에서 가졌다. 민교협은 "불법적 반인륜적 권력찬탈자들에게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과 내란 주동자에 대한 단죄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정부에게도 북한의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누릴

한일인권세미나 개최
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광복50주년 기념 한일 인권세미나'를 17일 오후 7시

5.3동의대 사건 5인 마지막 출소

윤창호씨-"진실 규명 위해 재심 준비" 밝혀

89년 5월3일 새벽 부산 동의대에서는 도서관에서 농성 중인 학생들을 진압하던 경찰이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9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었고, 이후 77명이 살인, 살인미수,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47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윤창호씨를 비롯한 30명은 형이 확정되었다.

재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남 93년 20년형을 감형되었던 윤창호씨가 정부의 8.15 가석방 조치로 부산교도소에서 15일 오전 출소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5.3동의대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며 "당시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사작업도 사법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화인에 대해서는 경찰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며 차분히 재심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3동의대 사태가 "당시의 국면으로 볼 때 정부와 민족민주세력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안당국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이 긴장관계를 꺼려고 했지 않은가"라면서 "경찰은 진압원칙을 무시하고 진압전경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말해 당시의 진압책임자들에게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윤씨는 이날 마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종현, 이철우, 김영현, 오태봉씨등 5.3 의대 사건으로 마지막까지 실형을 살던 사건 관련자들과 6년만에 학교에서 감격적인 재회를 했다.

에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광장에서 갖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차세계대전후 일본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미즈 기요코 교수(오대방대학 교수)가 "일본에서 인권이 소중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오오코 룬지 범죄행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인을 철저히 단죄하고 있다"며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친박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농성에 결합했다. 11일까지 5.18 불기소처분과 관련 시국성명을 낸 교수들은 고려대, 성균관대, 경상대, 충북대, 전북대등 전국 27개대학, 2천1백1명에 이르고 있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수들의 항의성명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대, 목포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들이 5.18 관련 피고소인들의 기소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한 뒤 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교수들은 "국제적으로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인을 철저히 단죄하고 있다"며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친박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농성에 결합했다. 11일까지 5.18 불기소처분과 관련 시국성명을 낸 교수들은 고려대, 성균관대, 경상대, 충북대, 전북대등 전국 27개대학, 2천1백1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는 9월12일-11월14일까지 여성대중 교육과 상담원 양성을 목적으로 제25기 여성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여성학과 여성심리 △상담학의 이론과 실제 △자원활동론 △여성폭력 △여성과 가족등으로 수강후 전화상담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접수는 16일부터이고 선착순 40명이다. 문의처: 한국여성의 전화 교육조직국 전화 269-2962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
교수들 적극 주도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5.18광주학살사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강신석 상임위원장, 5.18공대위)는 "학살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16일 이후에는 학살자를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매 주말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5.18로 인해 부상당한 이들을 사망한 유족들이 전두환, 노태우씨 등을 검찰에 살인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16일에는 '5.18학살사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추경단공원에서 가져다시 한번 5.18 책임자들에게 대한 국민의 항의가 잇따를

주요공판안내

○ 8월18일
김기현,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311호
윤성문(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구속에서 석방까지 40여년 -비전향 출소 장기수 3인 경력-

김선명(70)

25년 2월 20일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 51년 10월 15일 구속.

소학교 졸업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 8.15 해방 전까지 기계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함.

해방과 동시에 남로당에 입당해 영등포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됨 때문에 지하로 잠적, 인천 등지에서 일하던 중 50년 인민군이 내려오자 서울시장에서 활동. 인민군과 함께 북으로 후퇴, 강동정치학원에서 단기학습을 받고 함께 북으로 후퇴, 강동정치학원에서 단기학습을 받고 51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로 오다가 체포됨.

전향공작전담반의 강제전향공작시 고문, 구타하는 강제의 불알을 틀어쥐고 너죽고 나죽자는 각오로 놓지 않고 고함을 외침으로써 교도관과 강제가 불알을 놓으면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룸.

아무것이나 손을 거치면 쓸만한 도구로 바꾸는 재주꾼이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

어머니와 동생이 서울에 살고 있다. 김씨는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해 호적에 사망으로 등재되었기도 했다.

현재 배내장이 심해서 책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아직 총각으로 '총각동맹 부위원장'이라는 동료들의 짓궂은 놀림을 당하기도 하였다.

안학섭(65)

30년 4월 7일 경기도 강화에서 출생. 53년 3월 구속. 개성에서 중학교 재학중 전쟁으로 고향으로 와 민청에서 활동하다가 인민군 후퇴시 경기도당과 함께 후퇴. 강동정치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52년 빨치산으로 태백산맥 방면으로 진출, 활동중 부상당해 53년에 체포.

57년 비전향을 이유로 취업이 중지당해 독방에 수용됨. 43년간에 걸친 감옥생활 동안의 무수한 고문 구타 등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첩차례 단식투쟁을 함으로써 위장병이 생기기도 함.

비전향수 역사의 산 증인. 가족은 강화도에서 농사짓는 형님이 살아계심.

한장호(73)

23년 5월 1일 함북 나진시에서 출생. 57년 11월 20일 구속. 일제말에 일본 유학중 학병징집을 단연코 반대하고 도피함. 해방 후 서울대학교에 편입해 경제학과를 48년 졸업. 학생시절과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지하혁명가로 활동하다가 인민군이 서울 입성후 당계선 사업에 참가. 후퇴시 서울시당을 따라 월북해 평양부근 순안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근무, 56년 대남공작차 남파되어 무기징역을 받음.

73-75년 광주교도소에서 자행된 가혹한 전향공작기간 중 가장 수난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 그때 당시의 후유증으로 인해 지금도 심한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책벌레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루종일 책속에 서만 생활했다. 서울에 누님이 한분 살아계셔서 육바라지 해왔으나, 최근 병석에 누운 것으로 전해짐.

주/간/인/권/호/름

(8월7일-8월13일)

<7일>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시작/전국 교도소 양심수 4백65명 단식 농성/한국외대 교수 1백6명, 5.18관련자 기소와 특별검사제특별법 도입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한총련 소속 53명 5.18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시작/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종단행진단, 14박15일간의 국토 도보행진 마무리/변협, 집건방해죄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가칭)세정치국민회의 시국사법 사면 촉구/경찰청, 경찰통제선 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첫 판결 내리

<8일>

'유서사건 장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형영씨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 검찰에 제출/짐 멀저 뉴질랜드 총리, 프랑스 핵실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9일>

서울지법 형사22부, 김상원씨 폭행치사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피고인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광주항고 유림90여명, 5.18 관련자 기소 촉구하는 성명 발표/대전교도소, 민가협등 인권단체들의 김선명씨 면회 불허/중국경찰, 세계여성대회 앞두고 반체제인사 검거에 착수/서울지검 공안1부, 박용길 장로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서강-동국-성공회대 교수134명 5.18성명 발표

<10일>

민가협 목요일집회 100회/부산지역 각계 인사 5백여명,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선언/김수환 추기경, 8.15담화문에서 5.18진상규명 촉구/민중주의민중동일 서울연합, 3백여명, '5.18관련자 기소촉구 결의대회' 가저

<11일>

국제엔네스티, 8.15담화 남북한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 촉구/김영삼대통령, 일반 형사범 2천3백14명과 공안관련사범 8백55명등 3천1백69명에 대한 특별사면 발표 /광주전남대 교수, 5.18 책임자기소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행진/한경연등 12개 시민단체 회원, 프랑스 핵실험 재개에 반대하는 시위 전개/변협, 5.18관련자 기소와 진적 대통령 4천억원 불법 비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한국언론협회,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 처분에 관한 연극인들의 견해'에서 불기소 처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

해 설

지난주 우리는 다시금 정부와 검찰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들 분명히 목도했다. 전직 대통령의 비실명계좌 4천억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의전된 소문으로 사건을 급히 덮어 버리고 말았으니 말이다. 또,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던 8.15 특별사면조치가 결국 현정권의 정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복권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런 정권에 대해 '사기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이상의 현정부에 대해 어떤 기대도 신뢰도 보낼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87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는 교수들의 5.18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의성명은 이런 정부에 대한 국민의 항의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번주는 다시 5.18이 뜨겁게 부활할 것이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합법집회 경찰 난입 기자등 30명 부상

5.18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이 공소시효로 정한 16일 하룻동안 5.18관련단체들과 전국연합, 민교협, 한총련 등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장충 공원에서 시민, 학생 8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는 "5.18 광주학살자들을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에 회부해야 하고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항고, 재항고 기각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상용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의원은 국회와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 요구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어 민교협 김상근 교수는 5.18 관련해 시국성명을 낸 교수는 전국 44개 대학 3천1백 74명이라고 밝히며 24일 오후 1시 여성백인회관에서 '5.18성명 교수 결의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5.18국민위원회와 5.18공동대위는 이후의 투쟁일정에 대해서 현재 명동성당과 전남도청 앞에서의 농성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기까지 계속 진행하고, 17일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21일 '학살자 공소시효 토론회'를 민변등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 대화장 폭력 진압 기자등 폭행

이날 오후 4시20분경 집회가 끝나고 집회 참석자들이 해산할 쯤 경찰병력 1천여명이 사전 경고도 없이 최루탄을 쏘며 대화장에 난입했다. 경찰은 연단을 점거하고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 시민들에게 곤봉을 마구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조동기(36, 5.18부상자동지회원)씨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 30여명이 다쳤다. 또, 취재중이던 중앙일보의 장문기 기자등 4명의 기자도 경찰에게 집단폭행 당했으며, 장기자는 실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화 주최측이 합법집회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40여명의 학생들을 연행했다고 대회 주최측은 전했다. 한편, 경찰의 저지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남총련 학생 1천5백여명은 이날 오

후 7시경 신당동 로터리와 을지로6가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 책임자 처벌 촉구 전국연합, 연노련 성명 전국연합과 5.18국민위원회는 16일 평화적인 집회에 경찰이 합법집회를 폭력진압을 한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 항의했다. 전국연합과 5.18국민위원회는 "경찰의 폭력은 마치 80년 광주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광폭하고 무자비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경찰책임자 즉각 파면 △공식 사과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최루탄을 쏘며 대화장에 난입했다. 경찰은 연단을 점거하고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 시민들에게 곤봉을 마구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조동기(36, 5.18부상자동지회원)씨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는 등 30여명이 다쳤다. 또, 취재중이던 중앙일보의 장문기 기자등 4명의 기자도 경찰에게 집단폭행 당했으며, 장기자는 실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화 주최측이 합법집회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40여명의 학생들을 연행했다고 대회 주최측은 전했다. 한편, 경찰의 저지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남총련 학생 1천5백여명은 이날 오

전두환, 노태우씨등 살인혐의로 고소 5.18부상후 사망자 유족

5.18 부상후 사망자 유족들은 8월말 전두환, 노태우등 35인을 살인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사망일로부터 시작되므로 가장 최근에 사망자가 93년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살인행위 공소시효는 2008년까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가 16일이므로 자칫 국민들은 5.18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문제가 끝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9월초경 5.18행방불명자 가족회도 국가를 상대로 시신반환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가족들은 시신반환 소송을 통해 당시 5.18 사망자의 수와 암매장 사실을 전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오늘자 발송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 판매중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가 나왔습니다. 이번호는 94년 12월6일부터 95년5월11일까지 발행된 <인권하루소식>이 묶였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고 지료를 이용해 입금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재정상 소량만 인쇄하였기에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값: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장기수 문제 해결 안되

8명 석방 불구 장기수 총 65명 남아

김선명씨들의 초장기수 3명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복역중이던 유종안씨등 5명 등 총 8명의 장기수가 15일 정부의 특사조치로 석방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장기수는 총 65명이 감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90년대 이후의 조직사건 관련자들을 제외한 장기수들 중에 광주, 대구, 대전, 안동, 전주, 진주교도소등에 각각 8명, 13명, 24명, 8명, 11명, 1명이 복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5명의 장기수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4명이고,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도 6명에 달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인 김인수(73), 윤수갑(73), 윤용기(70), 홍경선(71)씨등과 안동교도소에 복역중인 이성우(71), 김병주(71)씨등이다.

또한, 20년 이상 복역중인 초장기수는 24명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30년 이상 복역한 이들은 광주교도소-김동기(30, 숫자는 복역연수), 양희철(33), 이정환(31)등과 대구교도소-홍명기(34)씨,

대전교도소 김인수(34), 안영기(34), 우용각(38), 윤용기(37), 장병락(34), 최선목(34), 최하중(34)씨, 전주교도소최수일(31)씨 등 1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선명(70)씨등 초장기수가 출소했다고 하지만, 석방되어야 할 장기수들이 아직도 많다. 김선명씨는 15일 출소 환영인사에서 "아직도 콘크리트 감옥 속에는 많은 장기수들이 있고, 그중에 아픈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와 초장기수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대

전교도소의 경우 우용각, 윤수갑, 김인수씨등이 심하게 아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15년으로 감형'은 '20년으로 감형'

<인권하루소식> 12일자(제464호)에 실린 '김선명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기사의 끝부분 양심수 8.15 감형자 명단중에서 '무기에서 15년으로(5명)'이기에 '무기에서 20년으로(5명)'이기에 바로잡습니다. 11일 법무부 안우만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광복 50주년 경축 특사 보도자료'의 5쪽에 나온 그대로 이를 게재했으나, 이후 형기계산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16일 법무부에 이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의 오타옴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김태룡, 문철태, 유정식, 진장식, 함주명씨 등 5명은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제9기 장애우대학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장애문제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9기 장애우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한국장애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태를 알리고 장애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기간은 9월15일-12월8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이다. 교육내용은 한국장애우 정책(김성재 교수, 한신대), 장애우 재활치료(김윤재 의사), 장애우 편의시설의 현황과 과제(김기정 교수, 명지대), 한국장애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이기하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등이다. 연락처 521-5364

<5.18 유족의 목소리>

우리 아들을 두번씩이나 죽여

저는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에서 공무부대원들의 총과 칼, 쇠몽둥이에 맞고 쫓겨 숨진 전남대학교 사대 상업교육학과 2학년 재학생이던 이정연의 엄마입니다. 지난 15년이 내게 얼마나 끔찍한 날이었던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최루탄도 제일 먼저 맞았고 질질 끌려다니며 경찰서 보호실에는 밥먹듯이 가두어 놓고, 또 닭장차 속에다가 마구 던져버려요. 그러면 질식해서 병원가도 압력 받아서 치료도 빨리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3일만에 깨어났어요. 그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몇십번이 있었어요. 또 한번은 닭장차 속에 가둔채 몇시간이나 버려뒀요, 한번은 닭장차 속에서 엄마들이 맨손으로 닭장차 하나를 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장성경찰서에서 구류를 14일동안이나 살았어요. 정연이 아버지도 85년5월18일에 잡아가 6.29선언할 때까지 잡아두면서 유족들 앞장 서지 말라고 안기부에서 압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식 다 잃고 무슨 큰 죄졌습니까?
 정말 우리 엄마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우리의 자식은 돌아오지 않고 그 당시에는 계엄해제도 안되어서 말만 하면 잡아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일년에 봄 가을 그 살인마들이 광주에 순시를 오게 되면 3일전부터 집앞에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문밖을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도 오로지 내 자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는 그 실낱같은 희망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을 두번이나 죽였습니다. 아 이 서러움을, 이 한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미에 아르헨티나는 문민정부가 들인 이후 전직 독재 대통령을 두명 기소하여 유죄로 처벌하였는데 우리는 남미 아르헨티나만도 못합니까?
 즉각 김영삼 정권은 퇴진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규명을 이루어내고 학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땅에 우리 어머니들과 같은, 우리 아들딸들과 같은 환과 고통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 이 글은 16일 있는 5.18 불기소 규탄 제3차국민대회에서 주최측이 배포한 유인물에서 전재했습니다. 5.18 희생자 고 이정연씨의 모친 구선하씨가 명동성당 농성중에 연설한 내용입니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다.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 최루액 가스 살포 대학생 30여명 전신피부화상 고통

경찰의 무분별한 최루탄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루액가스로 인해 대학생 30명이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최루액가스 사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남부지역통일선봉대' 소속 70여명의 대학생들은 지난 7일 안산시 동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홍보활동을 끝내고 이동하던중 안산경찰서 소속 경찰 1백여명과 대

치하게 되었다. 경찰들은 학생들을 1-2명 남짓한 골목으로 몰아넣고 최루액가스(일명 칠푼이)를 10센티미터 앞에서 무차별 살포하였다.

당시 부상당한 학생들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김태림씨는 "수많은 여학생들의 절규도 무시하고 진행된 최루가스 살포와 평화협정 흡사 허들러의 유대인 독가스 학살 현장을 연상케 했다"고 말했다.

최루액가스를 맞았던 유대광(23), 최선(20)씨등 39명은 그 다음날부터 온몸에 수포가 생겼고 가려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입원중인 유씨는 "다리, 등, 가슴을 비롯한 온몸에 주먹만한 수포가 생기고 물집이 터져 나왔다. 살갗이 벗겨지고 붉은 반점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유씨에 따르면 어떤 여학생은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시커멓게 변했고 손으로 잡으면 피부가 짓뭇개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치료를 맡았던 안산 희망병원 이재광 의사는 "학생들의 병명은 접촉성 피부염과 자극성수포형성 피부염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상처가 심해지면 흉터가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39명의 학생들은 현재 서울, 안산지역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증은 칠푼이라는 새로운 액체분사가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최루액가스는 아직 성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심각한 독가스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폭력에 대한 공개 사과 △최루가스 사용 근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 39명 전부가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조고 대법원 상고 성희롱 사건 2심 판결불복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게 되었다. 17일 오후5시,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우아무개 조교에게 3천만원의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에 이유없다고 판결하였다.

우씨는 상고장에서 "항소심이 성희롱의 정의와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 남성위주의 시각에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최루가스는 독가스가 잘못 표기된 것" -미국 의회 청문회 제출 보고서 지적-

최루탄에 대한 미국의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은 87년이다. 당시 하버드대 폴 에프스타인 박사 등 미의료전문가 5명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한국에 시위가 한창이던 87년 7월 11일에서 18일까지 한국을 방문, 현장 조사를 통해 최루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정부 및 의료당국 등 여러 관계당사자들에게 대한 직접 조사 후에 15페이지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내린 결론은 "최루 가스는 독가스에 속하는 화학물질"이라는 사실. 이들은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의뢰한 성분 분석 시험을 통해 한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최루 가스가 폐렴, 폐질환 및 호흡기 심장,간장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특히 "최루가스는 독가스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의료팀들이 또 하나 문제삼은 것은 한국정부가 이같은 "독가스"를 사용하면서 이의 유해성 정도와 의학적인 처치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점. 보고서는 따라서 한국정부는 최루 가스의 유독성에 대한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시급히 시행,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루탄을 "비인간적이고 의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라고 결론짓고 있어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한 청문회조사가 최루탄 사용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편집자 주>** 중앙일보 95.7.19일 보도참조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료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료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료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5.18 국민위 항의방문단 서대문경찰서 불법감금

5.18 국민위원회 소속 단체인 25명은 16일 5.18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17일 오후 2시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경찰은 서대문 경찰서에 이들을 불법감금, 밤늦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유아무개씨에 따르면,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하거나 인적사항을 대라고 요구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의 5.18 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학생과 시민등 4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5.18 부상자동지회 박상렬(58)씨는 경찰공복에 맞아 머리가 찢어졌고, 조동기(36)씨는 심한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또, 경찰의 직격 최루탄 발사로 인해 장원호씨(25, 단국대 야간경영2)는 왼쪽 눈을 한양대병원에서 수술했으나 실명위기를 맞고 있으며, 석상현(20)씨는 녹골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중앙일보 장문기(32), 경향신문 남주환(34), 문화일보 서영걸(29), 한겨레신문 임완호씨 등 사진기자 4명

도 경찰에 집단폭행 당해 인노련등 기자단체들은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17일 현재 경찰은 집회와 시위현장에서 유아무개씨(22)씨등 58명 연행하여 2명 훈방하고, 56명은 노원구 도봉 등 4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중이다.

법적 책임 요구 정대협 일수상담화 비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등)는 일본 무라야마 수상의 침략전쟁 사과 담화문에 대해 16일 입장을 발표, "국회결의 사죄를 하므로써 계속되는 망언을 막아야 하며, 사죄는 반드시 민간모임에 의한 일시금 지급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노조 간부 4명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2단독(김지형 판사)은 17일 한국통신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폭행죄등을 적용,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받

은 한국통신 노조 간부는 현경용(31, 노조 중앙본부장의국장), 도남희(46, 노조 교육홍보실장), 정용철(40, 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 심철식(37, 노조제도개발국장)등이다.

현씨들은 회사간부 폭행과 사장실등의 점거농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두밀리 가족캠프 연다

「두밀리학교연대모임」은 19일-20일 가평군 두밀리분교에서 '작은 학교 큰 교육'을 위한 가족캠프'를 연다. 공동체놀이와 태권, 산행, 떡감기, 댕치 파티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회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연락처 745-8399.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검찰이 5.18 학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검찰은 5.18 학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차대전의 전범들을 아직도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노력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더구나, 이제 5.18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집회마저 폭력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더 강하게 5.18 학살자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학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합시다>

□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서명용지 필요하신 분은 전국연합(☎ 747-4364)이나 5.18공대위(☎ 062-232-8576)로 연락하십시오.

□ 각 단체는 계속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청 항의방문을 합시다.

□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에게 항의편지를 씁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우 120-11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95-4 노태우 전 대통령 (우 120-11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1동 108-17

□ 검찰에 항의전화합시다. 대검찰청 김도연 검찰총장 ☎ 771-2300 서울지방검찰청 1차장실 한부환 1차장 ☎ 536-5306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장윤석 부장검사 ☎ 536-5302 최규하 전직대통령 ☎ 324-2054

□ 명동성당 5.18 공대위 농성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함께 합시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방위비 삭감, 복지예산 증액 요구 방위비연대회의, 전년대비 12.5% 증액 반대

최근 국방부가 '96 방위비 예산안을 작년에 비해 12.5% 인상하려는 안을 재정경제원에 제출하자 인권, 평화, 종교, 여성등 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방위비 증액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병원노조 파업에 경찰력 투입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전원 연행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새벽 1시 파업을 벌이고 있던 대구 영남대병원에 경찰 1천여 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날 농성중이던 박문진 위원장(35)등 노조원 2백94명을 전원 연행했다. 연행자들 중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했던 박문진 위원장, 정미선 부위원장(26), 최원구 사무국장(35)등 노조간부 3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경찰은 신혜도 부위원장(28), 박순복 의료부장(30)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연행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극 가담여부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조사무실을 수색해 정의일지, 유인물 등 관련자료를 압수했다.

한편, 영남대병원 노조는 울주부터 경북대, 계명대 병원 등 대구지역 종합병원노조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해고자복지 △임금 16%인상 △임시직원의 정규직화와 등을 요구하며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김숙임 등, 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 1백여 단체 서명으로 '96년 국방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드리는 건의문'을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제출, 방위비 삭감과 사회복지비

증액을 주장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측은 오는 9월 15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인권하루소식> 7월 13일자 참조).

건의문에서 연대회의는 "우리나라 국민의 방위비 분담은 93년 세계 9위였고 올해 정부 예산중 22.1%를 차지했으며 전체예산의 방위비 점유율면에서는 세계 7위"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은 세계 70위, 주요 복지제도의 시행상태는 세계 122위"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3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약 1/4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을 줄인다면 사회복지문제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각종 사회개발, 환경문제에 보다 여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난 7-1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는 1만명 염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시켰고, 9월 20일-11월까지 국방위 국회의원들에게 염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비 예산안이 발표되는 10월 초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안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일본회원 화염병 시위 학생 6명에 집행유예

1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송동원)는 지난 6월 6일 일본문화원 화염병시위와 관련, 전주 건조물 방화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국진(20, 중앙대 사학과 4년)씨등 6명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오전 6시경 서촌련 소속 학생 1백여명과 함께 와타나베 미치오 전 일본 외상의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기습시위를 벌이며, 일본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때 경찰은 안국역 지하철 안에까지 강경진압을 벌여 비난을 샀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료를 이용하십시오!

보내드린 지료용지를 이용, 납부하시고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료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불법구금 뒤 경범죄등으로 즉심 회부

서대문경찰서, 5.18 시위 진압 항의 7명

'5.18 책임자 기소촉구대회'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러 간 재야단체 회원을 27시간 이상 불법구금한 끝에 즉심에 회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대문경찰서(서장 김홍준 총경)는 전국연합의 박기학(40, 정책실장)씨등 17명을 17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연행, 연행이유와 구금장소 등을 밝히지 않은 채 18일 오후 늦게까지 강제로 구금했다(<인권하루소식> 8월 17일자 참조). 경찰은 이들 중 이철상(29)씨등 7명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넘기고, 박기학씨등 10명은 훈방했다.

전국연합의 유아무개(29)씨는 "경찰은 연행자들이 불법구금에 항의하여 조사에 불응하자 '빨갱이 새끼들'라고 욕을 했으며, 여학생의 가방도 마구 뒤졌다"고 전했다. 연행된 이들은 경찰의 불법구금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즉심에 넘겨진 7명은 용암동 즉결재판소에서 19일 오전 8시 즉결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18일 서울경찰청은 16일 5.18 책임자 기소 촉구 시위와 관련, 연행된 58명 가운데 김용문(23, 고려대 국문2)씨등 18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중 경찰은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9명을 훈방조치했으며 나머지 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1면에서 계속)

박헌채씨 오늘 사회장

『민족경제론』의 저자 박헌채(61)씨가 1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 삼성병원(옛 고려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박씨는 34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서울

상대를 거치면서 줄곧 자립적 국민경제 이론을 정립한 재야경제학자 및 재야운동가로 이름이 나 있다. 발인 19일(오늘) 오전 9시, 장지 천안공원묘지.

화에 분노를 느낀다. 이는 노조 조합원과 병원노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에 우리는 영남대병원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연대의 뜻을 전해왔다.

또한, 이들은 김영삼 대통령과 전남 노동부장관에게 "영남대병원 노조의 권리를 존중하고 일방적인 직권중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 인권간행물 ◆

□ 『더불어 사는 세상』 1호 - 호주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 · 주요내용: 특별기획-동포사회의 노동문제 실태/이민여성 이야기/호주의 적십자 등. 42쪽.

□ 『21세기 나라의 길』 - 나라정책연구원(☎ 584-8664) · 주요내용: 성공한 쿠데타는 내란죄가 아니다(?!)/국가차원의 종합적 사법개혁 기구 만들자/노동법 개정 종합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등. 104쪽.

□ 『고난받는이들과 함께』 19호 -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393-4662) · 주요내용: 모든 감옥문이 열리게 되길...(김성은)/오늘의 인권-창살없는 감옥에서의 20년 생활/더 큰 감옥에 있는 출소장기수 등. 27쪽.

□ 『계간 『사무직 여성』』 20호 - 여성민우회(☎ 269-5763) · 주요내용: 업무전산화, 그 야누스의 얼굴을 파헤친다/특집-여직원회 실태와 활성화 방안/95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무엇이 달라졌나? 등. 150쪽. 값 4천9백원.

□ 주간 『전국연합통신』 65호 - 전국연합(☎ 747-4364) · 주요내용: 김영삼 정부의 8.15 선언을 미리 예측하며/한국통신 유택상 위원장 마지막 연설문 등. 61쪽.

□ 『함께걸음』 8월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주요내용: 분리고용, 심각한 우려·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조문순)/북경여성대회 한국 여성NGO위원회 여성장애우분과 보고서/장애우 자신이 창조한 자립생활 등. 85쪽. 값 3천원.

□ 『민주법학』 9호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740-4590) · 주요내용: 특집1-사법개혁, 그 문제점과 대안/사법제도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박홍규)/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의 민주화(곽노현)/특집2-인권운동과 법: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이대훈)/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이성훈)/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해(류은숙) 등. 341쪽. 값 6천원.

<5.18 책임자 기소촉구대회 경찰 진압현장 목격기>

마치 그곳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적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듯했습니다. 5·18 학살자 불기소규탄 국민대회가 있었던 16일 장충단공원에서 청년학생들은 폭력경찰의 진압으로 경희대로, 한양대로, 동국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한양대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9시경 싸이렌 소리와 함께 전경들이 쏜 최루탄으로 한양대 교정은 숨이 막히는 듯했고 본대열을 사수하던 사수대 학우들 속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깨어져 얼굴이 피투성이었던 남충련 학우를 시작으로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전경이 쏜 직격탄을 맞아 얼굴이 참혹하게 부어오른 한 학우가 저에게 부축을 요구해 왔고, 그 학우는 한양대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전경이 쏜 직격탄은 사람을 향해 쏘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충련 집회 후에 심각하게 부상당해 치료받는 학우들을 보면 대부분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6일 한양대에서 전경이 학우들을 향해 일직선으로 직격탄을 쏘는 장면이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었습니다. 저녁 어둠을 가르고 무시무시한 불꽃이 일직선으로 학우들을 향해 내리꽂히는 장면이 아주 생생히 촬영되었습니다.

단국대 2학년 한 학우는 직격탄을 맞아 실명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17일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저녁뉴스를 들어보니 시력을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판을 치는 손이 떨립니다...

<편집자주> 이글은 천리안 게시판에 오른 것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 (회장 이택승) 소속 2백10명 이 지난 2월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 이회성 기업사령관,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위원장등 4명을 살인 및 감금치사혐의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 부장검사)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삼청교육대는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삼청교육실시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삼청교육대 조치를 결정한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속하고 미완적이긴 했으

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진상위원회를 구성, 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정권은 광주 5.18, 12.12 군사반란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대 사건도 공소권 없음을 결정해 과거인권침해에 대해 조사의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청피해자동지회도 "검찰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인 것으로 더이상 김영삼 정부에게 도덕적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청피해자동지회는 지난 5월 삼청교육 당시 일어난 인권침해가 한국정부가 90년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삼청교육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4일부터 민자당 당사에서 삼청교육관련 피해자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5.18 명동농성단 새로운 공동투쟁 제안

지난달 18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5.18 제 판회부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은 21일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제안서를 보내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범국민 공동대책위원회'결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명동성당 정기집회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8월16일자로 5.18 학살책임자에

대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학살자 기소촉구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지난 한달동안 전개해온 싸움의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계획을 세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제안에 동참할 단체는 319-5147로 연락하면 된다.

전국연합, 경찰폭력 규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21일 오후 1시 '경찰의 5.18대회장 불법난입과 기자구타, 폭력진압 규탄대회'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졌다. 전국연합은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에 불법난입하여 학생,시민,기자까지 폭행 연행했다" 또 "이들 항의하러 간 전국연합 회원과 5.18광주단체 회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이들을 넘는 시간을 감금하고, 즉심에 회부하는 등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강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는 인권전문센터로 함께 연구하고 인권현장에 가까이질 젊은 활동가를 찾습니다.

- <모집대상>
인권자료실원, 하루소식 기자, 국제연대담당자 약간명 <제출기한과 서류>
9월10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의견서(A4용지 2매)
인권단체나 인권관련사업 종사자 추천서(가능한 경우)
<결과통보>
면접 이후 개별통지
- 문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02-715-9185)

◎ 주요공판안내 ◎

- <22일>
이영두,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2단독, 321호
- <23일>
정봉철등 5명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2부 425호 서해,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2단독, 421호 김형만,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박수호등 4명(한국통신노조, 선고), 오전10시, 서울지법 3단독, 317호
- <24일>
류방송,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3단독 317호 김성복, 오전10시30분, 존속살해, 서울지법 형사합의2부, 319호
- <25일>
김용광,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5단독, 424호 조두현, 오후3시, 국보법위반, 서울지법 합의10부, 318호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전면파업 4일째를 맞고 있는 창원 한국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은 21일 오후1시 정문출입을 봉쇄하고 본관12층 복도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한중노조의 전면파업은 회사의 불성실 교섭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회사측은 협상 초기부터 노조집행부를 '강성'으로 몰아 부치고, 지난달 26일 노조가 교섭을 요청하자 바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병성, 교육부장 강용표씨등 3명을 업무방해, 노동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해 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교섭요청이 오가던 19일에는 사무국장 이천우씨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해 노조원들의 감정을 격화시켜 전면파업이라는 사태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편집실 차장 박종대씨는 "회사측의 여러 행태로 보아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92년부터 회사의 경영악화로 분규없이 지내왔다"며 "올해 경영이 정상화를 되찾아 임금인상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

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인상율도 같은 업종의 대기업과 비교할때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중노조는 △일방중재조항 삭제 △기본급 9.6%(7만5천원)인상 △상여금 현행 6백%에서 7백%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가 내세운 요구에 대해 초기방침인 일방중재조항 삭제 불가, 기본급 5만5천7백58원인상이 최종안이라며 버티고 있다. 게다가 회사측이 곧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노사간의 대립 격화가 예상된다. 이번 협상의 주된 요구안 중 하나인 단체협약중의 '일방중재조항'은 쟁의발생시 노사 어느쪽이라도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노조측은 "이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항이며 국내 대기업중 3개회사에만 남아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며 "잠정 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지 못하거나 쟁의행위 결과로부터 3주가 경과되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 판매중

<인권하루소식> 합본 IV호가 나왔습니다. 이번호는 94년 12월6일부터 95년5월11일까지 발행된 <인권하루소식>이 묶였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고 지로를 이용해 입금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재정상 소량만 인쇄하였기에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책값: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주/간/인/권/호/름

<14일>
대한변협, 대통령 사면권 남용 비판
민교협, 5.18내란주동자 기소를 촉구하는 농성 돌입
<15일>
8.15특별사면부권, 김선명씨등 25명 양심수 석방 정대협, 여연동 22개 여성단체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국민기금'모금에 대한 민간기금안 실행 중단과 법적 배상 실시 요구
민교협, 해방 50주년 성명발표, 남북한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16일>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 '5.18학살자 불기소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 가져, 시민·학생 3백여명과 기자 4명 폭행당해, 장원호(24, 단국대 야간경영 2)씨 경찰이 쓴 직격 최루탄에 실명위기 건국대 강연계 교수등 37명, 5.18관련자 불기소 처분과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발표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핵실험 강행 거듭 밝혀
<17일>
중국, 지하핵실험 단행
민족경제학자 박현채씨 별세
한국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회, 경찰 폭력 비판 성명
전 서울대 조교 우아무개씨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국제엠베스티한국지부, 광복50주년 한인인권세미나 가져
5.18국민위 항의방문단, 경찰의 강경진압에 항의,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에 불법 감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사 1백인선언에 참여한 윤한탁(55, 청량리) 교사 등 현직 교사 대표 6명에 견책 처분, 나머지 96명 행정경고
<18일>
대구 남부경찰서, 대구 영남대 병원에 공권력 투입
'UN 차별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행정심사기관'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전대협 동우회, 5.18 진상규명 촉구

해설
8월 15일 분단과 해방을 상징하는 그날,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등 45년, 43년 39년 세계 최장기수 3명이 석방됐다 하지만 뒤이은 38년, 37년째 복역하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최장기수가 되었다. 양심수들도 465명중 25명(5%)만 석방되는데 그치고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수배된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김영삼정권 초반에 개혁 사정과 관련해 감옥에 갇던 권력형 비리의 당사자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사면,복권되었다. 실로 누구를 위한 '국민화합조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경찰 과잉진압에 의한 폭력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대학생 2명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눈이 실명되고, 기자까지도 두들겨 맞기가 일수이다. 또한 해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최루탄을 퍼부어 39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잉우리가 법치국가에 그것도 문민정부하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봉건시대 야경국가에 살고 있는지 매우 혼동스럽기만 하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진보언론 '말' 노조위원장 징계

회사측, "월권행위는 징계대상"

그간 진보적인 잡지로 국장 이 징계되는 이례적인 사 만들의 목마른 진실을 채워 대가 발생했다.(박스 설명 주던 시사 월간지 '말'(대 기사 참조) '말'의 경영진 표이사 노항기)의 노조위원 은 지난 18일 '해사행위'를

이유로 신준영 노조위원장 (33)에게 징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노조는 21일 오후7시 임시총회를 열고 "회사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된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원들은 그동안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 모두는 '말'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했고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여 민주적으로 집행해왔으나 현 경영진은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

고 독단에 가까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위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등 적극적인 항의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항기 사장은 "노조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범위에 징계까지 포함되는 줄은 몰랐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의 모든 월권행위조차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위원장의 해사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을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

<배경설명>

'말'지는 지난 85년 6월 해직된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장 김태린, 민언협)의 기관지에서 출발, 89년 2월 시사월간지로 등록하여 현재 4만부가 발행되고 있다. '말'지의 소유권은 민언협에 있다. 민언협의 중앙위원회가 '말'의 주주총회이고 임원(이사)은 약 3백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2년 노조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당시 사장 심재탁)측에 '장기발전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노사가 합동으로 구성된 특위는 1년간의 활동끝에 감량과 투자를 통한 기업혁신이 절실하다고 결론내리고 신규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 방법으로 국민주주 방식의 증자를 결정했다. 이 안은 '말'의 주주총회를 마고 있는 민언협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부결되었고 이 안에 반대했던 위원들이 현재 '말'의 경영을 맡게 되면서 1년째 노조와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그간 월간 '말'은 신규 직원 채용시 경영진이 전체 직원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과 같이 일반 노-사 관계로 이해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갈등이 노골화된 것은 현 경영진이 노조가 제시하는 신규사업안을 받아 들이지 않고, 친분 있는 인물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영입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말'의 의사 결정기구인 민언협이 내부의 의견 차이로 둘로 나뉘어지면서 새로운 민언협을 만든 현 경영진과 기존 민언협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직원들 사이의갈등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번 사태도 노조측은 월간 '말'을 살리겠다는 직원들의 뜻을 경영진이 뚜렷한 이유없이 해사행위로 간주하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노조측은 월간 '말' 지 사태가 "불법이사들이 연합지도 부를 자처하고 나서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며 '말'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며 " '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희룡 예방교육 비디오 나와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가해자의 약 20%가 직장상사나 동료인 것으로 나타나 등 직장내 성폭력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성폭력상담소는 "직장내 성희롱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남녀가 동등한 동료로써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비디오를 제작했다"며 직장인과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추천했다.

이 비디오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여 실제 사례를 엮은 드라마와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성희롱을 목인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파나비전이 제작한 이 비디오는 1만8천원에 판매한다. 연락처는 576-7128.

구독료는 지로이용
7618848

NGO한국위원회보고서

여성과 사회개발

한국형 개발모델과 여성의 지위

<편집자주>인권하루소식은 오는 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를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한국은 최근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그러나 만일 한국형경제개발 모델을 추진하려는 국가가 있다면 그들은 먼저 자신의 회생을 기꺼이 감수할 양질의 여성노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감소·정체되고 있으나 여성 참여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자의존적 수출산업 중심의 경제개발에서 한국의 대표적 수출 산업인 의류, 신발, 봉제, 전자산업의 노동자는 대부분 저임금의 미혼여성이었다.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 쌀수입 개방 등의 상황으로 전체농업 인구는 절대적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해 농업노동의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장 우선 정책은 분배와 복지정책을 외면하였으며

사회적 노동에서의 각종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노동 밖의 실업, 복지, 환경, 소비, 주택, 보건의 집이 주로 여성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60년대의 빈곤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의 양적 지표만큼 여성에게 물질적·정신적 풍요와 안정된 삶,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1세기를 위한 행동> 이같이 개발과정에서 희생당한 여성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국가발전 계획에 여성개발부분을 포함시켜 중장기적인 여성발전계획을 수립 △산업별,

직업별로 나타나는 성별 직업분리 체계를 완화시켜 남녀 각자의 능력과 개인적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지급을 평가하는 제도마련 △결혼, 임신, 출산 등 여성만의 특수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고용안정 확보 △남녀를 불분하고 1년의 유급육아휴직제 실시 △직업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리, 감독, 치료, 보상의 확대 △파트타임, 가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혜택의 체계화 △지역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확대와 국가지원 중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추방 △각종 교육의 평등한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

통계청은 18일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을 발표하여 인구노동,산업생산등 각분야를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 분석 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의 주요내용인 노동, 사회보장, 의료, 교육등의 지표를 통해 한국의 인권지수를 매겨 보았다.

- <노동>
 - 계조업 주당 평균노동시간 49시간(92년)으로 세계 최대.
 - 노동재해를 노동자 10만명당 19명으로 세계3위 (1위 요르단 4백58.5명, 2위 체코 30.5명).
- <의료/보건>
 - 의사비율 인구10만명당 1백11명 (이탈리아 4백75명, 스웨덴 2백53명, 캐나다 2백24명, 일본 1백75명).
 - 총 정부지출 대비 보건비 지출은 0.9%(미국 16.0%, 호주 12.7%, 독일 18.1%, 아일랜드 13.0%, 영국 13.9%).
 - 간암 사망률 남녀 각각 세계1위.
- <사회보장>
 - 중앙정부의 세출구성 중 사회보장 및 복지비는 9.3% (미국 28.5%, 캐나다 35.1%, 뉴질랜드 39.6%, 독일 48.5%, 스웨덴 50.7%, 영국 33.1%).
- <교육>
 - 초등교육기관 교사1인당 학생수 31명 (미국 15명, 프랑스 16명, 말레이시아 20명, 대만 25명, 타이 17명).
 -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여학생 취학비율 35% (구서독 41%, 프랑스 54%, 일본 40%).
 - GNP대비 총 교육비지출 4.4% (미국 5.3%, 일본 4.7%, 스웨덴 8.8%, 대만 5.7%, 말레이시아 5.5%).
 - 총 정부지출대비 교육비 지출 14.8%(미국 12.3%, 덴마크 11.8%, 일본 16.5%, 대만 17.1%, 말레이시아 16.9%).
- <환경>
 - 이산화탄소 방출량 세계14위.

함께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는 인권전문센터로 함께 연구하고 인권현장에 가까워질 젊은 활동가를 찾습니다.

- <모집대상> 인권자료실원, 하루소식 기자, 국제연대담당자 약간명
- <제출기한과 서류> 9월10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의견서(A4용지 2매) 인권단체나 인권관련사업 종사자 추천서(가능한 경우)
- <결과통보> 면접 이후 개별통지
- 문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02-715-9185)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불치병>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의 미수 다.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지난 21일 일어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이하 기술학원) 기숙사 방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정부의 무관심과 시설장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직업교육이나 재활,요양,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타 폭행등 끊임없는 인권침해 온상**

먼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의 소홀과 시설장과의 유착을 들 수 있다. 국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감사가 필수적으로 따른다. 문제는 입소자비리지원방식의 국고보조와 감사의 형식성에 있다. 사회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경비가 모두 국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학원생들의 머리가 곧 운영자금으로 환산된다. 또한 정부의 보조금 역시 '입소자비리지원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시설의 대규모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학원은 62년 윤락여성의 교육을 위해 세워진 재활학교이다. 66년 여성의 직업교육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여자기술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8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다. 이 시설의 설치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두 법에 따르면 기술학원은 직업보도,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한다는 목적이 무색하게 이 시설은 자물쇠에 잠기고 화마에 일그러진 흉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관련시설이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폐쇄성의

제인 「시설문제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그 이유를 대변해 주는 발언이 있다. "시설장들이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1년에 2번정도 형식적인 감사에 나간다."

한 일선공무원의 증언이다. 한 보육사는 "감사오기 전에 미리 일정을 통보하고, 감사 나와서는 운영진과 몇마디 나누고만 간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김국도씨는 '법 인운영과 사회복지시설 관리'란 논문에서 "시설과 공적자간의 이중적 부조리"라고 밝히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와 돈벌이에만 급급한 시설장과의 유착관계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덮어두고 방치하게 만드는 첫째 요인이다.

시설에 대한 거부감마저 들게, 이런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좋을 리가 없다.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가 93년에 행한 '사회복지시설 주변 주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은 나쁘다',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는 반응이 절반이 넘는다. 또한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 동네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교육상의 문제와 지역위화감을 들고 있다. 시설에 대한 일반의 거

부감은 시설문제를 더욱더 음지로 몰아가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한 시설의 폐쇄성은 언론이나 관련전문가, 민간단체의 접근을 막고 있다. 감추기를 고집하고, 알려 하지 않는 환경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터져 나올 경우에 대응책은 항상 주변을 맴돌 뿐이다.

시설의 공개만이 해결책

그러므로, 시설의 공개성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하나의 바람직한 현상을 들자면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원에서 강제노역 구타등 잦은 인권침해 시비가 일자 수용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의 정기적 공개 △시설운영에 환자보호자는 물론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민간감시체계 구축"등을 빼대로 하는 '95년도 정신보건사업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한 보건소장에게 요양시설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대규모 시설을 점차 소규모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들과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시설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을 비롯 전문가, 언론과 시민단체에 시설을 공개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NGO 전국위원회 보고서

여성과 교육

“노동생산성에서 보편적 권리로”

<편집자주> 8월 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 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 연재물입니다.

교육의 역할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시된다. 하나는 교육이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로운 사회조성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역할은 직업기회의 확대로 계급간, 남녀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역할과 맥을 같이 하는 여성교육을 살펴보자. 현대에 들어서 여성이 문명에서 깨어나고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은 국가의 인구질과 자녀양육, 가족의 건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은 더 이상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힘이다.

특히 여성이 교육에서 동등한 접근기회를 갖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남녀간의 동등한 관계형성과 여성의 잠재력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러한 교육은 결과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인류사회 전체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진출기회가 제한되며 고용이 기피되고 있다.

<21세기 행동전략>

△교육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 특히 학교운영과 교육자치단체 결정과정에 참여 확대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성역할을 재인식시키는 적극적, 구체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평생교육과 교과서 편찬연구, 이를 뒷받침할 정책·제도 마련, 바람직한 성역할 인식을 위한 성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진로교육을 강화해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여성들이 과학·기술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진로결정의 폭을 넓히

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직업훈련 분야를 다양화하여 여성 고용기회의 증진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 활용해야 한다.

△여성의 고용 및 승진기회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철폐하고 여성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기업내 여성 교육기회를 늘려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다.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지난 10년간 상당한 정도의 양적 팽창을 보여왔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 성역할을 답습하게 하는 교육, 취미·교양 교육에 치중되어 왔다. 다양한 영역, 다양한 형태의 취업이 가능하게 될 2천년대에 대비하여 교육에 새로운 직종을 포함시키고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취업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런 평생교육은 지식산업의 증대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맞춘 재교육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다음에는 「여성과 성폭력」이 이어집니다.

보건의료단체, 특별법제정 서명운동 벌여

보건의료단체인 「건약, 「건치, 「인의협, 「노동과 건강연구회, 「기독교청년회인회, 「전국병원노련, 「청년한의사회」는 지난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주 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21일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성공한 내란’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광주 특별법제정을 위해 지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살자들이 법정에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삼청진상규명투쟁위 진상규명 재차 요구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위원장 서영수)는 22일 삼청교육사건 고소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자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면죄부 결정은 국민들과 피해당사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모호한 것으로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가 밝힌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삼청교육학살의 사건 계획 및 실시배경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정확한 숫자와 원인 △일상적인 폭력과 총기사건의 실상 △삼청교육관련 기록폐기 진상 △행방불명 및 무호적자에 대한 진상 △순화교육-근로봉사-간호 조치라는 단계적 변화의 배경과 선별과정 및 그 기준 △7천5백57명을 강제수용한 당시 국방부와 법무부의 책임소재 규명 등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성교육 강좌 열어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9월 21일-10월 13일에 걸쳐 매주 목·금요일 7시30분-9시30분에 종로성당에서 ‘남녀가 함께 배우는 성과 사랑’을 제목으로 강연회를 갖는다. 여성의 전화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을 재조명하고자 교육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이 끝난후 원하는 사람들은 후속교육을 거쳐 상담원으로 문의처 269-2962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
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등 국회청원

5.18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적인 최대 규모로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22일까지 78개 대학 3천5백60명 교수들은 5.18관련 서명 및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어 24일 ‘5.18내란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서명 교수 결의대회’를 여성백인회

주최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관련기사 2면 참조). 특히, 범국민적으로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큰 의의를 지닌다. 한편, 이들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교수들은 △5.18관련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취소 △12.12군사 쿠데타 재조사 △5.18관련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의했고 ‘광주 민

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관련기사 2면 참조). 특히, 범국민적으로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큰 의의를 지닌다. 한편, 이들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행동은 86, 87년에 전례가 있으나 24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교수들이 서명과 성명에 동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해방 이후 최대 숫자”라고 말했다. 또한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기반을 중심으로 토론회, 지역사회 강연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용 의원은 “교수들의 행동은 5.18 진상규명의 회망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국회는 청원을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때늦은 남한조선노동당사건 파문 서울시경, 국보법으로 10명 구속

서울경찰청은 지난 92년 대규모 반국가단체로 발표되었던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 와 관련하여 이범준(32)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 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15명을 집과 출근길에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23일 이들을 면회한 김진국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지 않았던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연행했고, 따라서 조사내용도 과거의 활동에 대한 확인 정도”라고 말했다. 또, 구속자가족들은

“경찰은 이들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후원사업, 모금, 광고등의 활동을 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순(시그네틱스 노동자)씨 등 5명은 23일 훈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 명단>
이범준(32, 인천대 졸) 신원철(33, 인천대 졸) 이정수(29, 서울대 졸) 한미선(32, 고려대 졸) 김서태(32, 서울시립대 졸) 정은주(28, 충신대 졸) 국승용(28, 서울대 졸) 김미정(인천대 졸) 이철주(31, 인천대 졸) 권성기(28, 고려대 졸)

이날 행사장에는 부산, 전북, 광주, 충남등 전국에서 올라온 김상기(대구대), 조홍식(서울대)등 2백여명의 교수와 1백여명의 5.18관련 단체 회원, 사회단체, 취재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장에서부터 여의도 장기신용금융까지 1km 거리를 행진하였다.

그동안 5.18과 관련해 서명과 성명을 발표한 교수는 7월 31일 고려대 교수 1백31명, 남 민교협, 4일 경북대 교수 96명, 5일 인천경기지역교수 1백8명, 7일 의대교수 1백6명, 10일 경상대 교수 1백35명으로 확대, 22일까지 78개대 3천5백60명에 이른다. 또한 민교협은 14일-16일까지 2박3일간 민교협 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복송 장기수문제 남북불교도 논의 제안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스님 등)는 23일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접수, 비전향 출소 장기수 김영태, 함세환, 김인서 씨의 복송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판문점에서 실무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진관스님은 “당국이 이를 허가하는대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호 대선사에게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은 지난 1월 비전향 장기수 3인의 복송을 위해 노력하는 불교인권위원회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바 있으며, 이후에도 몇차례 불교계 인사의 방북을 초청한 적이 있다.

한중노조 쟁의타결

회사측의 불성실교섭로 인해 부분·전면 파업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회사 본관 점거농성을 전개하던 「한국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는 23일 오후 극적으로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시작으로 3일 광주전남 민교협, 4일 경북대 교수 1백31명, 5일 인천경기지역교수 1백8명, 7일 의대교수 1백6명, 10일 경상대 교수 1백35명으로 확대, 22일까지 78개대 3천5백60명에 이른다. 또한 민교협은 14일-16일까지 2박3일간 민교협 사무실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그 배경과 경과, 진압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범치사회를 확립하는 한편 한국 현대사의 오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일 것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 국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및 자료의 조사를 위해서는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나 자료 요구등은 필수적이므로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공소시효 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것,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입법으로써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한다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은 물론 기존의 범조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변호사단체, 즉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를 이용하십시오!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효과 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시효 제도는 헌법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나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나타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반헌법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헌법 본

래적인 명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급입법이라는 오해는 불식될 수 있다.

이처럼 공소시효의 적용이 애초부터 배제되는 범죄로서 먼저 헌법질서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는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죄, 제2장의 외환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반란죄, 제2장의 이적의 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는 국제인권장전의 규정들에 비추어 고문이나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NGO위원회 보고서 3회 본은 기사 넘쳐 미롭니다>

● 행사안내 ●

□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촉구대회

· 일시:25일(금) 오후1시/· 장소:서울역 광장
· 주최: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사건대책협의회(☎ 708-4181)

□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위한 제2차 준비 심포지움

· 일시:25일(금) 오후2시/· 장소:한국여성개발원
· 행사내용:분과 보고서 발표/한국여성NGO 활동계획발표 등
· 주최:한국여성NGO위원회(☎ 423-5355)

□ 법회-생명존중과 불교의 역할

· 일시:26일(토) 오전10시
· 장소:인권법당 갈상사(☎ 734-6401)
· 내용:기도법사-진관/특별강연-윤희보(출소 장기수)

□ 한일장애인고류대회

· 일시:28일-31일/· 장소: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 참가비:5만원
· 내용:장애인의 실태와 전망/장애인 정책비교/장애인 운동 경험공유 등
· 주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토론회-한국의 기독교기업, 얼마나 기독교적인가?

· 일시:31일(목) 오후3시 /· 장소:기독교회관 2층강당
· 발제:이랜드 신화적 성장과 노동자 권리(이랜드 노조)/이랜드의 성공비결과 경영이념(이랜드)
· 주최:이랜드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323-0456)

□ 제1회 여성심리 심화교육

· 일시:9월11일-26일 주2회 오후7시
· 장소:서울역 대우빌딩 11층/· 참가비:4만원
· 내용:여성심리학의 주요개념들(지은희)/여성과 남성의 에로티시즘의 차이(윤양현)/임상사례를 통해 본 여성심리(이근덕) 등
· 주최:한국여성사회교육원(☎ 266-0467)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려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대대적인 검거선봉 조집
서울시경 또 13명 연행 조사중

서울시경찰청이 과거 운동권 학생 출신들을 계속 대대적으로 연행하고 있어 다시 검거선봉이 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경찰청은 24일과 25일 아침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생등 13명을 연행하여 조사중이다. 경찰이 이들을 연행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홍제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하여 25일자에 보도된 구속자 외에 고려대 졸업생 조재진(28), 현준우(29)씨가 추가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함께 구속된 조재진씨와 권성기씨는 부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연행자 15명중 12명이 구속되었으며, 3명은 훈방되었다.

25일 오후8시까지 파악된 연행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미선(24, 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박중구(24, 성균관대 대학원생), 박상현(24, 서울대 경제학과 졸, 학원강사), 김종철(24, 서울대 경제학과 졸, 방위산업체 근무중), 박두한(23,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중), 홍석만(25,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 송유나(25,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 학원강사), 전호선(24, 숭실대 전자공학과), 이재훈(24, 고려대 무역학과), 김준수(고려대 사회학과, 군복무중)

매대출여성복지대책 촉구 기술학원사건대책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사건대책협의회」 회원 30여명은 25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번 화재참사는 "정부의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 여성들을 불모로 수감하다시피 한 기술학원 측의 왜곡된 관리와 정부의 무책임"으로 일어났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즉각 개정할 것 △경찰, 포주, 공무원, 기술원 관계자가 결탁된 각종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 △기술원 등 직업보도 시설의 전면적인 감사 실시 △매춘 여성과 가솔수녀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후 2시30분경 과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다.

군의원사 허원근씨 사건 고충처리위, 재조사 촉구

80년대의 술한 군의원사 사건 중 하나인 허원근씨 사건의 진상규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22일 회의에서 84년 군의원사사 사망한 허원근씨 사건에 대한 2차 심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광일 위원장은 "M16 소총으로 이런 모습으로 자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국방부 조사관 김석규씨도 "허씨의 죽음은 조사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군이 한번 조사를 끝낸 사건에 대해서 뒤집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 사건만은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군 검찰관은 이 자리에 재판과 겹쳤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대대적인 검거선봉 조집
서울시경 또 13명 연행 조사중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25일에도 5.18 광주학살 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정)와 「실천불교전국 승가회」(공동의장 지선) 소속 자모임, 소속 경북대 김상기 교수등 6명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헌법은 검찰에 대해 누구도 예외없이 내란 혐의가 있을 경우 소추, 단죄할 것을 명하고 있다" "국민주권적 헌법 질서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

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정)와 「실천불교전국 승가회」(공동의장 지선) 소속 자모임, 소속 경북대 김상기 교수등 6명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헌법은 검찰에 대해 누구도 예외없이 내란 혐의가 있을 경우 소추, 단죄할 것을 명하고 있다" "국민주권적 헌법 질서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

다. 허원근(당시 22세)씨는 부산수산전문대 재학중 입대, 전방 GOP부대에서 중대장 전령병으로 근무중 84년 4월 2일 유류고 옆에서 이마와 양쪽 가슴에 총상을 입고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실탄수의 문제, 총성이 들린 장소와 시간등의 조각여부등의 의혹이 있었으나, 군헌병대는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허원근씨의 부친 허영춘씨는 이런 군부대의 조사결과를 거부하고, 사체인수를 거부해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는 10월13일 군검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심리를 갖기로 했다.

95년 8월호 203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편집자주> 오는 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 여성보고서 연재물입니다.

남녀불평등 사회에서 성역할은 여성의 인권을 박탈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구조화된다. 이러한 성역할은 여성을 폭력,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때부터 조기 성교육을 실시해 여성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와 직장에서의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는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대부분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는 식의 집단문제론으로 치부해버리거나 피해여성들을 오히려 의심하거나 모독한다. 이런 사법처리관계자의 남성중심적 태도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올바른 사법처리를 위한 관계자들의 교육과 재교육이 시급하다. 따라서 사법처리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되어야 하고, 경찰과 사법연수 교육내용에 성폭력과 여성인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격리·치료·보호하고 이혼시 여성의 재산분할권의 행사, 피해보상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많은 피해여성들은 이러한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속 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정신적·신체적 회복과 상담을 할 수 있는 피난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복지차원에서 피난처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매춘여성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들 여성의 문제를 상담하고, 전업을 도울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 NGO(민간단체) 어떤 활동 하나

세계여성 NGO포럼은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리는 북경에서 약 53km 떨어진 화이러우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참가신청자는 3만6천명이고, 하루에 5백여개의 행사가 열리는 세계여성의 잔치이다. 8월30일에서 9월 4일까지 열리는 이 포럼에 우리나라에선 1백여 여성관련단체, 총 7백명이 참석한다.

한국 여성단체들은 93년 3월, '한국여성NGO위원회'(NGO위원회)를 결성해 NGO포럼을 준비해 왔다. NGO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과 심포지엄을 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돼 일본, 필리핀등 아태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국과 함께 준비한 이 심포지엄의 주제는 '전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알제리, 방글라데시 등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중 집단폭력을 중심으로 UN과 인권관련전문가, 국제법률가들이 참석해 문제해결을 논의한다. NGO위원회는 이 심포지엄과 함께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 계획이다.

또한 NGO위원회는 정치세력화, 여성폭력, 개발, 환경, 평화등 11과 분과별 포럼에 참가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NGO위원회는 이번 행사장에 NGO위원회, 정대협, 환경등 3개부스를 설치하고 관련 사진과 홍보물을 전시한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이미경씨등 민간단체 대표 4명이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북경세계여성대회 본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정식재판 도중 법정구속 LG그룹 해고자 2명

서울남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한주) 재판부는 25일 오후2시, LG 그룹 해고자 업무방해 전에 대한 재판을 열고, LG그룹 해고자 2명을 법정구속시켰다.

LG해고노동자들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14일까지 여의도 LG 그룹 본사 앞에서 텐트 농성을 하여 회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다. 박원주, 이동열, 성한기, 김순임, 김진 등 해고자 5명은 5월31일 열린 형사 1부 재판에서 벌금 1백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7월21일 열린 1차 심리에는 이들 모두가 불참하였고, 25일 열린 심리에는 수감중인 이동열씨와 고향에 내려간 김순임, 김진씨가 불참하여 박원주, 성한기씨만이 참석하였다. 재판부는 김순임씨 등에 대해서도 강제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속시킬 방침이다.

대구노련의장 3자개입 구속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회'의 장 박용선(32)씨가 24일 오전7시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연행, 구속되어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구 동업정밀과 영남대의료원 파업, 고 양봉수씨 장례식 등과 관련 제3자개입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료를 이용하십시오!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료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발가벗긴 채 또 고문

성동경찰서, 차별단속 항의 노점상 구속

지난 26일 폭력철거에 항의하던 노점상이 성동경찰서에 연행된 후 발가벗기워진 채 장시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구속된 '장애인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위원장 양연수, 장자추) 회원 5명이 '노점상 차별단속'과 '부당구속'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자 이들을 집단폭행하고,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영생(26, 전노련 영등포지구 사무차장)씨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속적인 의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고, 강제로 입에 재갈이 물렸고, 팬티를 제외하고 모든 옷이 벗겨졌다. 면회한 이들에 의하면 심지어 면회장에게까지 박씨는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나왔고, 온몸이 푸른 멍투성이였다고 전했다. 박씨는 뒷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빨과 팔목 등에

부상을 당해 이에 대한 치료를 경찰서측에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씨는 흥경인(40, 전노련 중구 지구 사무국장)씨와 함께 3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장자추 소속 노점상 13명은 지난 26일 오전10시경 청계8가에서 노점을 시작하려 했으나, 경찰과 구청측에서 나와 장사를 못하고 대기중이었다고 한다. 오전 11시경 소위 '뺨다반'(토,일요일만 자리를 빌려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몰려들어 이들을 폭행하고, 집기와 물건을 부수었다. 장자추 회원들은 경찰에 이를 말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목살당했다. 이에 도로에서 폭력 중단과 차별단속 중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자, 즉각 경찰은 13명 전원을 연행, 이들을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동경찰서측은 이들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장실문등을 부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자 명단>

① 주요공판안내 ①

<29일>(화)
김기용, 오전10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민사지법 559호 문국진, 오전10시,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소송, 서울고법406호
<30일>(수)
황인성, 오후4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 319호 신광수의1인, 오전11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1부, 418호
<9월1일>(금)
문순덕, 오전10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311호

홍경인, 박영생, 김종상, 박관영(장애인), 박명규

레이니 주한미대사 반미감정 발언 사과요구

레이니 주한미대사가 24일 뉴욕타임즈 인터뷰 기사에서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이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의한 것'이라고 한 내용이 알려지자, '주한미군법령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회'(전국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를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주한미군 병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일고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한국인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이전설을 위한 운동본부"라며 "5월과 6월에 걸쳐 자행되었던 미군의 연쇄적인 범죄 이후에도 7월28일 평택에서 미군의

난폭운전으로 고등학생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하는 등 미군범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무례한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한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80년대초에도 위کم한미연합사랑방이 '한국국민은 쥐새끼들'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백산서당 직원 구속

서울시경은 27일 정순구(27, 인천대 졸, 현 백산서당 직원)씨를 집에서 연행 조사중이다. 정씨는 앞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잡습니다.>
26일자 'LG 그룹 해고자 2명 법정구속기사'중 1차 심리에 'LG 해고자 5명 전원이 출석'하였고, '그룹측의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였기에 바로잡습니다.

함께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는 인권전문선대로 함께 연구하고 인권현장에 가까와질 젊은 활동가를 찾습니다.

- <모집대상> 인권자료실원, 하루소식 기자, 국제연대담당자 약간명
- <제출기한과 서류> 9월10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의견서(A4용지 2매) 인권단체나 인권관련사업 종사자 추천서(가능한 경우)
- <결과통보> 면접 이후 개별통지
- 문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02-715-9185)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마지막회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한국사회에는 약4백만여 명의 장애인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고 소외당하고 있다. 이중 약 3백만 가량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사회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교육정책인 특수교육진흥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장애인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에 관한 법 혹은 타법을 어디에도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조항은 단 한건도 없어 여성장애인의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비단 정부 뿐만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그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낙후된 인식과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더구나 기본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와는 달리 여성계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여성운동만을 주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여성운동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제 여성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을 '장애'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다른 여성보다 더욱 열악한 사회 환경에 처해 있는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장애인에게서조차 그동안의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던 점은 크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한국사에서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다가 장애인에게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운동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을 장애인계층 일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여성문제에서도 소외되어 그 현실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21세기 행동전략>

-정부는 유엔이 채택한 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한다.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심의하는 기준을 만든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의무화 되어 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철폐하고, 이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도 시설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특별히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방지를 위한 전문가를 관련 기관 내에 둔다.

-장애아를 양육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주/간/인/권/호/름

(1995년 8월 21일 - 27일)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원생들, 집단탈출 위해 방화 38명 사망, 15명 부상/건차, 건차, 인의협등 검찰의 5.18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 발표/서울시의회, 5.18기소 촉구 결의

<22일>
서울지검형사4부, 삼청교육대피해자등지회가 전두환씨등을 살인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서울경찰청,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애국동맹 산하5.1 위원회'와 관련 이범준씨등 12명 국보법으로 구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에 대한 2차 심리 가져

<23일>
삼청교육대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삼청교육에 대해 검찰의 개조사 요구/불교인권위원회, 비전향 출소장기수 복송논의 조선훈교도연맹과 실무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삼풍백화점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소속 유가족 거리 시위/전주대 1백3명, 제주대 45명,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성명 발표, 특별법-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24일>
5.18대안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위한 전국 서명 교수 결의대회 가져/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과피죄 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국회청원/서울시경, 박상현씨등 13명 연행/대구지방노동부, 박용선 대구노련 의장, 3자개입으로 구속/서울경찰청, 전서충련 의장 조중욱씨 구속

<25일>
전국대학서명교수대표자 모임, 헌법재판소에 5.18관련 의견서 제출/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승려 4백71명, 5.18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대구대 교수 1백22명, 양민학살 범죄에 대한 심판을 내릴것을 촉구/경기도 여자기술학원사건대책협의회,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촉구대회'가져/비전향 출소 장기수 교운기념제 장례식과 관련 국보법으로 구속된 기세문씨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선고/서울남부지원 형사4단독, LG그룹 해고자 정식재판 도중 해고자 법정 구속

<26일>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언론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등 내부영업정보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할 사적영역으로 알권리보다 사생활이 우선"이라고 판결

<해설>

역수로 쏟아진 비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천재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 주목해 볼 일이다.

지난주에는 우리사회의 복지시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건은 우리 복지시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다시 수사당국은 화재주동자들에게는 엄하고, 학원관계자와 비리관련 혐의자들에게는 여전히 물러터지지만 했다. 이래서는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자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내 최초 '인권교육' 필수과목으로 성공회대, 인권운동가로 강사진 꾸려

'성공회대학교'(총장 이재정)는 이번 2학기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인권강좌 '인권과 평화'(담당교수: 문진영)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 개설하였다.

성공회대측은 이 과목의 개설 목적을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지구화' 시대, '탈냉전' 시대의 보편적인 덕목으로서 인권과 평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굴, 교육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다는 실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학생 개개인이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다.

지난 26일 성공경찰서에 연행, 구속된 박영생(26, 전국노점상연합회 영등포지구 사무차장)씨가 옷이 벗겨진 채 구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강제로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묶인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변호사 접견에서 밝혀졌다.

한편,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은 29일 오후 박씨를 성공경찰서로 찾아가 직접 치료했다.

한편, 노점상들은 지난 26일 사건 직후 약 5-6명이 성공경찰서에서 밤샘농성하면서, '차별적인 노점상 단

속 중단'과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성동서측은 이들에게 차별적인 노점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곧 성동경찰서 측에 항의방문단을 보내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애노점상 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측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은 앵벌이등의 구걸적인 삶으로 돌아가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분노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구속자 명단>
박영생, 홍정희, 박광혁(장애인), 김종상, 박명규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란?>

구걸의 삶 거부, 삶 스스로 개척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위원장 양연수, 장자추)는 지난 4월 분신사망한 장애 노점상 최정환씨의 장례 이후 장애인들의 자활 노력의 결실체다. 양연수씨는 "지난 5월 초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장애인인권가족협회」, 「전국노점상연합회」 등의 3개 단체에서 장애노점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구걸적인 삶을 청산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보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자추는 결성식을 마친 후 인천 연수지구 아암동(송도 근처)지역부터 터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인천지역에서 약 2달간의 활동으로 장애노점상들의 노점 터를 잡은 이들은 8월초부터 서울지역의 청계8가 지역에서부터 다시 뿌리내리기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인천지역 아암동에 60여명, 서울 20명 등 1백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속 지방으로 조직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들 장애인들은 특별한 직업 없이 앵벌이, 시장에서 구두닦이 등으로 생계를 이으며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이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선 데는 기존의 150여개 장애인 단체들이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힘을 쏟지 못한 이유도 컸다.

장자추는 결성 취지문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생계비 명목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4백만 장애인중 고작 12만명 정도이고, 3백인 이상 사업장 2% 의무고용 조항은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취업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공공시설 가판대 역시 그림의 떡"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노점을 하라 절망적인 삶에 대해 분신으로 절규한 증정영씨 장애인 '최정환' 열사의 뜻을 이어, 돈없고 힘없는 이땅의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결성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이들 장애 노점상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길은 모두 지켜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로를 이용하십시오!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대학 4천1백명 참가

백낙청(영문과), 강희익(물리학과) 등 서울대 교수 2백21명은 29일 서울대 교우회관에서 검찰의 5.18관련 불기소처분에 관한 견해를 발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게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대교수들은 “검찰의 결정은 엄청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묵인할 경우 우리 민족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리라는 생각에서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은 △5.18 관련 불기소 처분 취소 △

민앞에 사과 △특별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주장했다.

이번의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 발표로 지난달 31일 고려대 교수들 1백31명이 5.18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한 이래 29일까지 48개 대학 4천1백여 명이 성명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또, 서울대 교수들의 이날 성명발표에 참여한 교수수는 지난 87년 4.13호 현조치에 항의서명한 교수들의 두배에 이르고 전체 서울대 교수의 18%에 해당하는 숫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일 장애인 삶의 질 현저히 낮아

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본장애인전국공동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일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28-31일, 나흘동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한일장애인 국제교류대회를 갖는다.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씨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화해의 장을 여는 의미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한·일 양국의 경험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교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9일 이들은 ‘장애인과 사회통합’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운동 스킴과 교육 △사회 환경 등의 상황을 토론했다.

토론에서 한·일장애인의 고용상태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일반고용 전체 장애인의 0.44%이고 일본의 경우 관공서 2.0%, 민간기업 1.6%로 대기업일수록

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고용된 장애인들도 단순생산직 근무가 대부분이고 월 급여 수준도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취학률은 한국의 경우 의무교육인 국민학교 진학이 19.7%, 중학교 진학은 11.97%에 그치고 있다. 또한 97%에 이르는 29만명의 장애아동들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교육과 직업재활교육은 전무하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9년의 의무교육후에는 치열한 고교입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선별, 격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소주제별 분반 토론을 통해 한·일 장애인 사회로부터 격리, 분리되어 있고 이것은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일이

라고 공유하였다. 토론의 결과를 모아 31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류대회에는 일본장애인 2백여명, 한국장애인 1백여명 등 총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적단체구성 10명 구속

서울시경은 26일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한 13명중 박상현(24)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고무찬양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5,6명을 같은 혐의로 찾고 있으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학생운동권 중 PD 계열에 속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일 연행된 이들 중 김중철(24)씨 등은 불구속으로 석방되었다.<인권하루소식> 8월26일자 참조.

다음은 구속자 명단이다. 서울대 출신-박상현, 홍석만(25), 박두한(23)/성신여대-김미선(24, 현 총학생회장)/숭실대-전호선(24)/고려대-이재훈(24), 김준수(군복무중)/이화여대-송유나(25), 한수진(25)/성균관대-박종구(24)

『자생의 정열』 출간 서준식씨 일어책

서준식(47,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장기수로 수감중인 85년부터 최근까지 인권에 관해 기고한 글들을 묶은 『자생의 정열-한국의 정치수에서 인권운동가로- (自生の情熱-韓國の政治囚から人權運動家へ)』이 일본 동경의 영서방(影書房)에서 일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인권 운동에 전념하기까지 출옥 이후 민가협 장기수가죽협 의회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느꼈던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유서사건등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작 17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번역은 서씨의 석방운동을 줄곧 진행해왔던 니시무라 마고토(47, 西村 誠, 나가노현 단기대학 철학과 조교수)씨의 정성을 들인 번역으로 이루어졌다. 니시무라씨는 서씨의 석방운동과정 중에 한글을 모두 깨쳐 국어로 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일본인이다.

기사재보는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컴퓨터 통신 rights(하이텔, 천리안) 인권사랑(나우링)

함께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힘쓰는 인권전문센터로 함께 연구하고 인권현장에 가까와질 젊은 활동가를 찾습니다.

- <모집대상> 인권자료실원, 하루소식 기자, 국제연대담당자 약간명
- <제출기한과 서류> 9월10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의견서(A4용지 2매) 인권단체나 인권관련사업 종사자 추천서(가능한 경우)
- <결과통보> 면접 이후 개별통지
- 문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02-715-9185)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불처벌>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을 범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 라. 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유엔 제노사이드조약 제3조>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재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지난 7월19일 검찰이 5.18 광주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8월15일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광주학살과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전국 대학교수들도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법률안으로 만들어 국회청원까지 하였다. 24일 「민중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김상곤등)는 광주특별법과 함께 국회에 「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청원했다. 이 법률안에는 대상 범죄로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고문이나 집단학살 등의 범죄를 적시하였다. 또, 위 범죄들에 대해서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행위 당시부터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안 작성에 중심적

인 역할을 한 박노현(방송대, 법학)교수는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헌법적 질서를 준수한다는 전제 위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지만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순변호사도 최근 발간된 「역사와 비평」(역사비평사) 가을호에 실린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라는 논문에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형태로 공소시효를 제거함으로써 지름길에는 대상 범죄로 내란죄와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고문이나 집단학살 등의 범죄를 적시하였다. 또, 위 범죄들에 대해서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범죄행위 당시부터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안 작성에 중심적

War Crimes against Humanity, 94년말 현재 39개국 가입)에 가입함으로써 시효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등을 들었다. 박변호사는 “독재정권에 의하여 벌어진 각종의 잔혹한 인권침해 역시 비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속하며, 이러한 ‘국제적 범죄’는 마땅히 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문, 살해, 강간, 약식처형, 불법구금 등 ‘인도에 대한 죄’와 ‘평화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이번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대개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도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시키는 등 공소시효를 절대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인권하루소식> 2월 28일자 참조).

박변호사는 논문의 끝부분에서 “과거의 야만스러운 범죄를 망각 속으로 쓸어넣고자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 통스런 역사는 그 국민들의 ‘집단적인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겨 된다”며 “조사와

처벌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조건들을 이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교육 워크샵 개최

ARRC(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 지역 자료센터)는 오는 9월 21-26일, 타일랜드 천부리(Chonburi)에 있는 ACFOD 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가 훈련을 위한 워크샵을 갖는다.

이 워크샵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교육가가 모여 그동안 ARRC가 개발한 일련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인권교육의 방법론과 커리큘럼의 채택은 의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조정,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둘러싼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염두에 두고 있다.

워크샵의 주요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철학, 인권교과와 기준, 인권침해, 여성과 인권, 대중교육과 그 촉진 등이며 홍콩, 일본 등에서 2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교육가 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참가할 수 있으며, 주최측에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기 지역과 조직의 인권교육의 과거, 현재와 유엔 인권교육 10년에 맞춰 계획된 미래 전망을 담은 간략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문의: 522-7284, 9월2일까지).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지료를 이용하십시오!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인권하루소식> 95년 8월분 총목차(455-476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8/1	455	1	5.18광주불기소 항의 집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돌입/ 박용길 장로 안기부 즉각 연행 조사중/ 시민청 의장 절도혐의로 구속
		2/3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①>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주간인권호름
8/2	456	1	장기수 캠페인-〈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①〉 1. 기획을 시작하며-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 경찰 원천봉쇄로 5.18 천막농성 연기
		2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해설>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 교육개혁 선언 징계 전교조 비난 성명
8/3	457	1	각계 1995인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7일부터 일주일간 캠페인 펼쳐/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고문인정 3명 무죄/ 여성시민단체 성희롱 항소심 규탄집회,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
		2	장기수 캠페인-〈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②〉 2. 초장기수-20년 넘게 고문·전향공작으로 짓밟혀
8/4	458	1	5.18 불기소 항의 확산, 광주 전남지역 교수, 작가회의 성명/ 고려대 교수들 성명-5.18 검찰 수사와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전국연합, 장기수·양심수 석방 촉구
		2	장기수 캠페인-〈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③〉 3. 재일동포관련 사건-조국을 찾아온 댓가가 '간첩'
8/5	459	1	국제엠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씨 건강악화 석방촉구/ 5.18공대위등 대검찰 제항고 기각에 대검찰청 항의방문/ 목동 철거민 생존권 쟁취결의대회/ 장의군씨 만기출소
		2-3	장기수 캠페인-〈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4. 일본관련 사건-조작간첩의 황금어장/ 인권간행물
8/8	460	1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캠페인 시작, 전국4백65명 양심수 무기단식/ 현장스케치-명동성당 하루 감옥 체험/ 주한미군 용산기지 인간띠이기 대회/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종단대행진 가져
		2	국제엠네스티 총회,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 주간인권호름
8/9	461	1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유서사건공대위, 항고이유서보충서 제출/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이틀째/ 5.18학살자 처벌주장, 한총련 단식 농성 돌입
		2	장기수 캠페인-〈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⑤〉 5. 남북어부 사건-오래 전 남북이 간첩으로 둔갑/ 외대교수 1백6명, 5.18성명 확산/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평화를 위한 노래 공모
8/10	462	1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1심 판결/ 법무부·대전교도소, 김선명씨 면회 불허/ 박창희 교수 공소사실 부인
		2	장기수 캠페인-〈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6. 행발불명되었던 가족-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김상원씨 사건 일지
8/11	463	1	민가협 목요집회 1백회, '양심수 없는 날' 그리며/ 부산지역 5백인, 국보법·양심수 석방 선언/ 8.15맞아 남북한 정부에 엠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2	장기수캠페인-〈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7.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8/12	464	1	8.15 50주년 대사면 김선명씨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기득권층만 대폭 혜택, 초장기수 24명 등 양심수 4백40여명 남아
		2	장기수 캠페인-〈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8. 기획을 마치며-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 반응

<인권하루소식> 95년 8월분 총목차(455-476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8/16	465	1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 출소, 한국 아직도 세계 최장기수의 나라
		2-3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엠네스티 한국지부, 한일인권세미나 개최/ 전남대, 목포대 등 교수들 5.18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 한국여성의 전화, 25기 여성상담원 교육/ 비전향장기수 3인 경력/ 5.3동의대 사건 윤창호씨 출소 소감
8/17	466	1	5.18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합법집회 경찰 난입 기자 등 30여명 부상/ 5.18부상후 사망자 유족, 전두환·노태우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
		2	장기수문제 해결 안돼, 8명 석방 불구 장기수 총65명 남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9기 장애우 대학 개최/ 5.18 유족의 목소리, 우리 아들을 두번씩이나 죽여
8/18	467	1	경찰 최루액 가스 살포, 대학생 30여 명 전신평화학생 고등/ 미국 의회 청문회 제출 보고서, 최루가스는 독가스가 잘못 표기된 것/ 성희롱 사건 우조교 대법원 상고
		2	5.18국민위 항의방문단, 서대문경찰서 불법감금/ 정대협, 일수상담화 비판, 법적 책임 요구/ 한통노조 간부 4명 집행유예선고/ 두밀리학교연대모임, 가족캠프 열어
8/22	468	1	방위비연대회의, 방위비12.5% 증액 반대, 방위비 삭감, 복지예산 증액 요구/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2백94명 전원 연행/ 일본문화원 화염병 시위 관련 학생 6명 집행유예
		2	서대문경찰서, 5.18시위 진압 항의 7명, 불법감금 뒤 경범죄등으로 즉심 회부/ 박현채씨 19일 사회장/ 5.18 책임자 지소촉구대회 경찰 진압현장 목격기-마치 그곳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인권간행물
8/22	469	1	검찰, 삼청교육대 관련 고소·고발에 "공소권 없음" 결정/ 5.18농성단 새로운공동투쟁 제안/ 전국연합 경찰폭력 규탄
		2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주간인권호름
8/23	470	1	진보인론 『말』 노조위원장 징계, 회사측 "월권행위는 징계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비디오 나와
		2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①-여성과 사회개발/ 통계청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
8/24	471	1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절실한 시설의 공개화
		2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②-여성과 교육/ 보건의료단체 5.18특별법 서명운동 벌여/ 삼청진상 규명투쟁위원회 진상규명 제차 요구/ 한국여성의 전화, 성교육 강좌 열어
8/25	472	1	교수들사상 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등 국회청원/ 서울시경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10명 구속/ 불교인권위원회, 북송 장기수 문제 논의차 남북불교도 논의 제안/ 한중노조 쟁의 타결
		2	자료-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적 범죄등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8/26	473	1	대대적인 검거선봉 조짐, 서울시경 또 13명 연행 조사중/ 5.18교수 서명,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사건대책협의회, 매매춘여성복지대책 촉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 의문사 허원근씨 사건 재조사 촉구
		2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③-여성과 폭력/ 북경여성대회 NGO민간단체 어떤 활동을 하나/ 기세문씨 집행유예 석방/ LG그룹 해고자 2명 정식재판 도중 법정 구속/ 대구노련 의장 3자 개입
8/29	474	1	성동경찰서 항의노점상 구속, 발가벗긴 채 고문/ 레이니 주한미대사 반미감정 발언 사과 요구/ 백산서당 직원 구속
		2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④-장애여성/ 주간인권호름
8/30	475	1	국내 최초 '인권교육' 필수과목으로, 성공회대 인권운동가로 강사진 꾸려/성동경찰서 구속 노점상 박영생씨 진료 받아/ 장애노점상추진위원회란?
		2	서울대 교수 2백21명 5.18 불기소 취소 서명/ 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한일 장애인의 삶의 질 현저히 낮아/ 서울시경 박상현씨등 10명 국보법으로 구속/ 서준식씨 『자생의 정열』 출간
8/31	476	1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ARRC, 인권교육 워크샵 개최
		2,3	<인권하루소식> 8월분(455호-476호) 목차